

보안 과제( ), 일반 과제( O ) / 공개( O ), 비공개( )

## 2025년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최종보고서

발간등록번호

11-1721000-100061-01

혁신정책 / 2025-015

# 민간 기술혁신 활성화 방안 기획 연구 최종보고서

2026. 4.

주관연구개발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 출 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민간 기술혁신 활성화 방안 기획 연구(연구개발 기간: 2025.5.20.~2026.4.30.)” 과제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6년 4월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주관연구책임자 : 정경진(연구위원)

참 여 연 구 원 : 손석호(선임연구위원)

이일환(연구위원)

김기봉(연구위원)

박종록(연구위원)

안지혜(연구위원)

유형정(연구위원)

주경원(부연구위원)

임상우(부연구위원)

이나래(선임전문관리원)

송혜영(연구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최종보고서 열람에 동의합니다.

최종보고서										보안등급	
										일반[ O ], 보안[ ]	
중앙행정기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명		사업명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전문기관명 (해당 시 작성)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공고번호		공모 제2025-396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번호						
기술 분류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SB1207 (과학기술)	90%	SB1102 (정책결정/집행)	5%	SB0899 (달리분류되지않는 행정관리)	5%				
	부처기술분류 (해당 시 작성)										
총괄연구개발명 (해당 시 작성)		국문	2025년도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영문	2023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Policy Support Project								
연구개발과제명		국문	민간 기술혁신 활성화 방안 기획 연구								
		영문	Planning and research on ways to activate private technological innovation								
주관연구개발기관		기관명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사업자등록번호		229-82-01678			
		주소	(27740) 충북 음성군 맹동면 원종로 1339			법인등록번호		110271-0004210			
연구책임자		성명	정경진			직위		연구위원			
		연락처	직장전화	043-750-2347			휴대전화		-		
			전자우편	kjjungi@kistep.re.kr			국가연구자번호		-		
연구개발기간		2025.5.20. - 2026.4.30. (12개월)									
연구개발비 (단위 : 천원)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지방자치단체    기타( )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73,300						73,300		73,300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해당 시 작성)		기관명	책임자	직위	휴대전화	전자우편	비고				
							역할	기관유형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											
연구개발담당자 실무담당자		성명	송혜영			직위		위촉연구원			
		연락처	직장전화	043-750-2762			휴대전화		-		
			전자우편	shy10@kistep.re.kr			국가연구자번호		-		

이 최종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4월 30일

연구책임자 : 정 경 진 (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귀하

## 〈 요약 서 〉

<b>사업명</b>		2025년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해당 시 작성)		
<b>내역사업명</b>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번호					
<b>기술 분류</b>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SB1207 (과학기술)	90%	SB1102 (정책결정/집행)	5%	SB0899 (달리분류되지않는 행정관리)	5%
	부처기술분류 (해당 시 작성)						
<b>총괄연구개발명</b> (해당 시 작성)							
<b>연구개발과제명</b>		민간 기술혁신 활성화 방안 기획 연구					
<b>전체 연구개발기간</b>		2025. 5. 20. - 2026. 4. 30. (12개월)					
<b>총 연구개발비</b>		총 73,300천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73,300천원,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천원, 지방자치단체 : 천원, 그 외 지원금 : 천원)					
<b>연구개발단계</b>		기초[ ] 응용[ ] 개발[ ] 기타(위 3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v]					
<b>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b>	<b>최종 목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범부처 정책·계획·제도 등의 정책 조정·심의를 지원하고 민간 기술혁신 추진전략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으로의 공공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 공공 R&amp;D 연구 성과의 관리 유통·활용을 활성화하고, 산학연 협력 등 관련 정책과의 연계성 강화</li> </ul> </li> <li>○ 민간 기술혁신 촉진과 육성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정책화 및 사업화를 위한 혁신생태계 플랫폼 조성</li> <li>○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간 투자활성화 지원 정책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파악하고 추진 방안과 체계 마련</li> </ul>					
	<b>전체 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개발부터 시장진출까지 전 과정에 걸친 유기적 지원으로 민간 R&amp;D 성과 창출을 위한 범부처 민간 기술혁신 전략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단계부터 기업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산·학·연 공동으로 사업화 지원, 기술 창업 지원 검토 등 맞춤형 성장지원 강화 방안 마련</li> </ul> </li> <li>○ 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기업 발굴·지원을 위한 심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하고, 혁신기술 보유자의 혁신기업의 창업·육성을 위한 지원플랫폼 구축 방안 마련</li> </ul>					
<b>연구개발성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신용평가(TCB)제도를 활용한 혁신기업 선정을 위한 심사제도 개선 방안 마련</li> <li>○ 기술신용평가(TCB) 정보를 활용한 기업의 R&amp;D 과제신청 시 행정 간소화 방안 마련</li> <li>○ 기술 보유자(교수, 연구자 등)의 성공적 창업을 위한 인수창업(ETA) 지원 정책방안 마련</li> <li>○ 범부처 인수창업(ETA) 지원 통합 플랫폼 구축 방안 마련</li> </ul>					
<b>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 및 혁신기업 R&amp;D과제 선정 시 심사제도에 반영하여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업 연구 행정 간소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li> <li>○ 기술신용평가(TCB) 정보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연계를 통한 민·관 정보 활용 체계 강화에 기여</li> <li>○ 기술 보유자의 성공적인 기술창업을 도모하고 혁신기업의 맞춤형 성장지원 강화에 도움이 되는 인수 창업(ETA) 지원 혁신창업 생태계 활성화 정책 및 범부처 플랫폼 구축 가능</li> </ul>					
<b>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여부 및 사유</b>		해당 없음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 건수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 시설· 장비	기술 요약 정보	소프트 웨어	표준	생명자원		화합물	신품종	
								생명 정보	생물 자원		정보	실물
세부 정량적 연구개발성과 건수	과학적 성과			사회적 성과								기타
	논문 게재	학술 회의 발표	보고서 원문	법령 반영	정책 활용	안건 상정	제도 개선	다른 연구에 활용	국제 협력	(정책) 홍보	포상· 수상	
국문핵심어 (5개 이내)	심사제도		기술신용평가		전주기 지원		인수창업		기술사업화			
영문핵심어 (5개 이내)	Evaluation System		Tech Credit Bureau		Full cycle support		Entrepreneurship Through Acquisition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 요약문

### 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 민간 R&D 혁신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R&D 투자 성과를 민간에 확산하는 한편, 민간이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의 마중물 역할 강화 필요
  - 특히, 전략기술 및 탄소중립 핵심기술 선정, 로드맵 수립과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결과가 민간으로 확산·활용될 수 있도록 민간 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전주기 지원을 위한 추진 전략 필요
- 신시장 선점, 주요 산업 분야 글로벌 우위 강화 측면에서 민간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범부처 정책 조정 및 지원체계 필요성 대두
  - 사업화 및 산업화의 핵심 주체인 민간의 필수적인 투자를 유도하여 국가 전략기술의 전략적 육성하고, 기업의 산업경쟁력 확보 필요
  - 민간의 연구개발에서 상품화까지 이어지는 사업화 경로에서의 분절된 정책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활성화 정책 지원 필요

###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내용

- 혁신기업 선정을 위한 심사제도 개선 방안
    - 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기업 발굴·지원을 위한 효과적인 심사제도 개선 방안 제안
      - 민간에서 활용하고 있는 기술신용평가(TCB)정보의 활용체계 제시, 연구과제 심사 시 객관성 확보와 평가위원의 전문성 강화 방안 검토
    - 혁신기업·일반기업의 국가연구개발 과제 신청 시 선정 시 기업의 연구행정 간소화 기여 방안 제안
      - 기술신용평가기관\*에서 보유중인 TCB보고서 연계를 위한 API연계 방안 제시
- \* 기술신용평가기관 : 한국기술신용평가, 나이스디앤비, 이크레더블, 한국평가데이터, NICE평가정보, SCI평가정보

▣ 범부처 통합 인수창업(ETA) 지원 플랫폼 구축 방안

- 국내외 인수창업 현황분석(정책·시장·사회·기술), 인수창업 지원 플랫폼 개념 정립 및 범위 설정
  - 주요국 인수창업(ETA) 정책 및 금융·교육·플랫폼 사례분석, 정책적 시사점 및 한국형 모델 도출
- 한국형 인수창업(ETA) 통합 데이터 기반 매칭체계 설계, 민관협력(PPP) 고도화 모델 제안
  - 공공·민간·사용자 데이터를 통합한 데이터 레이크 구축 방안 제시, AI 기반 매칭 및 가치 평가 지원 시스템 설계
  - 디지털 기반 거래 안전망(법률·실사·에스크로) 체계 마련
- 실행 로드맵 및 추진체계 수립
  - 단계별 추진전략 및 세부 과제 도출, 사업 추진체계 및 관리·평가 방안 제시
  - 정량·정성적 기대효과 분석

### III. 주요 연구개발결과

▣ 혁신기업 선정을 위한 심사제도 개선 방안

- 기술신용평가(TCB)제도를 활용한 혁신기업 선정을 위한 심사제도 개선안 마련
  - 기술신용평가(TCB) 등급 및 근거를 정부연구개발사업 과제심사에 연동을 통한 기업 연구개발 역량 사전 검증,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방안 제시
  - 국가연구개발 과제 수행 전·후의 혁신기업의 기술력 성장 모니터링 관리에 활용 방안 제시
- 기술신용평가(TCB) 정보연계를 통한 기업의 국가연구개발 과제신청 시 행정 간소화 방안 마련
  - 기술신용평가보고서 전송시스템 기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계획서 양식의 확인서 제공을 통한 기업 연구행정 경감 방안 제시
  -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에 현행화된 정보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상시 시스템 연계 구축 방안 제시

#### ▣ 범부처 통합 인수창업(ETA) 지원 플랫폼 구축 방안

- 인수창업의 정책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제시장에서 인수창업 거래 활성화 되지 못한 원인 분석과 통합적 정책 지원체계 구축 방안 마련
  - 창업가, 자금, 기업 정보 등 핵심요소가 기관별·플랫폼별로 분절되어 상호 연계문제 분석, 개별적으로 기관별 지원 수단이 운영되어 통합지원체계 필요성 제시
- 인수창업 전주기 지원 단계별 지원을 체계 분석을 통한 윈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과 민관협력 기반 플랫폼 구축 방안 마련
  - 단계별(탐색-매칭-자금조달-기술이전-인수-PMI-성장)로 인수창업 전주기를 지원하는 윈스톱 범부처 인수창업 통합지원체계 구축 방안 제시
  - 민간 플랫폼 기술력을 활용한 민간협력(PPP)방식 적용 필요성 제시

## I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 혁신기업 선정을 위한 심사제도 개선 방안

- 기업 및 혁신기업 R&D과제 선정 시 심사제도에 반영하여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업 연구행정 간소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기술신용평가(TCB) 정보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실시간 연계를 통한 민관 정보 활용체계 강화에 기여
- 기술신용평가(TCB) 보고서의 활용을 확대를 위해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에 제도 반영 추진

#### ▣ 범부처 통합 인수창업(ETA) 지원 플랫폼 구축 방안

- 기술 보유자의 성공적인 기술창업을 도모하고, 혁신기업의 맞춤형 성장지원 강화에 도움이 되는 인수창업(ETA) 지원 혁신창업생태계 활성화에 기여
- 기술이전을 정체, 중소기업 경영자 고령화, 후계자 부재에 따른 우량기업 소멸 위험 등의 구조적 문제 해소와 글로벌 혁신 창업생태계 육성에 기여
- 관계부처(재정경제부, 중기벤처부) 논의를 통해 “범부처 인수창업 통합 플랫폼 구축” 추진 안건 상정 추진

# 목 차

요 약 문 .....	i
<b>제1장 서론 .....</b>	<b>1</b>
제1절 과제 개요 .....	3
<b>제2장 혁신기업 선정을 위한 효과적 심사제도 개선 방안 .....</b>	<b>7</b>
제1절 연구 개요 .....	9
제2절 심사제도의 정책환경 분석 .....	13
제3절 현행 기업의 과제평가 프로세스 .....	16
제4절 TCB정보 활용 기업 심사체계 개편 방안 .....	19
제5절 TCB정보 활용 사후 모니터링 방안 .....	24
제6절 TCB정보 활용 심사제도의 기대효과 .....	27
제7절 소결 .....	30
<b>제3장 범부처 통합 “인수창업(ETA) 지원 플랫폼” 구축 방안 .....</b>	<b>31</b>
제1절 연구 개요 .....	33
제2절 인수창업 지원 플랫폼의 정의 및 범위 .....	39
제3절 국내·외 현황 분석 .....	41
제4절 추진계획(안) .....	71
제5절 추진체계 및 기대효과 .....	86
제6절 소결 .....	89

<b>제4장 결론 및 시사점</b> .....	<b>91</b>
제1절 결 론 .....	93
제2절 시사점 .....	94
참고문헌 .....	95
<b>[별첨]</b> .....	<b>97</b>
• 별첨1 한국신용정보원 TCB정보 활용 및 연계(안) .....	99
• 별첨2 IRIS 전송용 평가결과 보고서 구성(안) .....	102
• 별첨3 TCB 보고서 항목 및 혁신기업 선정 평가항목 비교 .....	104
• 별첨4 부처별 혁신 프리미어 1000 선정 평가항목 비교 .....	105
• 별첨5 글로벌 벤치마킹 및 한국형 모델 설계(안) .....	109
• 별첨6 K-ETA(인수창업) 실증 사례집 : 유형별 성과 및 시사점 .....	111

## 표 목차

〈표 1-1〉 공공연구기관 연도별 기술이전 추이 .....	4
〈표 2-1〉 혁신 프리미어 1000 평가항목 및 배점(예시 : 산업부) .....	9
〈표 2-2〉 기술신용평가(TCB) 활용 평가프로세스 개요 .....	11
〈표 2-3〉 평가체계 개편의 세부 목표 .....	12
〈표 2-4〉 주요 선진국 운영제도 비교 .....	14
〈표 2-5〉 현행 과제평가체계 문제점 비교 .....	18
〈표 2-6〉 관련기관 역할(안) .....	19
〈표 2-7〉 과제평가체계 개편(안) .....	20
〈표 2-8〉 제도적 변화 비교 .....	23
〈표 2-9〉 과제 종료 후 평가체계 .....	25
〈표 2-10〉 핵심 성과지표(KPI) .....	25
〈표 2-11〉 TCB 등급별 후속지원 내용(안) .....	25
〈표 2-12〉 모니터링 체계 기대효과 .....	26
〈표 3-1〉 2023년도 공공연구기관의 신규 확보 기술 .....	33
〈표 3-2〉 연도별 기술 이전율 .....	33
〈표 3-3〉 초기 리스크 및 자본 효율성 비교 .....	37
〈표 3-4〉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	39
〈표 3-5〉 인수창업 지원 플랫폼의 기능 범위 .....	40
〈표 3-6〉 ’20~’26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현황 .....	41
〈표 3-7〉 중소기업 승계 M&A 시 상법 특례 도입(안) .....	42
〈표 3-8〉 유럽 주요국 인수창업 지원 정책 비교 .....	46
〈표 3-9〉 중국 개별사업자 승계 및 기업 전환 제도 개선 비교 .....	47
〈표 3-10〉 일본 사업승계 M&A 지원제도 .....	48
〈표 3-11〉 전체 업종 기준 중소기업 후계자 부정 추정 .....	49
〈표 3-12〉 중국 인수창업 시장의 주요 특징 및 변화 .....	55
〈표 3-13〉 일본 기업 경영자 연령대별 비중 추이 .....	56
〈표 3-14〉 유럽 주요국 ETA 사회적 트렌드 비교 .....	60

〈표 3-15〉 중국 인수창업 시장의 사회적 특징 .....	61
〈표 3-16〉 일본 인수창업 시장의 변화 .....	62
〈표 3-17〉 미국 주요 플랫폼 .....	65
〈표 3-18〉 중국 주요 플랫폼 .....	67
〈표 3-19〉 일본 주요 플랫폼 .....	68
〈표 3-20〉 7가지 핵심 기능 내용 .....	72
〈표 3-21〉 K-ETA 운영지원 펀드 구조(안) .....	79
〈표 3-22〉 K-ETA 생태계 구축 단계별 주요 내용 .....	89

## 그림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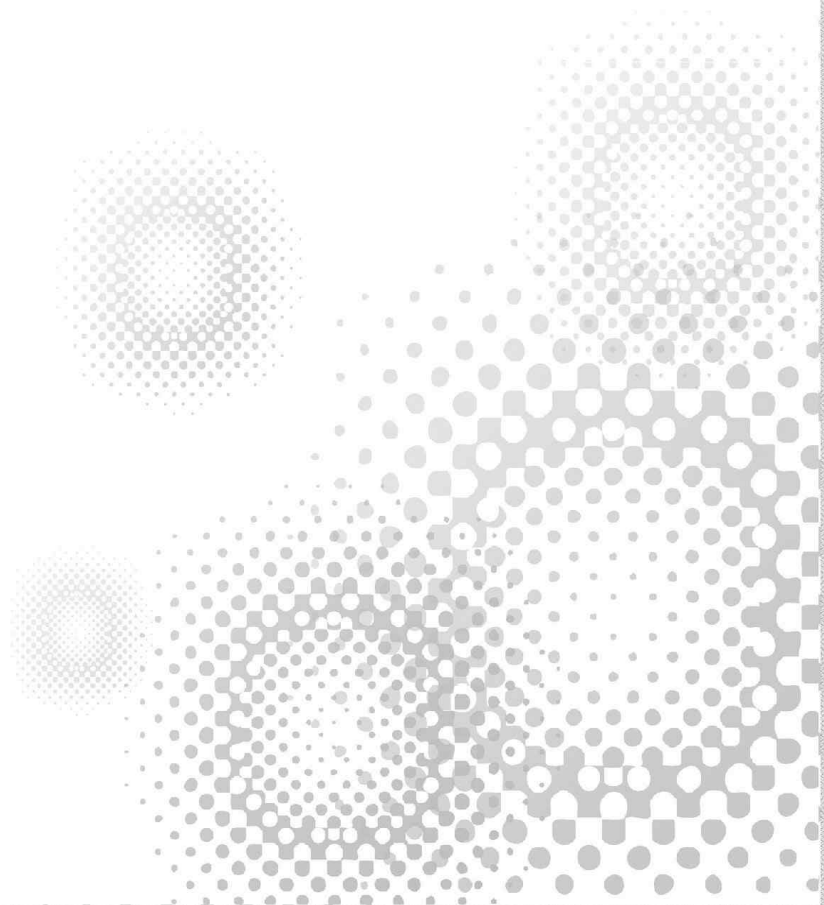
[그림 2-1] 시스템 연동 모식도 .....	19
[그림 2-2] TCB제도를 적용한 혁신기업 평가절차 흐름 .....	20
[그림 2-3] 데이터 흐름 구조도(조달청 신용평가 결과 전송 유사) .....	21
[그림 2-4] TCB 평가기관 플랫폼 설명 .....	22
[그림 2-5] 과제 종료 후 모니터링 프로세스 .....	24
[그림 3-1] 60세 이상 CEO 후계 인식 및 대응(중기연 설문, '24.7.) .....	34
[그림 3-2] 자녀에게 승계할 계획이 없거나, 결정하지 못한 이유 .....	34
[그림 3-3] 자녀에게 승계하지 않을 경우, 기업의 향후 계획 .....	34
[그림 3-4] 중소벤처기업부 M&A 정보망 .....	35
[그림 3-5] 기술보증기금 M&A 지원센터 .....	35
[그림 3-6] 신용보증기금 M&A 보증 .....	35
[그림 3-7] 민간 M&A 중개기관과 관계기관 간 연계도 .....	36
[그림 3-8] 「중소기업 M&A 특별법」 추진 과제 및 지원절차 .....	43
[그림 3-9] SOP 50 10 8 Technical Updates effective .....	44
[그림 3-10] Main Street Employee Ownership Act(2018) .....	44
[그림 3-11] 독일 최대 규모의 기업 승계 교류 플랫폼 'nexxt-change' .....	45
[그림 3-12] CEO들의 M&A 미진행 요인 .....	50
[그림 3-13] 60세 이상 CEO 후계 인식 및 대응(중기연 설문, '24.07) .....	52
[그림 3-14] 미국 서치 펀드 구조 .....	53
[그림 3-15] '리스팅(LISTING)' 플랫폼 예시(안) .....	64
[그림 3-16] BATONZ 사업구조 .....	68
[그림 3-17] TRANBI 플랫폼 .....	68
[그림 3-18] K-ETA 사회적 승계 선순환 모델 .....	76
[그림 3-19] K-ETA 통합 지원 플랫폼 아키텍처 .....	76

민간 기술혁신 활성화 방안 기획 연구

## 제1장



# 서론





## 제1절 과제 개요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연구개발의 필요성

- 국가연구개발 관련 규정을 통합·체계화하고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 행정부담 완화, 그리고 연구윤리 확립을 통해 국가 혁신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20.6.9) 및 시행('21.1.1)

  - 과거 20년간 운영된 R&D 관리 규정의 비효율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연구 생태계 조성이 목적
  - 주요 내용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제를 혁신하고 연구자 중심의 자율적인 환경 조성, 연구개발 관리 체계의 효율화 및 간소화, 책임 있는 연구 수행 및 연구 윤리 확립과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을 제시
- 기술패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기술, 핵심기술 등의 선정 및 전략적 육성을 계획하고, 공급망·통상, 국가안보, 신산업 등의 관점에서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12대 국가전략 기술을 선정하고 육성 추진 중('22.10)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중장기 전망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24~'28)을 발표
  - 제1차 기본계획은 과학기술 '주권국가, 초격차 대한민국'을 목표로 △ 국가전략기술 신속 사업화 총력 지원, △기술안보 선제대응 역량 획기적 제고, △임무중심 연구개발 혁신 등 3대 주요 방향을 제시
-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안)('25.11)」의 후속 조치로서 도전적 연구개발을 촉진과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의 전문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 필요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제도개선 수요를 반영하여 '국가연구개발 과제 평가 표준지침\*'을 개정 추진
    - \* 각 부처는 동 지침의 취지와 내용을 고려하여 소관 연구개발과제 평가지침 마련하고 평가 수행
  - 연구과제 신청 및 평가관련 주요 행정서식의 작성 분량 상한을 설정하고, 시스템 연계를 통한 연구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평가의 효율성과 평가위원이 전문성 강화 지원
  - 연구개발 성과로 도출된 전략기술 및 핵심기술 기반 기업 지원·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연구자·기업의 창업과 육성을 위해 노력

- ▣ 민간 R&D 혁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R&D 투자 성과를 민간에 확산 하는 한편, 민간이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의 마중물 역할 강화 필요

  - 전략기술 및 탄소중립 핵심기술 선정, 로드맵 수립과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결과가 민간으로 확산·활용될 수 있도록 민간 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전주기 지원을 위한 추진 전략 필요
  - 혁신기술기반 창업 및 기업 육성, 신시장 선점, 주요 산업 분야 글로벌 우위 강화 측면에서 민간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범부처 정책 조정 필요성 대두
    - 민간의 연구개발에서 상품화까지 이어지는 사업화 경로에서 분절된 정책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체계 마련 필요
  
- ▣ 연구개발 성과 정체와 지역경제 약화의 구조적 이중 위기로, 지역별로 대표적인 혁신기업을 육성하여 우수한 과학기술인력 및 혁신기술 보유자가 지역으로 유입되도록 하는 획기적인 선순환 지원 정책 필요

  - 정부 연구개발 투자 규모가 지속 확대되고 있음에도 기술이전·사업화 성과 창출의 구조적 한계가 심화되어 투입 자본과 노력이 경제적 부가가치로 환원되지 않는 악순환 고착
  - 지역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R&D를 통해 창출된 기술들이 기술이전·사업화로 이어져야 하나, 기술개발 성공률에 비해 기술사업화 성공률\* 저조
    - 공공연구소 기술이전율이 '21년 50.8%에서 '24년 34.5%로 급감하는 추세로 신규 확보 기술('24) 40,045건 중 이전되지 못한 기술 28,458건(약 71.1%)이 사장되어 R&D 투자 효율성 저하
    - 대학은 '23년 대비 증가(6,138건 → 6,369건)한 반면, 공공연구소는 감소(5,938건 → 5,218건)하여 기관 유형별 이전 불균형과 함께 기술-시장 수요 간 연결고리 단절이 구조적 문제로 자리 잡은 상황

〈표 1-1〉 공공연구기관 연도별 기술이전 추이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공공연구소	40.8%	50.8%	38.4%	36.3%	34.5%
대학	31.1%	33.3%	26.7%	26.0%	25.6%
<b>전체</b>	<b>35.5%</b>	<b>40.9%</b>	<b>31.7%</b>	<b>30.2%</b>	<b>28.9%</b>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2025), 2025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보고서

## 2. 연구 목표 및 내용

### 가. 연구 목표

- 혁신기업 선정을 위한 효과적 심사제도 개선 방안
  -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안)」의 후속 조치에 따른 기업 연구과제 신청 양식 간소화를 통한 연구행정 부담 완화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 민·관 데이터 연계를 통한 정보의 활용체계 마련과 국가연구개발 과제 수행에 적합한 기업·혁신기업 선정을 위한 효과적인 심사제도 개선 방안 마련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연계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과 제출 자료의 검증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 범부처 인수창업(ETA) 지원 플랫폼 구축 방안
  - 지역의 기업·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활성화 방안 및 연구개발 성과 정체와 지역경제 약화에 대한 획기적인 선순환 지원 정책 방안 마련
  - 정부 기술이전을 정체, 중소기업 경영자 고령화, 후계자 부재에 따른 우량기업 소멸 위험 등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범부처 통합 지원 방안 제시

### 나. 연구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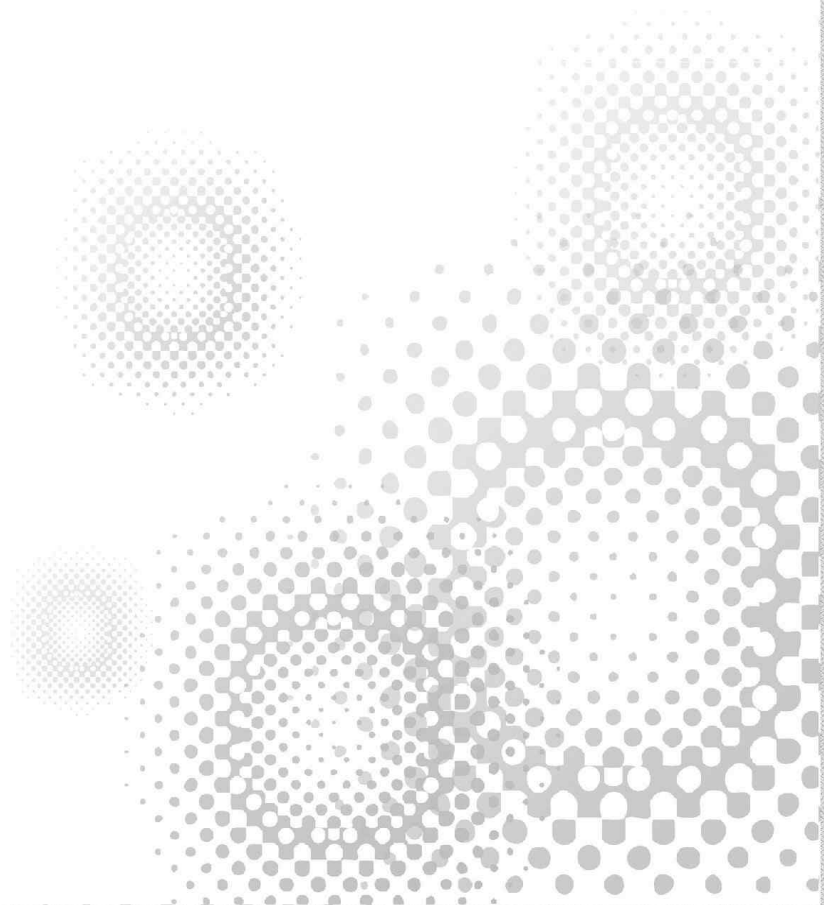
- 혁신기업 선정을 위한 효과적 심사제도 개선 방안
  - 심사제도 개편의 필요성 정책 환경 분석
  - 현행 기업의 과제 심사제도 프로세스 현황 분석
  - 기술신용평가(TCB)정보 활용 기업 심사체계 개편 방안 제시
  - 기술신용평가(TCB)정보 활용 사후 모니터링 방안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연계 방안 제시
  - 기술신용평가(TCB)정보 활용 심사제도 기대효과 제시
- 범부처 통합 인수창업(ETA) 지원 플랫폼 구축 방안
  - 국내외 환경분석(정책·시장·사회·기술)
  - 인수창업 지원 플랫폼 개념 정립 및 범위 설정

- 한국형 인수창업(K-ETA) 통합 데이터 기반 매칭 체계 설계
- 민관협력(PPP) 고도화 모델 제안
- 실행 로드맵 및 추진체계 수립

## 제2장



# 혁신기업 선정을 위한 효과적 심사제도 개선 방안





## 제1절 연구 개요

### 1. 제도 개편의 필요성(현황 및 문제점)

- 각 부처에서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산·학·연 전문가들을 구성하여 평가 후 선정
  - 주요 평가항목은 기업의 혁신성(연구개발 인프라, 연구개발 역량)과 성장 가능성(사업성, 시장성)으로 구분하고 각 항목에 따라 평가 추진

〈표 2-1〉 혁신 프리미어 1000 평가항목 및 배점(예시 : 산업부)

구분	평가항목	평가 고려사항	배점
혁신성 (50)	연구개발 인프라	① 연구개발 인력, 장비 보유현황 ② 최근 3년간 연구개발 투자·인력 현황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전체 종업원 대비 연구 인력 비중)	20
	연구개발 역량	① 독보적 선진기술 확보 정도(보유 혹은 미래 확보기술의 독보성(모방 난이도) 등) ②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③ 제품(기술)의 혁신성 및 경쟁우위 ④ 향후 핵심기술 획득 방안의 구체성과 타당성	30
성장가능성 (50)	사업성	① 매출 성장성 및 영업 수익성(최근 3년 연평균 매출액·영업이익 증가율) ② 비즈니스모델 및 사업화 전략의 타당성 ③ 기술확보 현황 및 향후 주요 시설 전략의 적합성 ④ 투자 로드맵 및 주요 사업 전략의 적합성	25
	시장성	① 목표시장 규모 및 성장성 ② 진입장벽, 시장 규제 및 경쟁 상황 ③ 해외시장 진출 및 확대 가능성	25

- 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만을 통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짧은 시간 내에 사업계획서를 검토 후 기업의 혁신성과 성장가능성을 평가자 개인 역량에 따라 평가 수행
- 각 부처에서 우수한 혁신기업 발굴과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혁신 프리미어 1000」 사업을 추진하여 혁신성·성장잠재력을 갖춘 혁신 기업을 선정하여 정책금융기관\*의 맞춤형 금융·비금융 지원을 추진 중

\*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성장금융

- 각 부처는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혁신기업의 창업 및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좋은 혁신기업 발굴을 위한 선정평가 체계의 문제점 대두

  - 각 부처에서 우수한 혁신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만 가지고 전문가 평가에만 의존하고 있어 혁신기업 선정에 문제점 발생
    - 혁신기업의 선정에 핵심적인 내용인 기업의 기술역량, 재무건정성, 사업화 역량 등에 대한 사전 검증체계 부재로 전문가 의견에 의존한 평가에 한계점 발생
    - 객관적이고 정성·정량정보 제공 없이 제출된 사업제안서만 가지고 평가위원의 주관적 의견과 판단으로 평가함으로 실질적 혁신기업 발굴에 한계 발생
  - 혁신기업 선정평가 시 기업의 현황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제공 체계가 없고, 민간에서 기업평가에 활용하는 다양한 제도의 연계활용 체계 미흡
    - 민간에서 기업들은 금융지원을 효율적으로 받기 위해 금융권으로부터 기술신용 평가(TCB)를 상시 받고 있으며, 지적내용에 대해 보완하여 관리하고 있음
    - 국내 기술신용평가(TCB)기관은 NICE평가정보, 한국평가데이터, 이크레더블, 나니스디앤비, 한국기술신용평가, SCI평가정보 등 6개 기관 운영
- 각 부처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과제신청을 받고 있으나, 기업은 과제신청 시 사업계획서를 부처별로 반복 제출되고, 부처별 제출된 자료의 이중관리의 문제점 발생

  - 기업 입장에서 각 부처별 지원사업 신청 시 요구되는 서류를 반복적으로 입력하므로 기업의 행정비용과 비효율적 시간 증가로 기업의 생산성에 영향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입장에서 각 부처별로 중복된 제출서류와 데이터의 유지관리와 중복적인 자료 및 서류제출로 평가 기간 및 준비의 비효율성 발생
  - 현행 평가체계는 대부분 서류 기반의 정성평가에 의존하고 있어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평가절차의 주관성·비효율성 문제가 지속적 제기
- 현재 혁신기업의 과제 선정에서부터 과제 수행 이후 성과 모니터링을 위한 데이터 기반의 사전검증 체계 미흡

  - 기업의 과제 선정단계부터 기업의 기초경쟁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수행 후 기업의 매출 현황, 특허보유, 시장성 등에 대한 성과 모니터링까지 연계하는 선순환형 평가관리체계 구축 필요
  - 기업의 기술력·재무안정성·사업화역량 등 기초 역량에 대한 객관적 검증체계 미흡

## 2. 제안의 기본방향

- 기술신용평가(TCB) 등급 및 근거를 정부연구개발사업 평가에 연동을 통한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사전 검증 및 R&D 과제 성공 가능성 향상을 목표
  - 기술신용평가(TCB)기반 객관적인 지표를 도입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과성 제공
  - 평가결과 전송 시스템 기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계획서 양식의 확인서 제공을 통한 기업의 행정소요 경감 도모(혁신기업 선정평가부터 우선 적용)
  - 국가 R&D과제 수행 전·후의 혁신기업의 기술력 성장 모니터링 관리에 활용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활용 가능한 연계시스템 구축을 통한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 후 확대적용 방안 마련
  - 민간 기술신용평가(TCB)시스템을 통한 기업정보의 현행화를 추진하고 기업들의 상시적인 현행화 정보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연계하여 기존 문제 해결
  - 민간 기술신용평가(TCB)시스템에서 현행화된 정보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상시적으로 제공하여 기업선정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 구축

〈표 2-2〉 기술신용평가(TCB) 활용 평가프로세스 개요

구분	주요단계	세부내용
1단계	TCB 평가보고서 제출 의무화	지정 평가기관*에서 TCB 평가를 받은 기업만 지원 가능
2단계	1차 필터링(정량심사)	기술성, 사업성, 재무건전성 등을 평가하여 하위 등급(예: T6 미만)은 탈락 또는 보완 요청
3단계	2차 전문가 심층평가(정성심사)	평가위원 내지는 심의위원회에서 TCB 등급 세부지표를 참고하여 기술성, 시장성, 공공성 등을 검증
4단계	TCB·심사 통합 의사결정	TCB 점수와 정성평가 점수를 가중통합(예: 40:60 비율)
5단계	사후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연계	TCB 사후등급 재평가(연1회) → 과제 성과 및 R&D 성과 지표(매출·고용·IP)를 연동 평가

- 단순한 절차 및 방법 개선을 넘어 정부-민간 간 데이터 협력 생태계 구축을 통한 연구개발사업 추진의 효율성 확대
  - 정부는 TCB평가를 통해 민간의 분석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평가 품질을 높이고, 민간은 국가R&D 참여 기업의 신용도·기술력 정보를 지속 업데이트할 수 있는 구조 확보
  - 이는 데이터기반 R&D 거버넌스(Data-driven R&D Governace)로의 전환이며, 국가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 집행, 중복투자 방지, 제도적 지원정책의 근거 데이터 확보

### 3. 세부목표

〈표 2-3〉 평가체계 개편의 세부 목표

구분	목표 내용	기대효과
평가체계 혁신	• TCB 기반 사전평가제도 도입	• 정량·정성의 균형 확보
행정부담 완화	• 과제별 중복자료 제출 간소화	• 기업의 평가준비시간 단축 및 비용 절감
공정성 강화	• 동일지표 기반 평가 실시	• 평가자 주관 개입 최소화
사후연계 강화	• 성과기반 TCB 재평가 도입	• 후속지원의 객관성 확보
데이터 통합	• IRIS-TCB간 API 연동	• 기업정보 실시간 업데이트

### 4. 정부정책 및 제도 연계성

- 과학기술정통부(이하 과기부)는 「R&D 혁신 3대 개혁안('24.02)」을 통해 민간 전문평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체계 강화를 명시

  - 또한, 금융위원회는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23~'25)」에서 TCB평가를 기반으로 한 기술 기업에 대한 대출심사 제도를 확대한 바 있어, 금융-기술-정책 데이터의 연계 허브 역할 수행 가능
  - 이 외에도, 조달청의 신용평가연계형 납품자 선정제도, 산업부의 기술사업화 평가에 TCB 활용제도, 중기부의 통합R&D관리시스템(SMTech) 등은 이미 TCB가반 사전 검증체계를 부분적으로 운영 중
  - 따라서, 과기부 출연과제 심사에 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타 부처의 선진사례와 일관된 정책적 흐름을 반영하며, 정부 차원의 R&D 행정 일원화를 실현하는 시범모델로 가능

## 제2절 심사제도의 정책환경 분석

### 1. 국내 R&D 심사제도 환경변화

-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연간 30조 원 규모로 확대되었으며, 과기정통부는 「24년도 주요정책 추진계획」 등을 통해 “성과중심의 R&D 재설계”를 추진
  - 개혁안의 핵심은 R&D 투자의 중복 방지, 사전·사후 데이터 연계 강화, 민간 전문평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효율적 심사체계 구축임
- 현재 국가R&D 평가의 90% 이상이 서류발표 중심의 정성평가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는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크고, 과제별로 기업의 재무·기술 데이터를 반복 제출해야 하는 비효율적 구조 초래
  - 특히,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농식품부 등 부처별로 과제평가시스템(IRIS, SNTech, ATIS 등)이 분리되어 있어 기업 데이터의 통합 관리와 연동이 어렵고, 데이터 일원화 기반이 미비한 상황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데이터 기반 R&D 관리체계를 도입 중이며, 과기부는 평가표준화 및 정보연계모델을 개발하고 있음
- 따라서 민간 TCB 데이터를 공공시스템과 연계하여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방향성과 일치함

### 2. 과학기술 정책 동향

- 과기부는 '23년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① 수행기관의 연구역량, 재무건전성, 사업화 가능성 평가항목을 강화하고, ② 민간 전문평가기관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량지표 기반 평가항목 확대함
  - 또한, 「R&D 성과관리 고도화사업」을 통해 R&D평가 지표체계 2.0을 구축 중이며, 이 체계에서는 기업평가 시 TCB평가 항목(기술성, 사업성, 재무건전성 등)과 유사한 세부요소(연구인력, 재정건정성, 혁신역량 등)가 반영되고 있음
- 과기부는 IRIS(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기업별 이력 정보, 인증, 특허 데이터 등을 자동 수집·연계하는 기능을 시범 운영 중이며, 이는 본 제안에서 지향하는 “TCB- IRIS 자동연동 구조”와 사실상 동일한 기술적 방향임

- 결국, 이미 R&D 행정 효율화의 핵심 수단으로 민간 데이터 연계 기반 평가체계를 정책적으로 추진 중이며, 본 제안이 그 실질적 실행 모델로 작동할 수 있음

### 3. 금융위원회 및 타 부처 정책 연계성

- 금융위원회는 「기술금융 개선방안('24.4)」에서 TCB평가를 기반으로 한 기술신용대출, 투자심사제도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24년 말 기준 기술금융 공급 규모는 300조 원을 상회함
  - NICE평가정보, 이크레더블 등 TCB기관은 이미 은행권과 실시간 API를 통해 기업의 기술·재무 정보를 전송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는 정부연구과제 평가체계에 그대로 적용 가능함
    - ※ TCB평가기관 : 나이스평가정보(NICE), 나이스디앤비(NICE DD&B), 이크레더블(eCredible), 한국평가데이터(KoDATA), SCI평가정보(SCI), 한국기술신용평가(K-TCB)
- 조달청은 신용평가를 기반으로 한 납품자 선정 및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SMTech 시스템에서 기업별 기술력과 재무 데이터를 연동하고 있음
- 각 부처가 이미 TCB 평가 기반의 행정혁신 모델을 단계적으로 적용 중이며, 과기부의 연구과제 심사체계는 이러한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에 참여해야 할 시점임

### 4. 해외 주요 사례 비교

- 해당 사례는 모두 민간 혹은 준공공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사전 검증 결과를 정부 과제평가 시스템에 연계하여 객관적 지표 기반의 평가를 수행하는 공통점 보유
  - 특히, 영국 Innovate UK의 경우 정부 R&D 과제뿐만 아니라 벤처투자, 조달평가, 기술금융 심사에 동일 DB를 활용함으로써, 민간 데이터 공유를 통한 평가 효율성 극대화를 실현

〈표 2-4〉 주요 선진국 운영제도 비교

국가	제도명	주요 내용	시사점
EU	Horizon Europe	민간 전문평가기관의 '사전 적격성 평가' 실시후 전문가심사 진행	사전검증체계 정착
미국	SBIR/STTR	기업 재무·기술역량 사전인증제도 운영, TIB(Tertiary Independent Body) 활용	TCB 유사제도
일본	NEDO 평가시스템	민간 DB 연동 평가체계 운영, 성과기반 후속지원제 도입	과제 성과 연계 강화
영국	Innovate UK	기업의 기술역량 평가결과를 정부 R&D 및 투자 심사에 공동 활용	데이터 연동 표준화

## 5. 국내·외 동향 및 정책적 시사점

- 현재 R&D 정책환경은 “성과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이동하고 있으며, 평가체계 역시 정성평가 중심에서 정량+정성 융합형 시스템으로 전환

  - 이 과정에서 TCB와 같은 민간 평가 인프라는 정부가 단기간 내 구축하기 어려운 기술·재무·시장 데이터베이스를 보완할 수 있는 핵심 수단임
  - 따라서 정부출연과제 평가체계에 TCB를 연동하는 것은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① 행정 효율화, ② 평가 공정성 확보, ③ 데이터 연계형 R&D 정책 고도화, ④ 민관 협업 기간의 R&D 생태계 혁신으로 연계됨
- 제도적 환경을 종합하면 국가연구과제 심사체계 개편은 국가차원의 R&D 거버넌스 통합 정책의 핵심 파일럿 모델로서 활용 가능

### 제3절 **현행 기업의 과제평가 프로세스**

#### 1. 현행 평가체계의 구조적 한계

- 국가R&D사업의 과제의 평가체계는 주로 서류 및 발표 중심의 정성평가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며, 객관적인 정량지표의 반영 비율이 낮음

  - 과제별로 평가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고, 평가항목 또한 사업유형에 따라 상이하여 평가의 표준화와 일관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음
- 현재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창업성장, 전략형, 시장 확대형 등)의 평가항목은 기술성·사업성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기업의 재무 건전성, 조직 역량, 경영관리체계 등 지속성 관련 항목은 대부분 정성적 판단에 의존

  - 이는 기술개발 역량은 우수하나 재무위험이 높은 기업이 대규모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선정되는 사례를 유발하며, 사후관리 실패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
  - 평가위원 간의 주관적 해석 차이로 인해 동일기업이 유사한 과제에 신청하더라도 부처별 위원회별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기업입장에서 평가 결과의 신뢰성이 낮다고 인식

#### 2. 행정적 비효율 및 기업부담

-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기업은 연구과제 신청 시 과제별로 ① 최근 3년간 재무제표, ② 기술개발인력 현황, ③ 보유 특허·인증 정보, ④ 기존 과제 수행 이력, ⑤ 사업계획서 등의 자료를 반복 제출

  - 해당 자료는 이미 IRIS(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부처 연구관리시스템(Ezbaro, RCMS, SMTech)에 분산되어 존재하지만, 시스템 간 연계가 부족하여 기업이 동일 데이터를 반복 제출해야 하는 비효율 발생
  - 또한, 과제 심사 시 기업의 제출자료의 객관적 신용도나 기술역량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체계 부재로 평가위원들은 제출된 자료에 의존하여 기업의 역량을 판단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서류작성 능력이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역전현상 발생

- 기술역량보다 보고서 품질이나 프리젠테이션 기술이 우수한 기업이 선전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연구개발예산의 배분 효율성 저해요인으로 작용
  - 중소기업의 경우 행정인력 부족으로 과제신청 시 과도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야 하므로, 혁신역량이 높은 스타트업이 행정장벽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 발생
  - 실제 연구능력과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이 연구과제를 수주하지 못하여 연구개발예산의 비효율적 활용 문제와 연구성과가 미비한 원인 초래

### 3. 평가 공정성과 투명성 저하

- 현재 연구과제 평가프로세스의 또 다른 문제는 평가자의 주관 개입 가능성이 높고, 평가결과의 재현성(reproducibility)이 낮음
  - 평가위원의 전문 분야 경력·소속에 따라 동일한 과제가 전혀 다른 평가결과를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평가 변동성은 제도 신뢰도를 약화시킴
- KISTEP이 '23년에 수행한 「R&D 평가 신뢰도 분석」 결과에 따르면, 동일 과제에 대해 다른 평가위원이 평가할 경우 결과가 평균  $\pm 12$ 점 이상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편차는 특히, '사업화 가능성', '시장경쟁력' 항목에서 두드러지며, 이는 명확한 정량 지표 없이 평가자의 경험에 의존하기 때문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검증 절차가 명확하지 않거나 부처별로 상이하여, 평가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기업의 신뢰가 낮은 상황임
- TCB는 민간 전문평가기관에서 동일모델을 기반으로 평가를 수행하기 때문에 재현성이 높고, 통계적 근거에 기반한 등급 부여가 가능하지만, 현재 연구과제 평가에 이러한 데이터 활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4. 사후성과 관리 미흡

- 국가연구개발 과제 수행 이후에도 평가체계는 실질적인 성과 추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기업이 과제 종료 후 제출하는 결과보고서는 대부분 정성적 기술기술서 머무르며, 매출, 고용, 특허, 인증 등 핵심성과지표(KPI)는 자가보고(self-reporting) 형태로 관리됨
  - 정부는 실제 사업화 성과나 기술 파급효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지 못하고, 과제 종료 시점에 단발성 점검만 수행하는 구조임

- ❑ 과제 수행 이후 기업의 성장경로(동급 상향, 고용 증가, IP 확대 등)를 추적할 수 있는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고, 정책 효과 분석 또한 어려운 실정임
  - KISTEP의 「2022 R&D 성과환류 분석」에 따르면, 과제 종료 후 3년 내 사업화 성과 보고율은 28%에 불과하며, 사후관리의 객관성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됨

## 5. 시스템 분절 및 부처 간 연계 부족

- ❑ 현재 정부의 주요 연구관리플랫폼(IRIS, RCMS, Ezbaro, SMTech, e나라도움 등)은 서로 다른 데이터 구조와 보안체계를 적용하고 있어, 기업의 단일 식별코드(사업자 등록번호, R&D Unique ID 등)를 통한 통합이 어려움
- ❑ 기업이 과기부 과제신청에 제출한 데이터가 산업부, 중기부, 과제평가에는 공유되지 않아 중복 심사, 중복 보조, 중복 보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음
- ❑ 정부 전체적으로 행정비용 증가, 기업으로서는 비효율적인 평가 참여라는 양측 손실 구조가 발생함
  - 단순한 시스템의 미비가 아니라, 평가데이터를 민간전문기관과 연계하지 못한 구조적 한계에서 기인함

## 6. 현행 평가체계의 핵심 문제 진단(요약)

- ❑ 기업의 현행 연구과제 평가체계는 효율성·공정성·데이터 연계성 세 측면 모두에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함이 명확함
  - 기업의 연구과제 심사평가에 기술신용평가(TCB) 기반 연구과제 사전평가제 도입 및 연구과제평가플랫폼(IRIS) 통합 연계를 위한 활용 모델을 제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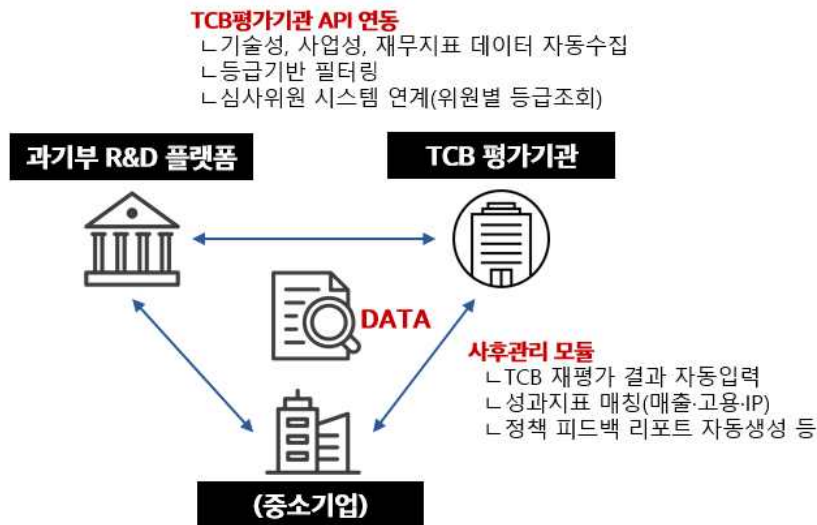
〈표 2-5〉 현행 과제평가체계 문제점 비교

구분	문제영역	주요 내용	결과적 영향
제도적 문제	표준화 부재	부처별 평가항목 상이	일관성 저하
행정적 문제	중복서류, 절차 복잡	기업 행정부담 과중	참여율 저하
공정성 문제	평가자 주관성	결과 편차 및 불신 초래	신뢰성 저하
성과관리 문제	사후연계 부재	데이터 미적재, 재도전 미지원	성과 추적 불가
시스템 문제	데이터 연동 미흡	부처 간 단절, 중복평가	행정비용 증가

## 제4절 TCB정보 활용 기업 심사체계 개편 방안

### 1. 기본방향

- 정부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심사체계 개편은 단순한 절차 간소화가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공정한 과제평가 생태계로의 구조 전환을 목표로 함
- 핵심은 TCB(기술신용평가)제도를 사전 필수 절차로 도입하고, 평가결과를 IRIS(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자동 연계하여, 과제평가 전 과정이 정량지표를 중심으로 운영 되도록 하는 것임



[그림 2-1] 시스템 연동 모식도

〈표 2-6〉 관련기관 역할(안)

구분	역할(안)
기술신용평가기관 (NIC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o 기업) 기술신용평가 등급 및 연구개발계획서 기초자료 제공</li> <li>• (To 전문기관) 기술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정보 제공</li> <li>• 객관화된 평가지표를 통해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제공</li> </ul>
연구관리전문기관 (IR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o 평가기관) 기업의 기술사업역량 사전검토 요청</li> <li>• (To 기업)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평가기준 제공</li> <li>• 우수성과 창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 선정 및 R&amp;D과제 성공률 향상</li> </ul>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o 평가기관) 기술신용평가 기초자료 제공</li> <li>• (To 전문기관) 기술신용평가 결과 전송</li> <li>• 사전 기술평가를 통해 객관화된 평가기준으로 공정한 경쟁 가능</li> </ul>

- 본 연구개발과제 평가프로세스 개편안은 다음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됨
  - 사전단계 : TCB 기반 객관지표 확보(기술성, 사업성, 재무건전성 등)
  - 심사단계 : TCB등급을 기반으로 한 정량심사 및 전문가 정성심사 병행
  - 사후단계 : TCB Follow-up 평가를 통한 성과연계 모니터링
- 이 과정을 통해 평가자는 신뢰성 있는 데이터에 근거하여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고, 기업은 중복된 자료 제출 없이 평가결과를 다양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음

## 2. 단계별 심사프로세스 개편(안)

### □ 과제 평가프로세스 개요

〈표 2-7〉 과제평가체계 개편(안)

구분	주요 단계	세부내용	수행주체
1단계	사전 TCB 평가	신청전 지정 평가기관 TCB 기관 평가의무화(사전 TCB 평가 보고서 필요)	TCB 기관
2단계	정량심사	TCB 결과 기반 1차 필터링 (기술성, 사업성, 재무 건전성 등 기준, 예) 하위 등급(T6이하) 탈락)	과제평가플랫폼 (IRIS)
3단계	심층평가 (정성심사)	평가 전문가들이 TCB 등급 세부지표 및 발표평가 등을 참고하여 기술성, 시장성, 공공성 등을 심사	전문평가위원회
4단계	통합 의사결정	TCB 점수와 정성평가 점수를 가중결합(예 : 40:60 가중치)	전문평가위원회
5단계	사후 모니터링 (성과평가 등)	재평가(연1회)를 통해 과제 성과 및 R&D 성과 지표(매출·고용·IP 등)를 추적 관리	TCB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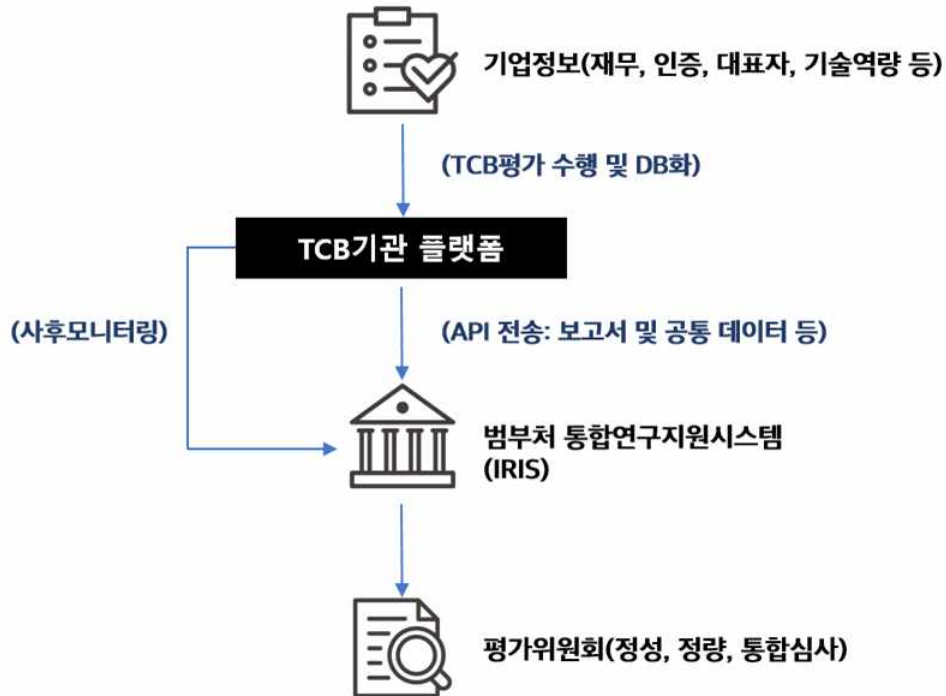
### ○ 평가절차



〔그림 2-2〕 TCB제도를 적용한 혁신기업 평가절차 흐름

### 3. TCB 보고서 데이터 연계 구조

- 기존 과제평가에서는 기업이 각 부처별 플랫폼에 별도의 정보를 수동 입력, 본 제안에서는 TCB-IRIS 간 API 연계를 통해, 평가 및 인증정보를 자동으로 수집·갱신하는 구조임



[그림 2-3] 데이터 흐름 구조도(조달청 신용평가 결과 전송 유사)

- 핵심은 TCB(기술신용평가) 제도를 사전 필수 절차로 도입하고, 평가결과를 범부처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에 자동 연계하여, 과제평가 전 과정이 정량지표를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임
- 공통 데이터 항목 예시
  - 기업식별정보 : 사업자번호, 대표자, 업종코드
  - 재무정보 : 매출, 부채비율, 유동비율
  - 기술정보 : 특허보유, 연구인력, 기술수준지수
  - 인증정보 : 벤처확인, 기업부설연구소, ISO 등

-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자는 즉시 기업의 기술 및 재무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기업은 TCB평가 갱신만으로 다수의 정부 사업에 동일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음.

### TCB기관 플랫폼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 결과 전송

평가종류: 조달청 등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평가 완료일: 2025-09-22 | 미리보기 | 평가서 전달할 전송: 전송 | 미전송

- 1) 평가정보 전송 플랫폼(API 연동)**
  - NICE-BIZ사이트에서 원클릭으로 IRIS로 TCB보고서 제출
  - 등급 결과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기준의 평가 데이터(API)도 함께 송부
- 2) 부속서류 제출 자동 연계 플랫폼**
  - TCB 평가 시 제출된 증빙서류가 연구개발과제 서류(ex. 3개년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와 동일한 경우, IRIS에 자동 연계되어 제출된 것으로 취급
- 3) 사후관리 플랫폼**
  - TCB 재평가 결과 자동입력
  - 성과지표 매칭 및 정책 피드백 리포트 자동 생성 등

[그림 2-4] TCB 평가기관 플랫폼 설명

## 4. 평가위원회 운영 및 심사절차

- 구성 : TCB분석가(데이터전문가) + R&D 분야 전문가 + 회계/재무 전문가의 혼합형 위원회
- 심사 방식 : 온라인 정량심사(1단계) + 현장 또는 화상 발표심사(2단계) 병행
- 결정 : 각 항목별 세부점수 및 가중합산 후 자동산출, 평가자의 주관 개입 최소화
- 평가결과는 즉시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이후 과제모니터링·성과관리 단계에서 재활용 가능함. 이를 통해 동일기업의 중복평가를 방지하고, “한 번의 평가로 여러 과제 활용이 가능한 구조”를 실현 가능함.

## 5. 제도적 변화

- 평가체계 개편을 통해 정부는 ① 평가 품질 향상 및 행정효율 제고, 기업은 ② 시간·비용 절감과 평가공정성 제고, 사회적으로는 ③ R&D 투자 효율성 및 정책 신뢰성 강화라는 3대 효과 기대 가능함

〈표 2-8〉 제도적 변화 비교

구분	현행	개편안
평가체계	기술·사업성 중심 정성평가	TCB 기반 정량 + 정성 통합평가
데이터관리	부처별 독립 DB, 수동입력	TCB-IRIS API 자동 연동
심사운영	위원 개별판단 중심	표준모형 + 자동산출 중심
사후관리	정성적 결과보고 중심	TCB 재평가 통한 객과적 모니터링
기업부담	서류반복, 높은 행정비용	단일평가서 재활용, 비용절감

## 제5절 TCB정보 활용 사후 모니터링 방안

### 1. 사후평가 및 모니터링의 필요성

- 정부 연구개발과제는 연간 약 8만여 건에 달하나, 과제 종료 후의 성과 추적 및 사후관리 체계가 매우 제한적임

  - 과제결과보고서는 대부분 기업이 자율 작성하는 정성적 서술서 수준에 머물며, 매출·고용·특허 등 주요 성과지표(KPI)는 자가보고(self-reporting) 형태로 제출
  - 이에 따라 정부는 실제 사업화성과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정책적 환류(Feedback)가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
- KISTEP의 '22년 연구에 따르면, 과제 종료 후 3년 이내의 성과 보고율은 28%에 불과하며, 실질 사업화 성공률은 전체 과제의 약 18.5%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저조한 환류율은 “사전평가와 사후성과 간의 연계 부재”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따라서, TCB 사후평가(Follow-up Assessment)를 도입하여 과제종료 이후의 기업 성과를 정량적으로 측정·추적하고, 이를 차기 과제 선정, 후속지원, 정책 설계에 연계하는 “데이터 순환형 성과관리체계” 구축 필요

### 2. 연구과제 종료 후 평가 프로세스

- 해당 구조는 기존의 “결과보고 중심 평가”를 “데이터 기반 동적 모니터링”으로 전환하며, TCB 재평가를 통해 기업의 기술사업화 역량 변화를 수치로 추적할 수 있음

  - 과제 종료 후 평가 모니터링 절차



[그림 2-5] 과제 종료 후 모니터링 프로세스

## ○ 과제 종료 후 평가체계

〈표 2-9〉 과제 종료 후 평가체계

구분	현행	개편안
평가체계	기술·사업성 중심 정성평가	TCB 기반 정량 + 정성 통합평가
데이터관리	부처별 독립 DB, 수동입력	TCB-IRIS API 자동 연동
심사운영	위원 개별판단 중심	표준모형 + 자동산출 중심
사후관리	정성적 결과보고 중심	TCB 재평가 통한 객관적 모니터링
기업부담	서류반복, 높은 행정비용	단일평가서 재활용, 비용절감

## 3. 핵심 성과지표(KPI)

- 연구과제성과는 객관적 데이터 기반으로 실시간 집계 가능하며, 수동 보고 및 중복 입력 절차가 대폭 축소됨

〈표 2-10〉 핵심 성과지표(KPI)

구분	세부지표	측정방법	연계데이터 출처
기술성과	신규 특허·논문수, 기술이전건수	NTIS, KIPRIS	과제정보+TCB 기술 DB
사업성과	매출액, 수출액, 신규고용, 투자유치	국세청, 고용보험 DB 등	IRIS+TCB 재무 DB
혁신성과	인증취득, 사회적 가치창출	TCB 공공인증 DB 등	TCB DB+인증 DB

## 4. 연구과제 종료 후 등급 변화 기반 후속지원 모델(예시)

- 해당 구조를 통해 정부는 성과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기반 재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성과 부진 기업은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재도전 역량을 확보 가능

〈표 2-11〉 TCB 등급별 후속지원 내용(안)

등급변화	주요내용	후속지원 내용
T4 → T3(상향)	성과우수기업 가점 부여	차기 과제신청 시 +2 점, 세액공제 추가
T4 유지	기본 유지	차기 과제 참여 시 중립
T5 → T6(하락)	경고 및 컨설팅 의무화	경영·기술개선 컨설팅 제공
T6 이하 지속	모니터링 대상 지정	1년 내 재평가 및 재도전 유도

## 5.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운영(안)

- IRIS는 평가데이터 중앙저장소 역할을 수행하며, 산업별 통계 및 기업 성장지표를 정책 결정자에게 주기적으로 제공
- 또한, 평가결과를 과학기술정책 연구기관(KISTEP, NST 등)과 공유함으로써 정책 근거 데이터(Data Evidence) 기반 의사결정을 강화 가능
-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
  - 데이터 연계관리 : TCB기관-IRIS-NTIS 간 API 통합 운영
  - 등급 변화 : 추적과제 종료 후 기업별 성장 트렌드 분석
  - 정책 피드백 : 산업별 기술력·성장률 빅데이터 제공
  - 품질관리 : 평가데이터 검증, 이상값(Outlier)
  - 관리기업식별정보 : 사업자번호, 대표자, 업종코드

## 6. 모니터링 체계 기대효과

- 과제평가의 쉰주기(사전-중간-사후)가 하나의 연계된 데이터 흐름 안에서 운영되며, 정부는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정책성과의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 가능
- TCB기반 사후평가체계는 정부출연 R&D 과제의 “성과를 측정하는 도구”를 넘어, 국가 기술혁신정책의 데이터 엔진(Data Engine)으로 작동 가능
- 평가와 모니터링이 하나의 순환구조로 통합될 때, 과기부는 데이터 중심의 혁신 정책 거버넌스 주체로 자리매김 가능

〈표 2-12〉 모니터링 체계 기대효과

구분	주요 개선효과	정량적 목표 기대치
행정효율성	사후보고 절차 자동화	보고서 제출기간 50% 절감
공정성 강화	동일평가기준 기반 성과측정	평가편차 ±5점 이내로 감소
정책환류	성과데이터 실시간 분석 가능	성과환류율 28% → 50% 개선
민관협력	TCB 기관-정부 간 데이터고유 체계 확립	산업별 성장지표 구축

## 제6절 TCB정보 활용 심사제도의 기대효과

### 1. 제도 도입의 의의

- 본 제안의 궁극적 목적은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의 평가체계를 데이터 기반(Data-driven)으로 전환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과 행정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있음
- 기존에는 평가위원 개인의 경험과 판단에 의존하던 심사체계를 민간의 전문평가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정량지표(TCB정보)와 결합 활용
  - 정부는 평가 품질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기업은 행정부담을 줄이며, 국가 전체적으로는 R&D투자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 단순한 절차 개선이 아니라, 정부-민간 간 데이터 공유와 연계를 기반으로 한 R&D 혁신 거버넌스 전환의 시발점으로 향후 정부 연구과제뿐 아니라 기술금융, 조달, 인증, 세제지원 등 다양한 정책분야와의 연동이 가능

### 2. 정성·정량적 기대효과

- 평가의 공정성 강화
  - 해당 기업들이 동일한 TCB평가모형(기술성, 재무건전성, 사업성 등)을 기반으로 평가를 받게 됨으로써, 평가위원 개인의 주관에 따른 편차가 최소화됨
  - 평가결과의 재현성(Consistency)이 높아져, 평가 이의제기·불복 사례가 감소하고, 평가 신뢰도가 제고됨
  - 동일지표 기반의 평가로 산업별 비교·통계분석이 가능해져, 정책적 일관성이 확보됨
- 행정효율성 및 비용절감
  - 기업이 과제별로 반복 제출하던 재무제표, 특허, 인증자료 등을 TCB평가를 통해 자동연동(API)함으로써, 과제 준비시간이 평균 20% 이상 단축됨
  - 부처 간 데이터 공유를 통해 중복평가 및 중복지원이 방지되고, 행정비용이 연간 약 100억 원 이상 절감될 것으로 추정됨
  - 한 번의 TCB 평가로 다수의 정부사업에 공통 활용이 가능하여, 평가 생산성(평가 1건당 활용도)이 3배 이상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정책 데이터 기반 강화

- TCB DB를 중심으로 구축되는 기업 기술역량·재무안정성·사업성과 데이터는 과기부의 R&D 성과지표체계(NTIS, IRIS, KISTEP)와 통합되어 국가 차원의 R&D 정책데이터 허브(Data Hub)로 발전 가능함
- 이를 통해 산업별 기술경쟁력, 기업규모별 혁신역량, 기술분야별 성과통계를 실시간으로 산출할 수 있으며, 정책의 타당성 검증과 예산배분 효율성 제고에 기여함
- 예시 : “TCB-T3 등급 이상 기업”의 평균 매출성장률은 3년간 XX배 향상 → 성과 기반 정책집행 근거 제공함

□ R&D 생태계 신뢰 및 혁신성 제고

- 평가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높아져 기업, 평가자, 정부 간의 신뢰관계 강화
- 민간평가기관(TCB사)·정부·공공연구기관 간의 협력 생태계 조성 → R&D 평가산업 육성
- 객관적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지원과 민간투자 간의 연계 활성화(예 : 기술금융, 벤처 투자, 조달평가 등)
- 파급효과 : 정부연구과제에서 시작된 TCB평가 활용모델이 기술창업지원, IP담보 평가, ESG 인증 등으로 확산 가능

□ 성과관리 및 환료체계 강화

- TCB 사후평가를 통해 기업의 성장경로(매출, 고용, 특허 등)를 지속 추적함으로써, 과제 성과를 실질적으로 측정할 수 있음
- 성과우수기업에는 차기 과제 가점 또는 세제혜택, 부진기업에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성과기반 후속지원 구조”가 완성됨

□ 평가위원의 평가 전문성 강화

- 검증된 기업평가 정보를 평가자에게 사전제공을 통해 공정성 문제를 해소하고, 사업 특성과 목적에 부합하는 기업 선정에 평가자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평가 공정성을 확보하면서 기술신용평가(TCB) 결과를 활용을 통한 기업의 기술성, 사업성, 성장성에 대한 세부 내용 제공으로 평가위원의 심도있는 평가정보 제공

### 3.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 □ 정책 효율성 강화

- 과제평가의 중복 제거 및 행정비용 절감 → 연간 약 100억 원 이상 절감
- 동일지표 기반 정책평가 → 연구개발 예산·배분의 합리성 제고

#### □ 산업 경쟁력 강화

- 기술·사업성 기반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 중소·창업기업의 진입 장벽 완화
- 기술기반 혁신기업 중심의 정부지원 확대 → 산업구조 고도화

#### □ 데이터 생태계 확장

- TCB 데이터와 정부 R&D 데이터의 통합을 통해 산업별 기술통계, 성장률, 리스크 정보 등 고품질 공공데이터 생산 가능 → 금융·투자분야 활용

#### □ 민관협력 강화

- TCB평가기관이 정부 R&D 평가의 민간 파트너로 참여함으로써 민간의 데이터, 인력, 분석모형이 공공정책 영역으로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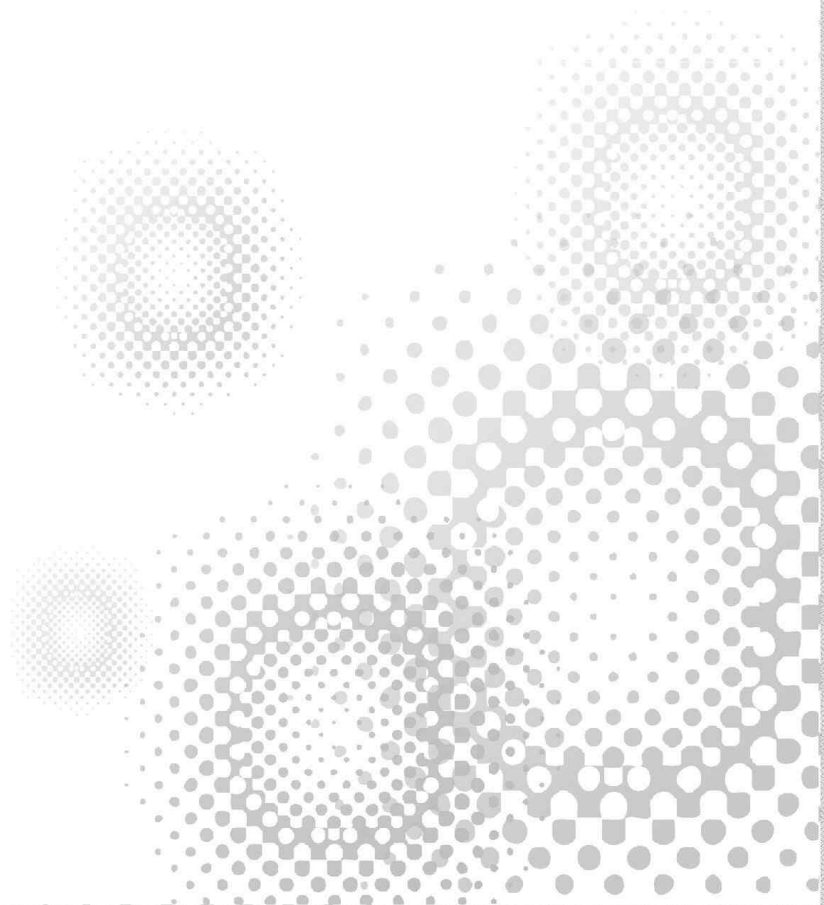
## 제7절 소결

- 기업신용평가(TCB) 기반 정부연구과제 심사체계 개편은 단기적으로는 평가절차의 합리화, 중장기적으로는 국가연구개발 거버넌스의 혁신을 실현하는 핵심 전략임
- 해당 제도가 정착될 경우, 첫 번째로 정부는 정확하고 공정한 심사체계를 확보 가능, 두 번째로 기업은 불편한 연구행정 부담을 줄이고, 기술기반의 공정한 경쟁환경 확보 가능, 세 번째로 사회는 데이터기반의 정책 결정이 가능한 연구개발 혁신생태계를 갖추게 될 것임
- 따라서, 본 연구는 과기정통부가 주도하는 “데이터 중심의 공정한 연구개발 생태계”로 나아가는 구체적 실행 모델로 제시 가능하고, 국가 기술혁신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의 출발점이 될 것임

## 제3장



# 범부처 통합 “인수창업(ETA) 지원 플랫폼” 구축 방안





## 제1절 연구 개요

###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가. 연구 배경

- 현재 우리나라는 ‘혁신의 정체’와 ‘지역 경제의 붕괴’라는 이중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인구 구조의 변화와 산업 생태계의 비효율성이 맞물려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
  - (혁신의 정체) 정부의 R&D 투자 대비 경제적 성과 창출의 구조적 한계를 가져오고 있으며 투입된 자본과 노력이 경제적 부가가치로 환원되지 않고 있는 상황
    - 이전된 기술건수가 대학은 전년 대비 증가(5,836건 6,138건)하였으나, 공공연구소가 전년 대비 감소(6,221건 5,938건)하여 기술이전율의 하락이 나타남
    - \* 기술이전율 = (조사대상년도) 기술이전 건수 / (조사대상년도) 신규확보(개발) 기술 건수

〈표 3-1〉 2023년도 공공연구기관의 신규 확보 기술

구분		신규확보기술(건)	이전기술(건)	기술이전율(%)
공공 연구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8,581	2,894	33.7
	특정연구기관	2,814	555	19.7
	전문생산기술연구소	2,170	533	24.6
	국공립연구기관	1,190	1,513	24.6
	기타 공공연구기관	1,588	443	27.9
	소계	16,343	5,938	36.3
대학	국공립대학	8,954	2,540	28.4
	사립대학	14,633	3,598	24.6
	소계	23,587	6,138	26.0
합계		39,930	12,076	30.2

- 기술 이전율은 최근 5~6년간 일정한 수준(약 35~38%)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2022년도 부터 감소하는 추세

〈표 3-2〉 연도별 기술 이전율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공공연구소	57.5	60.3	51.0	39.6	43.4	40.8	50.8	38.4	36.3
대학	25.8	25.0	27.4	30.5	30.3	31.1	33.3	26.7	26.0
전체	38.6	38.0	37.9	34.3	35.9	35.5	40.9	31.7	30.2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2024), 2024공공연구기관(대학, 연구소)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보고서

- (지역 경제의 붕괴) 지방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후계자가 부재한 상태로 기업 승계 시장의 구조적 미성숙으로 인해 우량 흑자 중소기업 소멸 위험
  - 경영자가 60세 이상인 중소기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3분의 1에 달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중소기업은 자녀부재, 승계기피 등의 사유로 후계자가 없는 추세
    - \* 경영자 60세 이상 중소기업의 후계자 부재율은 28.6%로 추정(자본시장연구원, '24.11월)
  - 대다수 중소기업 CEO는 60대 이상을 기업승계 적정시기로 인식하나, 상당수는 구체적 후계계획이 없는 등 승계준비는 미흡
    - CEO 설문에 의하면, 후계계획에 대해 ▲모름(25%), ▲없음(20.4%) 응답이 상당하고, 후계계획 없는 기업 중 일부는 폐업까지도 고려



[그림 3-1] 60세 이상 CEO 후계 인식 및 대응(중기연 설문, '24.7.)

- 자녀승계 계획 없을 경우 ▲전문경영인 영입\*, ▲매각, ▲임직원승계\* 등 M&A 유형을 대안으로 모색
  - \* ▲전문경영인 영입, ▲임직원 승계는 결국에는 친족 외 제3자에게 기업의 지분 이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M&A를 통한 기업승계 수요로 고려 가능



[그림 3-2] 자녀에게 승계할 계획이 없거나, 결정하지 못한 이유



[그림 3-3] 자녀에게 승계하지 않을 경우, 기업의 향후 계획

※ 출처 : 관계부처합동(2025.12.24.),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 조성방안

- 현재 정부의 M&A 및 인수창업 지원 정책은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운영되며,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정책 연계가 미흡하여 한계 존재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 등 관계기관에서 M&A 관련 플랫폼이 분산되어 개별적으로 운영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을 촉진하기 위해 'M&A 정보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 제공 및 온라인 전문가 상담 등을 지원
    -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의 원활한 기술 기반 M&A를 위해 'M&A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도·매수 희망 기업 매칭, 공동 중개, 인수자금 보증 등을 지원
    -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의 성장과 구조조정을 위해 'M&A 보증'을 지원하고 있으며 합병, 주식인수 및 영업양수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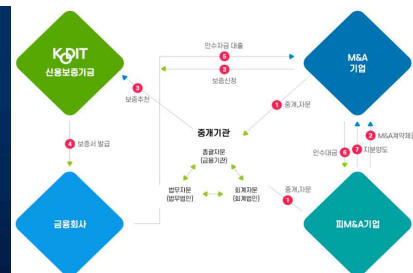
[그림 3-4]

중소벤처기업부 M&A 정보망



[그림 3-5]

기술보증기금 M&A 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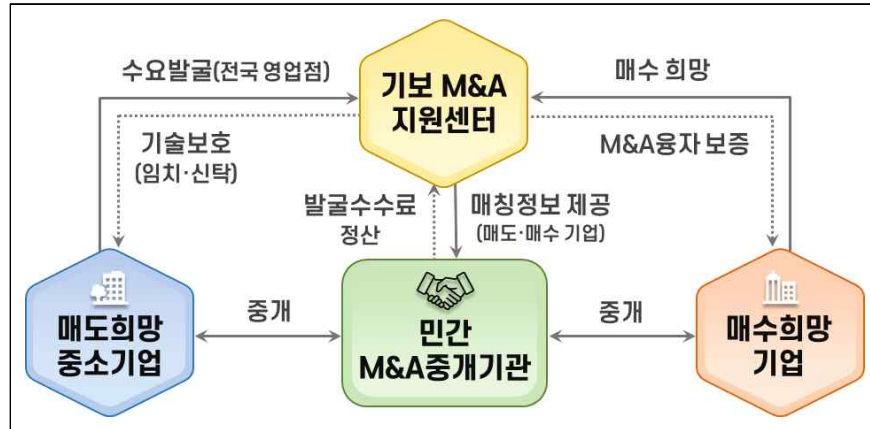


[그림 3-6]

신용보증기금 M&A 보증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2025.12.24.), 보도자료 「중기부, 중소기업 경영자 고령화에 대응하여 M&A 방식의 기업승계 활성화 기반 조성한다」

- 우리나라는 창업지원을 위한 R&D, 창업·기술 사업화 지원 정책이 개별 법률에 따라 소관 부처별로 분산 운영되어 사업간 연계를 통한 효율성이 미비
  - 주요국의 경우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R&D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단일 부처가 아이디어 선별, 기술·인프라 지원 등 창업 전주기에 걸친 통합 지원체계 운영
  - 아이디어 발굴에서 R&D, 창업, 자금지원까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기술창업 관련 정부 재정사업이 이원화
    - ※ 출처: 국회예산정책처(2014.11.), 벤처·창업 지원 정책의 주요 쟁점과 개선과제
- 정부는 민관협력 플랫폼의 중요성을 인지해 공공과 민간이 각자의 전문 영역을 전담하여 중소기업 M&A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원 노력
  -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이 위탁한 M&A 중개신청건에 대해 M&A 파트너스는 전문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보는 M&A 보증을 지원하는 형태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2025.11.27.), 보도자료 「제1회 벤처주간(11.26~12.2), 2025년 M&A 컨퍼런스로 포문 연다」

[그림 3-기] 민간 M&A 중개기관과 관계기관 간 연계도

## 나. 연구 필요성

- ❑ 인수창업의 정책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장에서 인수창업 거래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한 통합적 정책 지원 체계 구축 필요

  - 창업가, 자금, 기업 정보 등 핵심 요소가 기관별·플랫폼별로 분절되어 상호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가 존재하고 있으며, 기관별 지원 수단이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통합 지원 체계 부재
- ❑ 정보의 비대칭성과 비효율성으로 인해 데이터가 파편화되어 있어 거래의 비효율성이 발생되므로 통합 데이터 기반 매칭 체계 구축 필요

  - M&A 매물 정보가 민간 자문사, 회계법인, 공공기관 등에 분산되어 있으며 신뢰성 있는 재무 및 리스크 정보 접근성 제한
  - 예비 창업자의 기업 탐색이 비공식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아날로그 방식을 지속하고 있으므로 데이터 기반의 인수창업 의사결정 체계 구축 필요
  - 인수창업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통합하는 3개 계층 데이터\*를 'K-ETA 통합 데이터 레이크'에 집적하고 AI 기반 매칭시스템 구축 필요
  - \* 1계층(공공 데이터 : 국세청 재무 데이터, 특허청 NTB 기술 정보 등), 2계층(민간 데이터 : 리스팅 플랫폼 기업 데이터, AI 기업가치 평가 데이터 등), 3계층(사용자 데이터 : 예비 창업가 경력·전공·기술 역량 프로파일링 정보 등)
- ❑ 자금력이 부족한 민간 기술과 시장 친화적인 딜 소싱 역량이 부족한 공공 자금을 극복하기 위해 민관 연계형 금융 매칭 체계 구축 필요

  - 민간 플랫폼에서 최적 매칭이 이루어졌음에도 전통적 담보 중심 심사 기준으로 정책금융 지원이 거절되어 거래가 결렬되는 사례 발생

- 혁신 기술 및 성장 잠재력보다 담보 중심 평가가 적용되는 구조적 한계 존재로 인해 인수 창업 특화 금융 심사 기준 및 보증 체계 도입 필요
- 인수창업 전주기 지원 단계별 지원 주체가 상이하여 창업가의 탐색 비용이 과도하므로 이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과 민관협력 기반 플랫폼 구축 필요
  - 단계별(탐색-매칭-자금조달-기술이전-인수-PMI-성장)로 인수창업 전주기를 지원하는 원스톱 체계 구축 필요
  - 정부가 직접 시스템을 개발하는 방식이 아닌 민간 플랫폼 기술력을 활용한 민관협력(PPP) 방식 적용 필요
- 기존 ‘맨땅 창업(Greenfield Startup)’ 중심 정책의 한계 극복 및 압도적 자본 효율성 확보 필요
  -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자본, 조직, 제품을 제로(Zero)에서부터 구축해 나가는 ‘맨땅 창업’은 소위 ‘신생의 부채(Liability of Newness)’로 인해 극단적인 실패율을 직면함
    - 전체 스타트업의 약 90%가 5년 내에 폐업하며, 흑자 전환(Profitability) 지점까지 평균 24~36개월 이상의 고통스러운 적자 기간과 심각한 지분 희석을 겪음
  - 반면, 기존 기업을 인수하는 인수창업(ETA)은 ‘Day 1 Cash Flow(인수 첫날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를 기반으로 시장 검증 리스크를 원천 제거함
    - 스탠퍼드 대학교 경영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ETA를 시도한 창업자의 57%가 인수에 성공하며, 연평균 35.1%의 세전 내부수익률(IRR)과 4.5배의 투자수익률(ROI)이라는 경이로운 성과를 창출
  - 즉, 0에서 1을 만드는 맨땅 창업보다, 이미 돈을 벌고 있는 비즈니스에 딥테크를 접목하여 1을 100으로 스케일업하는 통제 가능한 운영의 영역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

〈표 3-3〉 초기 리스크 및 자본 효율성 비교

평가항목	맨땅 창업(Greenfield Startup)	이전기술(건) / 기술이전율(%)
장기 생존율	10% 내외(5년 내 90% 폐업)	57% (인수 성공률) / 높은 장기 수익률 유지
현금 흐름 창출 시점	평균 24~36개월 이상 소요 (초기 적자 극심)	인수 직후 즉시 (Day 1부터 흑자 현금흐름 향유)
주요 핵심 리스크	시장 수요 미존재, 제품 개발 실패, 자금 고갈	M&A 실사 누락, 부적절한 인수 가치 산정, 통합(PMI) 실패
자금 조달 및 지분율	지속적인 VC 에쿼티 투자로 창업자 지분 급격히 희석	인수금융(부채) 중심 활용 / 창업자 지분 방어 용이

## 2. 연구목적 및 내용

### 가. 연구 목적

- 기술 이전율 정체, 중소기업 경영자 고령화, 후계자 부재에 따른 우량기업 소멸 위험 등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수창업(ETA)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범부처 통합 지원체계를 설계

### 나. 연구 내용

- ① 국내외 환경 분석(정책·시장·사회·기술)
  - 국내 인수창업 및 기업승계 시장의 구조적 문제 진단
  - 미국·유럽·일본·중국 등 주요국 ETA 정책 및 금융·교육·플랫폼 사례분석
  - 정책적 시사점 및 한국형 모델 도출
- ② 인수창업 지원 플랫폼 개념 정립 및 범위 설정
  - 인수창업 및 지원 플랫폼의 정의 구체화
  - 전주기 지원을 위한 6대 핵심 기능 체계화(딜 소싱, 자금, 기술이전, 교육, 정책지원, 커뮤니티)
- ③ K-ETA 통합 데이터 기반 매칭 체계 설계
  - 공공·민간·사용자 데이터를 통합한 데이터 레이크 구축 방안
  - AI 기반 매칭 및 가치평가 지원 시스템 설계
  - 디지털 기반 거래 안전망(법률·실사·에스크로) 체계 마련
- ④ 민관협력(PPP) 고도화 모델 제안
  - 공공 정책금융과 민간 플랫폼 역량을 결합한 Embedded Finance 모델 설계
  - 인수창업 특화 금융·보증·투자 연계 체계 마련
  - 중개기관 등록제 및 품질관리 체계 제안
- ⑤ 실행 로드맵 및 추진체계 수립
  - 단계별 추진전략 및 세부 과제 도출
  - 사업 추진체계 및 관리·평가 방안 제시
  - 정량·정성적 기대효과 분석

## 제2절 인수창업 지원 플랫폼의 정의 및 범위

### 1. 인수창업의 정의 및 범위

#### 가. 인수창업 정의

- 인수 : 특정 기업에 대해 지배권을 행사하는 데 충분한 주식 지분을 획득하는 일  
※ 출처 : 네이버 사전
- 창업 :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 출처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 인수창업 : 창업자 고령화 등의 문제로 승계를 앞둔 기업을 예비 창업자 등이 인수해 경영하는 것  
※ 출처 : 서울경제(2025.08.29.), 승계 어려운 중소기업 기관들 손잡고 M&A 돕는다

#### 나. 인수창업 범위

- 인수는 크게 4가지(주식 인수(지분 인수), 자산 인수, 사업 인수(영업양수도), 합병)으로 나눌 수 있으며 기업의 경영권 또는 자산을 이전받아 지배력을 확보
  - (주식 인수(지분 인수)) 경영권 확보를 목적으로 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50% 이상 또는 실질 지배력 확보 가능
  - (자산 인수) 단순 장비를 구매하는 것이 아닌 공장, 브랜드 또는 영업권에서 사업부, 설비, 특허 등 자산을 매입
  - (사업 인수(영업양수도)) 고객, 계약, 인력, 브랜드 등을 포함하여 사업 전체 또는 핵심 사업부를 인수
  - (합병) A기업이 B기업으로 흡수되는 흡수합병, A기업과 B기업이 새롭게 C기업으로 합병하는 신설합병
- 창업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 창업의 범위에 포함

〈표 3-4〉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구분	내용
상속·증여 승계	• 기존 사업을 상속·증여 받아 계속 운영
동일 업종 추가 설립	• 기존 사업자가 동일 업종 법인을 새로 설립
폐업 후 동일 업종 재개	•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

구분	내용
자회사 설립	• 기존 기업이 지분 50% 이상 보유한 법인 설립
과점주주 설립	• 기존 기업 대주주가 새 법인 설립
기업형태 변경	• 개인기업 → 법인 전환 등 형태 변경

※ 예외적으로 폐업 후 일정 기간 경과 시, 창업 후 7년 이내 특정 요건 충족 시에는 창업으로 간주

## 2. 인수창업 지원 플랫폼의 정의 및 범위

### 가. 인수창업 지원 플랫폼 정의

- 인수창업 지원 플랫폼: 창업자가 이미 시장에서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과 현금흐름을 보유한 기존 기업을 인수하여 자신의 역량을 덧입혀 재도약시키는 인수창업을 지원하는 플랫폼

### 나. 인수창업 지원 플랫폼 범위

- ‘인수창업 지원 플랫폼’은 인수창업의 전 주기를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으로 6가지 핵심 기능(딜 소싱-자금-기술이전-교육-정책 지원-커뮤니티) 제공

〈표 3-5〉 인수창업 지원 플랫폼의 기능 범위

순번	구분	기능	내용
1	딜 소싱	지자체 협업을 통한 '전국망 딜 파이프라인' 구축	• 전국 단위 인수 대상 기업 발굴 및 매칭을 위한 딜 파이프라인 구축 • 공공·민간 데이터를 통합한 전국 매물 정보 플랫폼화 • AI 기반 창업가-기업 매칭 기능 등
2	자금	'ETA 특화 금융 패키지'의 플랫폼 내재화	• 인수창업 전용 금융·보증·투자 연계 기능 내재화 • 플랫폼 기반 원스톱 자금 조달 체계 구축 • 국가기술은행(NTB) 데이터 API 연동 및 AI 기반 기술 추천 등
3	기술 이전	NTB 연동을 통한 'AI-Rollup' 및 기술 사업화	• 인수 이후 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기술 도입·사업화 지원 • 공공 기술 데이터와 인수기업을 연결하는 기술 매칭 등
4	교육	실전형 'ETA 부트캠프' 및 전문가 양성	• 인수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인증·멘토링 • 딜 소싱, 가치평가, 계약, PMI 등 전 과정 온라인·오프라인 교육 등
5	정책 지원	법률/실사/에스크로 등 거래 안전망 구축	• 중소형 M&A 거래 리스크 완화 및 정책 연계 지원 • 표준화된 디지털 거래 인프라 제공 • M&A 실사·법률·회계 비용 바우처 연계 등
6	커뮤니티	성공 사례 확산 및 생태계 문화 조성	• 인수창업 문화 확산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커뮤니티 조성 • 성공 사례 데이터베이스 및 스토리 공유 등

## 제3절 국내·외 현황 분석

### 1. 정책현황(P)

#### 가. 국내 정책현황

- 중앙부처·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가 확대되고 있으나 인수창업 전용 트랙은 분산 운영되는 구조 지속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기반으로 창업 지원 정책이 매년 확장되고 있으나 창업 지원 정책 확대가 인수창업 특화 체계로 연결되지 못하는 상황
    - '26년도 창업지원사업 총예산은 3조 4,645억 원으로 전년 3조 2,940억 원 대비 5.2% 증가하였으나, 사업 설계는 신설·일반창업 중심 구조가 유지되는 경향 지속

〈표 3-6〉 '20~'26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현황

구분	참여기관	사업규모
'20년	16개 중앙부처	90개 사업, 14,517억원
'21년	14개 중앙부처	89개 사업, 13,812억원(중앙부처)
	17개 광역지자체	104개 사업 811억원(광역지자체)
'22년	14개 중앙부처	100개 사업, 35,578억원(중앙부처)
	17개 광역지자체	152개 사업, 885억원(광역지자체)
	63개 기초지자체	126개 사업, 205억원(기초지자체)
'23년	14개 중앙부처	102개 사업, 35,078억원(중앙부처)
	17개 광역지자체	176개 사업, 1,243억원(광역지자체)
	72개 기초지자체	148개 사업, 286억원(기초지자체)
'24년	11개 중앙부처	86개 사업, 35,621억원(중앙부처)
	17개 광역지자체	160개 사업, 1,167억원(광역지자체)
	71개 기초지자체	151개 사업, 283억원(기초지자체)
'25년	13개 중앙부처	87개사업, 31,190억원(중앙부처)
	17개 광역지자체	170개 사업, 1,338억원(광역지자체)
	88개 기초지자체	172개 사업, 412억원(기초지자체)
'26년	15개 중앙부처	88개사업, 32,740억원(중앙부처)
	17개 광역지자체	209개 사업, 1,417억원(광역지자체)
	79개 기초지자체	211개 사업, 488억원(기초지자체)

- 인수창업 시 자금 조달에 필요한 용자·보증 비중이 커지고 있으나 인수금융으로의 직접 연계는 사업별로 편차 발생
- 부처별 창업패키지에 인수창업 요소가 산재하여 수요자 입장에서도 제도 접근성과 단계별 안내·연계가 미흡한 문제 발생
  - 통합공고 체계는 구축되었으나 인수창업 단계별 지원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기 어려워 안내·연계 기능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
  -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승계형 중소기업 인수를 별도 제도권으로 정립하는 특별법 제정 추진 중
    -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2025.12), 2026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 「인수·합병 등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추진으로 M&A형 승계 정의·대상요건·지원근거 제도화 및 정책 토대 확립 추진
  - 특별법에 M&A 유형 기업승계 정의와 경영자 연령·경영기간 등 지원기준을 종합 규정하여 지원정책 토대 확보 방향 제시
    - 중소기업 승계의 법률적 근거 부재를 보완하고 정책대상·적용제외 기준을 명확화하여 정책집행 예측가능성 제고 및 운영기준 제시
    - 중소기업진흥법상 가업승계 정의 및 지원센터 근거를 특별법으로 이관하여 기업승계 전반 유기적 정책체계 기능 강화 및 운영 체계 정비

〈표 3-7〉 중소기업 승계 M&A 시 상법 특례 도입(안)

구분		특례 주요내용
절차 단축	주주총회	•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점 완화(2주전 → 7일전)
	계약서 공시	• 기간 단축(〈주총 2주전~합병후 6개월〉 → 〈7일전~6개월〉)
	채권자 보호	• 이의제기 기간 단축(1개월 이상 → 10일)
	소재불명 주주	• 소재불명 기간(현재 3년) 단축
소규모 합병		• 소규모 합병요건 완화(소멸회사 주식총수 10% → 20%)
소규모 영업 양수·도		• 소규모 영업(자산 10% 미만) 양도절차 완화(주주총회 → 이사회 승인)
주식매수청구권		• (청구) 기간 단축(20일 → 10일) • (매수) 청구후 2개월 → 6개월

- 기업승계지원센터 지정운영과 통합플랫폼 구축, 중개기관 등록제 도입 등 인프라 구축과 M&A 단계별 비용지원 근거 규정 추진
  - 공공·민간 기관을 지원센터로 지정해 수요발굴·승계전략 컨설팅과 자금·보증·교육 등 지원프로그램 원스톱 연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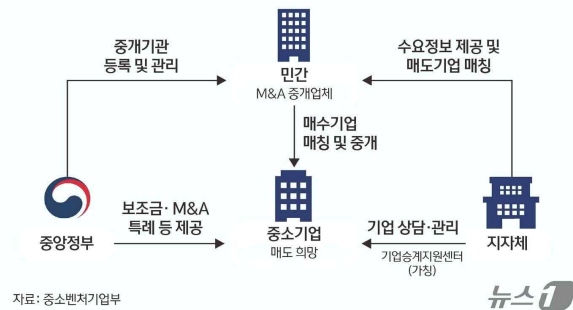
- 기업승계 M&A 플랫폼을 기술보증기금 중심으로 시범 구축해 진성 수요 선별과 매수·매도 희망수요 매칭 서비스 제공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2025.12),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 조성 방안

- 중기부는 「2025년도 M&A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M&A 정보망 기반 자문연계와 기업 가치평가비용 지원을 제공하여 거래준비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바우처 체계 운영
  - 사업운영은 한국벤처캐피탈협회(M&A 지원센터)가 담당하여 연중 수시로 M&A 희망 중소·벤처기업 및 정보망 등록 자문기관을 대상으로 추진
    - '25년 기준으로 사업예산은 617백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M&A정보망 운영·자문기관 등록관리·기업가치평가비용 지원·인식개선 사업 등으로 구성
    - 매도·매수희망기업 중개업무는 기술보증기금 ‘민관협력 M&A 플랫폼’으로 이관
  - 기업가치평가비용 지원은 정보망 등록 자문기관과 자문계약을 체결한 평균매출액(3년) 400억 원 이하 중소기업 등 요건 충족 기업을 대상으로 제공
    - 기업실사(기업가치평가) 수수료의 40%를 최대 1,500만원 한도 지원하며 벤처기업은 수수료 60%를 최대 2,000만원 한도 지원
    - 신청은 M&A 정보망 온라인 접수로 진행하며 평가보고서·전략대상 평가 의견 제출 후 운영기관 점검과 서면·현장심사,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 집행

추진 과제	
정책 기반 확립	신뢰도 높은 M&A 시장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범주 확장(기업승계-기업+M&amp;A형승계)</li> <li>☑ 승계 지원 정책 대상 명확화(경영자 연령 등)</li> <li>☑ 지원 인프라(기업승계지원센터) 구축·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승계 M&amp;A 중개기관 등록제 도입 * 등록 중개기관을 통한 M&amp;A 진행 비용 지원</li> <li>☑ M&amp;A 플랫폼 구축·운영</li> </ul>
M&A 친화적 환경 조성	기업승계 및 승계 후 성장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승계 M&amp;A 시 상법 절차 촉진 특례 도입</li> <li>☑ 등기절차 편의 제고</li> <li>☑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 도출 *업계 전문가 의견 수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승계 M&amp;A 정부 지원 및 예산 근거(계정 설치)</li> <li>☑ 정책 금융 우대 근거 마련</li> <li>☑ 모험자본 조성 및 승계 후 성장지원 추진</li> </ul>

기업승계형 M&A 지원절차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2025.12),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 조성 방안

[그림 3-8] 「중소기업 M&A 특별법」 추진 과제 및 지원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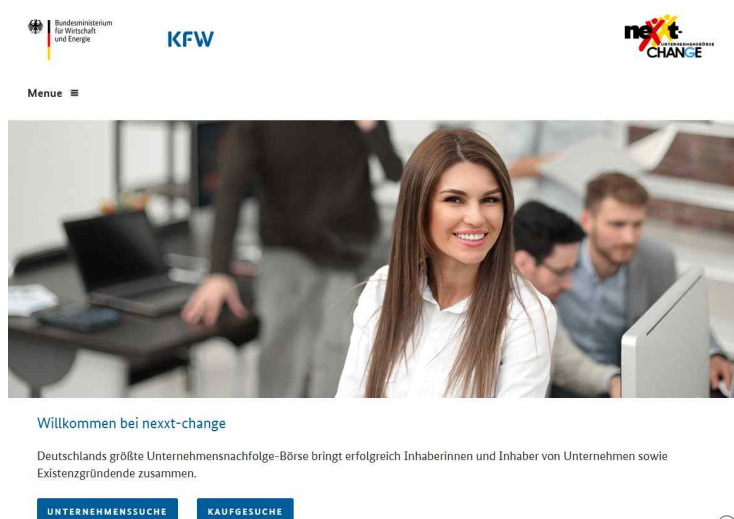


## 유럽

- 유럽연합(EU)은 ‘Business transfer(기업양도·승계)’를 SME 생애주기 정책으로 규정하고, 회원국에 법·세제·행정 장벽 완화와 지원서비스 구축을 권고하는 상위 정책프레임을 지속 운영

  - 1994년 권고 및 후속 정책을 통해 ‘기존기업 인수’가 신설창업의 대안임을 명시하고, 양도자·인수자 모두를 지원하는 환경(규제·조세·행정) 개선 필요를 제시
    - 승계는 규제·세제·행정환경에 좌우되는 영역으로 보고, 회원국에 절차 간소화·세제정비·지원체계 확충을 정책패키지로 권고
  - 단일시장프로그램(SMP) 등 EU 재정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생애주기 전반(창업역량·시장 접근·네트워크)을 지원하고, EYE를 통해 예비 인수자의 경영·운영역량 학습을 제도적으로 촉진
    - ‘Erasmus for Young Entrepreneurs(EYE)’는 국경 간 교류형 프로그램으로 경험 있는 경영자와의 현장 학습을 통해 창업·경영역량을 강화하도록 설계
      - ※ 출처 : EU SME 공식 홈페이지(single-market-economy.ec.europa.eu)
- 독일은 공공-민간 연계 승계 매칭 플랫폼(nexxt-change)과 정책금융(KfW)·자문보조를 결합해 ‘거래발굴-자금-자문’ 지원을 운영하는 기업승계형 인수창업 정책체계 구축

  - nexxt-change를 전국 단위 ‘기업승계 거래소’로 운영해 은퇴 경영자-예비 인수자 매칭과 지역 파트너(상공회의소 등) 기반 상담·연계를 추진
    - KfW는 플랫폼 성과(중개 실적 누적 등)를 언급하며 세대교체 지원 인프라로 활용



[그림 3-11] 독일 최대 규모의 기업 승계 교류 플랫폼 ‘nexxt-change’

- KfW는 ‘승계도 창업’으로 규정하고 ERP 창업·승계 금융을 통해 기업 인수(승계)·지분 취득 자금을 정책금융으로 지원
  - ERP-Gründerkredit StartGeld(067) 등으로 초기 인수·운영자금을 지원하고, Gründung und Nachfolge 상품군을 별도로 안내
- BAFA ‘Unternehmensberatung(기업자문)’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외부 컨설팅 비용을 보조하여 승계·인수 준비역량을 뒷받침
  - ※ 출처 : nexxt-change 홈페이지(nexxt-change.org)
- 프랑스는 기업양도·인수(cession-reprise) 정책에서 ‘종업원 정보제공 의무-세제 인센티브-공공보증·전용대출(Bpifrance)’을 결합해 사회적 승계와 인수금융 접근성을 동시에 강화
  - 기업 양도 시 종업원에게 매각 의사와 매수 제안 가능성을 사전 통지하도록 규정(상법 조항 근거)해 종업원 승계·제3자 승계의 선택지를 제도적으로 확보
    - 통지 후 2개월의 기간 규정 등 절차 운영 가이드를 정부 문서로 제공
  - 경영자 은퇴와 연계된 지분양도에 대해 50만 유로 고정 공제(자본이득) 제도를 운영하고, 2025년 재정법으로 적용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해 승계계획의 예측가능성 제고
  - Bpifrance는 ‘Garantie Transmission’(인수·승계 금융 보증)과 ‘Prêt Transmission’(전용대출) 등으로 은행대출 레버리지와 인수금융 구조 다변화를 지원
    - ※ 출처 : 프랑스 법령 홈페이지(legifrance.gouv.fr)

〈표 3-8〉 유럽 주요국 인수창업 지원 정책 비교

구분	유럽연합	독일	프랑스
핵심 기초	SME 생애주기 정책화	민관 협력 플랫폼 기반 매칭	사회적 승계 및 세제 혜택 강화
주요 플랫폼	단일시장프로그램(SMP)	nexxt-change (전국 거래소)	Cession-reprise 시스템
금융 지원	저리 융자 및 공공 보증	KfW ERP 창업·승계 금융	Bpifrance 전용 보증 및 대출
법·세제	비즈니스 이전 권고안	가업승계 세제 지원 체계	Loi Hamon(종업원 통지 의무)
특이 사항	EYE(경험 전수 프로그램)	지역 상공회의소 자문 연계	자본이득세 공제(기한 연장)

## 중국

- 중국 중앙정부는 ‘신품질 생산력’ 확보를 목표로 M&A 제도개편과 승계·전환 등록제도 정비를 병행하는 정책패키지 추진 지속
  - CSRC는 2024.9.24. 「상장사 M&A·재편 시장개혁 의견」 을 통해 신흥산업 중심 인수합병을 제도적으로 촉진하는 방향 제시
    - 상장사 중심 전환·업그레이드 목적의 크로스오버 M&A와 미수익 자산 인수를 지원하여 혁신자산 편입과 산업재편 유연성 확대 추진
    - 간이심사 신설과 분할지급·전환사채 등 지급수단 허용으로 자금집행 유연화, 심사·승인 기간 단축 및 거래종결 예측가능성 제고
  - ‘국무원령 755(2022)’에서 개별사업자 운영자 변경과 ‘개인사업자 → 기업’ 전환을 허용해 점포 승계·인수형 창업의 제도적 통로 마련
    - 운영자 변경을 ‘폐업 후 재개업’ 방식에서 변경등록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여 절차비용·시간부담 절감과 거래지연요인 축소 추진
    - 전환·변경 시 세금정산·채권채무 처리와 권리침해 금지를 의무화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자발성 원칙을 관련부처에 병행 규정
  - SAMR 「개별사업자 등록관리 규정」 시행으로 변경·전환 시 신용코드·설립일·허가 연속을 인정해 영업연속성과 거래가능성 제고
    - 변경등록 전환 시 설립일·통일사회신용코드 연속을 규정하여 인수 후 영업공백 최소화와 거래신용 연속성 확보 및 영업연속성 보장
    - 기존 허가의 변경·연속과 기록·연보 자료 이관·공시를 규정하여 사후관리 강화와 대외 신뢰성·투명성 기반의 체계적 확충 추진

〈표 3-9〉 중국 개별사업자 승계 및 기업 전환 제도 개선 비교

구분	제도 개선 전	제도 개선 후(국무원령 755)
승계/인수 방식	‘폐업 후 신규 등록’(先注销后成立)	‘직접 변경 등록’(直接관심)
영업 연속성	설립일·신용코드 초기화(경력 단절)	설립일·통일사회신용코드 유지
허가/자격	각종 인허가 신규 재취득 필요	기존 인허가 효력 승계 및 연속
거래 비용	폐업·재등록에 따른 시간 및 비용 과다	절차 간소화를 통한 행정 비용 절감
신뢰도	신규 업체로 분류되어 대외 신용 하락	기존 업력 인정으로 대외 신용 유지

※ 출처 :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2024.09), 상장사 인수합병·재편 시장 개혁 심화에 관한 의견

**일본**

- 일본은 2007년 초고령사회 진입 이후 후계자 부재 대응을 위해 제3자 승계(M&A)를 정책 수단으로 정리하고, 법·공적창구·거래규범·보조금 패키지로 추진체계를 고도화

  - 「경영승계원활화법(中小企業経営承継円滑化法)」을 기반으로 세제·금융지원과 민법·회사법 특례를 묶어 승계 실행의 제도적 장애요인을 완화하는 구조 운영
    - 세제지원(상속·증여세 납세유예·면제)과 금융지원(신용보험·정책금융 특례) 적용을 위한 ‘인정’ 체계를 두어 지원요건과 절차를 제도적으로 정합화
    - 유류분(민법) 특례와 소재불명 주주(회사법) 특례 등 지배구조·권리관계 이슈를 제도권에서 처리하도록 설계해 승계 과정의 불확실성 축소
  - 중소기업청(中小企業庁) 주도로 전국 47개 도도부현 ‘사업승계·인계 지원센터’를 원스톱 창구로 운영하고, 가이드라인·등록제·보조금으로 민간 중개 품질과 사후통합(PMI)까지 관리하는 체계 강화
    - 2021년 4월 ‘사업승계 네트워크’와 ‘사업인계지원센터’를 통합해 ‘사업승계·인계 지원센터’로 개편하고, 상담 → 매칭 → 민간전문기관 연계를 공적 시스템으로 표준화
    - 센터 실적은 제3자 승계(M&A) 상담 증가와 함께 2024년도 제3자 승계 성약 2,132건(역대 최고) 등으로 정책 집행성과를 공식적으로 축적
    - ‘중소 M&A 가이드라인’과 ‘M&A 지원기관 등록제’를 통해 준수선언·정보제공 창구·등록 취소 등 품질관리 장치를 두고, 보조금(전문가 활용·PMI 등)과 등록기관 활용을 연동해 시장 신뢰도 제고

〈표 3-10〉 일본 사업승계 M&A 지원제도

범주	지원제도	
지원체계정비	사업승계인지원센터	
	M&A지원기관 등록제도	
세제우대조치	등록면허세/부동산취득세	
	경영자원집약화세제	설비투자
		고용 확보
		준비금 적립
보조금	사업승계·인계보조금	전문가 활용
		설비투자 등
금융지원	「경영승계원활화법」에 의거한 금융지원	

※ 출처 : 일본중소기업청(2024), 중소기업 경영승계 원활화법(中小企業経営承継円滑化法) 신청 매뉴얼: 금융지원편

## 2. 산업/시장현황(E)

### 가. 국내 산업/시장현황

- 국내 ETA 생태계에서 4대 요소 결합 미흡이 누적되며 딜 탐색·실사·학습 비용이 함께 늘어 거래 성사율이 하락하는 구조 고착
  - 60세 이상 CEO 중소기업 236만개 중 28.6%인 67.5만개가 후계자 부재로 지속경영 담보가 곤란한 리스크 확대
    - 승계 실패 누적 시 지역 고용효과 큰 업종에서 고용충격으로 전이될 가능성 상존 상황
    - 후계자 부재 기업 73.8%가 서울 외 지역에 소재해 비수도권 중심의 지역경제·고용 기반 약화가 동시 발생할 우려 확대

〈표 3-11〉 전체 업종 기준 중소기업 후계자 부재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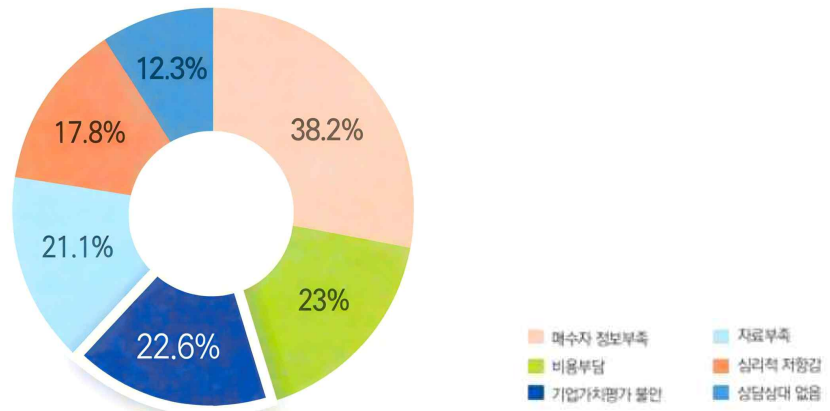
지역	중소기업수(전체)	중소기업수 (60세 이상)	후계 부재율	후계 부재기업 (기업수)	후계 부재기업 (지역분포)
서울	1,666,401	489,589	36.1%	176,741	26.2%
경기	2,110,760	620,141	27.2%	168,678	25.0%
인천	429,618	126,222	29.2%	36,857	5.5%
충북	239,131	70,257	25.2%	17,705	2.6%
충남	328,214	96,429	25.6%	24,686	3.7%
대전	205,290	60,314	27.0%	16,285	2.4%
세종	45,293	13,307	28.3%	3,766	0.6%
전북	283,568	83,312	24.8%	20,661	3.1%
전남	294,743	86,595	24.4%	21,129	3.1%
광주	205,262	60,306	28.1%	16,946	2.5%
강원	242,846	71,348	24.4%	17,409	2.6%
대구	344,260	101,144	28.0%	28,320	4.2%
경북	398,850	117,182	24.1%	28,241	4.2%
경남	482,366	141,719	25.1%	35,572	5.3%
부산	493,459	144,978	27.9%	40,449	6.0%
울산	141,974	41,712	25.0%	10,428	1.5%
제주	130,691	38,397	25.1%	9,638	1.4%
<b>합계</b>	<b>8,042,726</b>	<b>2,362,953</b>	<b>28.6%</b>	<b>675,805</b>	<b>100.0%</b>

- 기업승계 M&A 수요 21만개 추정과 향후 10년 연평균 2.84% 증가 전망이 맞물려 승계형 인수 수요 대응 압력 가중
  - 2034년 31만개 수요 전망으로 잠재 거래량이 급팽창하며 단계별 지원·정보·금융·교육 연계 수요가 동반 확대
  - 소상공인 제외 고용효과 큰 기업 수요 1.3만개와 고용 26만명 규모를 고려한 선제적 정책·금융·인프라 설계 필요성 증대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2025.12),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 조성 방안

□ [딜] 고비용 오프라인 중개 구조와 플랫폼 부재, 중개 불신이 결합해 중소형 거래 진입이 제약되는 병목 심화·지속 상황

- 중개업체 신뢰도는 신뢰 8.8% 대비 신뢰하기 어렵다 41.1%로 불신 우위가 형성되어 거래 의사결정 지연 구조 고착
  - 중개 신뢰 미흡이 정보부족·비용부담과 결합해 매수자 탐색기간 장기화와 검증비용 과다로 이어지는 흐름이 구조적으로 지속 요인
  - 중개 불신이 기업가치평가 불안과 분쟁 리스크로 전이되어 협상 장기화·거래 포기 가능성을 동시에 확대하는 흐름 지속



[그림 3-12] CEO들의 M&A 미진행 요인

- 대주주 수 평균 3.77명 수준의 소기업에도 상법 최소기간을 일률 적용해 중소형 거래의 절차 지연과 불확실성이 잔존
  - 주총·공시 등 절차 최소기간 부여가 중소형 M&A에서 협상·클로징 지연 비용으로 전이 되어 비용 부담이 누적되는 구조 지속
  - 부동산 소재지에서만 등기 처리가 가능한 제약이 다지역 보유기업 인수 시 행정비용과 처리기간을 동시 증가시키는 요인 확대

- [비용] M&A 준비·진행·이후 단계별 비용이 누적되나 특화 지원이 미흡해 거래비용 장벽이 지속되는 구조 고착 상황
  - 교섭자료(TM) 제작비용이 최대 5천만 원 수준으로 소요되어 준비 단계부터 초기 진입 비용이 과다해지는 요인 확대
    - 보안이 핵심인 교섭자료를 외부 전문가에 의뢰하는 관행이 일반화되어 중소기업의 준비 비용 부담이 지속 상승하는 구조
    - 준비단계 비용 지원 미흡이 기업승계 M&A 선호도 저하와 시장 참여 위축을 유발해 거래 탐색기간을 장기화시키는 양상
  - 기업가치평가 건당 최소 2천만 원과 실사 대략 3천만 원, 중개수수료 2~3%가 결합해 중소형 딜 비용부담이 복잡화
    - 인수자금 외 부대비용이 다중 발생해 매수자 부담이 확대되고 자금집행 지연과 거래 포기 위험이 중소기업에서 동시 확대되는 상황
    - PMI·노후설비 개선 등 인수 후 비용이 추가되어 제2의 창업 수준 재무부담으로 인식되는 사례가 반복·확산되는 흐름
- 인구 고령화 추세 속 제조 중소기업 CEO 고령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며 후계자 부재와 승계 압박이 가파르게 확대되는 흐름
  - 2012~2023년 60세 이상 비중 변화가 전체 인구 10.7%p 증가 대비 제조 중소기업 CEO 22.7%p 증가로 격차 확대
    - 최근 5년 제조 중소기업 수를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만 유일하게 증가하여 고령 경영 비중이 구조적으로 확대되는 추세
    - 고령화 속도 격차가 후계자 부재와 결합해 승계 실패가 폐업·고용충격으로 전이될 리스크가 누적·확대되는 구조 지속
  - CEO 설문에서 후계계획 모름 25%와 없음 20.4%가 확인되어 승계 준비 미흡이 구조화 되고 대응 시점이 지연되는 상황
    - 후계계획 없는 기업 일부가 폐업까지 고려하는 응답이 나타나 기업가치 하락과 지역 고용 기반 약화 우려가 동시 확대되는 상황
    - 승계 계획 부재가 조기 매각·M&A 탐색 수요를 자극해 단기 매출 증가와 시장 변동성 확대를 유발하는 흐름 지속 가능성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2025.12),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 조성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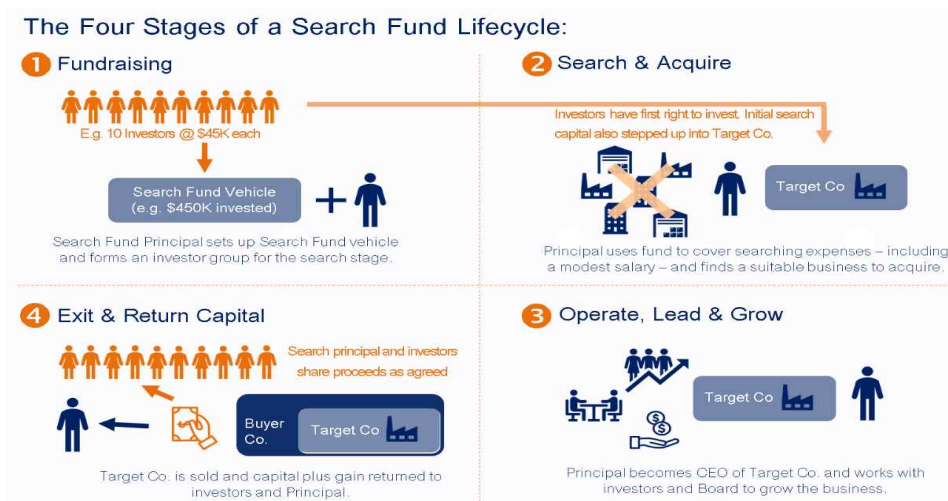
[그림 3-13] 60세 이상 CEO 후계 인식 및 대응(중기연 설문, '24.07)

- [자금] 담보·과거실적 중심 심사와 VC 투자 철학 미스매치가 결합해 인수금융 공백이 구조적으로 지속되는 병목 고착
  - 은행권은 담보·과거 실적 중심으로 인수창업자 역량·미래성장을 반영한 심사체계가 미흡해 자금 배분이 보수적으로 고착
    - 인수자 개인을 대상으로 한 전용 인수금융 상품 공급이 사실상 단절되어 자기자본 부담 확대와 거래 성사율 저하로 전이되는 상황
    - 가치평가 최소 2천만 원과 실사 3천만 원 등 거래비용이 추가되어 인수자금 외 초기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병목 심화 구조
  - VC는 신주투자 선호로 구주 인수 기반 ETA와 투자 철학이 상충해 성장 자본 유입이 제한되고 레버리지 설계가 제약되는 상황
    - 구주 매입자금이 기업 혁신투자로 전환되기 어렵다는 인식이 투자심사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동하는 구조 지속 가능성 확대
    - 정책금융도 피인수 기업 담보력 중심 심사가 유지되어 자산 취약 창업가 진입 장벽과 보증 접근성 한계가 장기 잔존하는 상황

## 나. 해외 산업/시장현황

### 미국

- 미국 ETA 시장은 베이비부머 은퇴 확산으로 소기업 소유권 이전 수요가 급증하는 구조 형성
  - ‘Silver Tsunami’로 향후 10년 내 베이비부머 소유 SMB\* 230만~300만개 이전 수요 확대
    - \* SMB(Small and Midsize Business) : 직원 100명 미만의 소기업과 1,000명 미만의 중견기업을 통칭하는 중소기업
    - 2024년 미국 비즈니스 매매시장 거래총액 9,546건·EV 75.9억 달러로 유동성 확인
    - 2025년 거래는 보합 수준이나 총 EV 79.5억 달러로 확대되며 가격 안정 국면 진입
  - 인수창업 타깃이 LMM 중심으로 형성되며 반복 현금흐름 사업에 수요 집중
    - LMM을 연매출 500만~5천만 달러 구간으로 정의하는 분류 확산
    - 플랫폼 기반 데이터 축적으로 매물 탐색·실사 비용을 낮추는 디지털 전환 가속
- 미국은 Search Fund 생태계와 SBA 정책금융이 결합되어 개인 주도의 인수창업 경로가 제도화된 시장 인프라 확립
  - Search Fund\*는 1984년 이후 누적 성과지표가 축적되며 대체투자 자산군으로 정착
    - \* 젊은 경영가(Searcher)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기존 중소기업을 인수하고 직접 경영하여 성장시킨 뒤, 5~7년 후 매각(Exit)하여 수익을 내는 모델
    - 2024 Search Fund Study 기준 전체 IRR 35.1%, ROI 4.5배 성과 제시
    - 서처(Searcher) 1인당 중위 탐색자금 50만 달러 등 표준 운영모형이 확산



※ 출처 : 포브스(2026.01), The ‘Silver Tsunami’ Is Reshaping Small Business: Why Exit Planning Can’t Wait

[그림 3-14] 미국 서처 펀드 구조

## 유럽

- ▣ 유럽은 기업승계 수요 급증과 실패 리스크 확대가 동시 진행되며 ETA형 제3자 인수시장 규모가 구조적으로 확대되는 국면 지속

  - EU는 매년 약 45만 개 기업이 소유권 이전을 추진하며 고용 200만 명이 영향을 받는 규모로 승계시장 수요 기반이 이미 형성된 상황
    - 승계 성공 시 평균 5개 일자리 보전 효과가 제시되어 공공부문 개입 논리와 시장 참여 유인이 강화
    - 매년 약 15만 개 기업이 승계 실패 위험에 노출되는 것으로 추정되어 우량기업 폐업·고용손실 우려가 상시화
  - 독일 등 핵심국에서 후계자 부족이 심화되며 Mittelstand 매물 확대와 거래 압력 동시 증대
    - KfW는 2027년까지 약 62.6만개 SME가 승계를 완료하려는 계획을 제시하며 연평균 12.5만 건 수준의 승계 수요 전망
    - 독일 SME 경영자 중 60세 이상 비중이 1/3 수준으로 제시되어 단기 승계수요의 구조적 확대가 확인

※ 출처 : FwW(2024), Status report on SME succession 2023
- ▣ 서치펀드 기반 ETA가 스페인·영국 중심으로 빠르게 집적되며 LMM 거래 트랙레코드가 축적되고, 반복거래 가능한 전문 생태계가 형성되는 추세

  - IESE 국제 서치펀드 연구에서 유럽이 누적 인수 146건 중 86건을 차지하며 글로벌 ETA 확산의 핵심 무대로 기능
    - 영국을 허브로 스페인, 독일, 프랑스에서 서치펀드 결성이 급증하고 있으며 전문 투자사와 대학 기반의 교육 네트워크가 긴밀히 결합
    - IESE 경영대학원 조사에 따르면 유럽 서치펀드는 미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인수 배수 (Multiple)를 형성하여 투자 매력도가 상승 중
  - 거래단위·밸류에이션이 중간 규모로 정착되며 전문 서비스·투자자본의 반복거래 기반이 강화
    - 국제 서치펀드 인수 중간값은 매입가 1,170만 달러, EBITDA 마진 24%, EBITDA 배수 5.7배로 제시되어 LMM 중심 가격대가 확인
    - 2023년 신규 펀드 59개·인수 31건 기록과 함께 인수 성공률 79%, 총 ROI 2.0배·IRR 18.1%가 제시되어 자산군으로서의 성과지표가 축적

※ 출처 : IESE(2024), International Search Funds

## 중국

- 민영경제 1억8,086만 경영주체 기반과 ‘접반(接班) 파고’가 결합되며 소규모 사업체부터 중소기업까지 인수형 진입 기회가 대량 형성

  - SAMR 통계에서 2024.9 말 민간 경영주체 1억8,086만개, 이 중 민영기업 5,554만개·개별사업자 1억2,532만개로 거래 후보군 모수 초대형화
    - 개별사업자 1억2,400만개·전체의 67.4%와 고용 약 3억 명 연계가 제시되며 점포·공장 단위 ‘소액 인수’ 잠재시장 대형화
    - 중국 민영기업의 가족기업 비중 85% 수준과 향후 10~20년 승계 파고 전망이 제시되며 제3자 인수·전문경영인 전환 수요 확대
  - 향후 10년 초과 300만 민영기업이 세대교체 시험대 진입 전망이 제시되며 ‘가족기업의 제도적 승계’가 거래공급 측 핵심 동인으로 부상
- 거래건수 반등과 전략산업 중심 M&A 촉진 조치가 맞물리며 ‘기술기업 중심의 M&A’가 확대되고, 전통 승계시장과 혁신형 인수시장의 이중 트랙이 강화

  - 2024년 중국 M&A는 거래건수 10,654건·거래가치 2,769억 달러로 집계되며 ‘건수+24%·금액 -16%’ 구조로 소형딜 비중 확대
  - 2024.9 CSRC ‘상장사 M&A·구조조정 시장개혁 의견’으로 간이심사·분할지급·결제수단 다변화 등이 제시되며 전략 신흥산업 중심의 거래 촉진 기조 강화
    - 정책 발표 이후 신흥산업이 핵심 타깃으로 부각되고, 2024년 ‘약 3,000건’ 수준의 구조조정 언급 등 시장 활성화 신호가 관측

※ 출처 : PwC(2024), Overwhelming majority of business entities in China from private sector

〈표 3-12〉 중국 인수창업 시장의 주요 특징 및 변화

구분	전통적 승계 시장	혁신형 인수 시장(ETA)
주요 대상	전통 제조업, 유통, 요식업	하이테크 제조, 친환경 에너지
추진 주체	가족 내 직계 비속(자녀)	전문 경영인, 기술 창업가, PE 펀드
정부 역할	개별 기업의 사적 영역으로 간주	신질생산력 확충을 위한 제도적 장려
핵심 동인	창업자의 건강 및 고령화 이슈	산업 통합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금융 수단	개인 자산 및 가족 내 자금	M&A 전용 펀드, 간이 심사 등

**일본**

- 일본은 경영자 고령화와 후계자 부재가 결합되며 승계형 인수(제3자 승계) 시장 저변 확대
  - 경영자 고령화 지표가 고점 갱신되며 대규모 승계·매각 수요가 상시화
    - 2024년 전국 ‘사장 평균 연령’ 63.59세, 70대 이상 비중 34.47%로 최고치 기록
    - 2023년 기준 중소기업 경영자 70세 이상 비중이 2000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승계 필요 기업군 잔존

**〈표 3-13〉 일본 기업 경영자 연령대별 비중 추이**

년도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2017	3.21%	15.58%	23.03%	31.97%	26.18%
2018	2.99%	15.25%	23.27%	30.34%	28.12%
2019	2.70%	14.64%	23.45%	28.81%	30.36%
2020	2.52%	14.10%	23.74%	27.83%	31.79%
2021	2.42%	13.51%	24.17%	27.18%	32.69%
2022	2.34%	12.89%	24.62%	26.73%	33.39%
2023	2.23%	12.10%	25.07%	26.47%	34.11%
2024	2.20%	11.40%	25.34%	26.57%	34.47%

- 후계자 부재가 절반 수준으로 지속되며 제3자 인수 기반 승계 수요 확대
  - 2025년 후계자 부재율 50.1%, ‘없음·미정’ 기업 13.8만개로 확인
  - 후계자 부재율은 개선 추세이나 절대 규모가 커 거래·매칭·자금 인프라 수요가 동반 확대
  - ※ 출처 : 동경일보(2025.02), 사장 평균 연령 과거 최고의 63.59세 최고령은 아키타현 66.07세, 최연소는 히로시마현 62.45세
- 공공 지원센터 실적과 등록제 기반 중개 인프라 확충으로 ‘승계형 M&A’ 거래 파이프라인 확대
  - 전국 ‘사업승계·인수인계 지원센터’가 제3자 승계 상담·성약을 빠르게 확대
    - 令和6年度(2024회계연도) 상담자 23,540명, 상담 90,638회, 1인당 평균 3.85회로 집계
    - ‘후계자 인재뱅크’ 성약 106건, 신규 등록 1,551명, 누적 등록 1만 명 이상으로 예비 인수자 풀 확대
  - M&A 지원기관 등록제 확대로 중개 품질·투명성 제고 기반 강화
    - ※ 출처 : TSR 홈페이지(tsr-net.co.jp)

### 3. 사회현황(S)

#### 가. 국내 사회현황

- ▣ 인수창업자는 기술전문가 중심으로 형성되나 M&A 전 과정 전문성 요구 대비 교육 공백이 지속되는 사회적 기반 취약성 노출

  - 가치평가·실사·협상·계약서 작성·세무 처리 등 M&A 전 과정이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구하나 창업가는 비전문가인 구조가 일반화
    - 창업자는 기술 역량을 보유하더라도 Valuation·Due Diligence·SPA 등 거래 핵심 역량은 별도 전문훈련이 필요한 영역으로 분리
    - 거래 핵심역량 부재가 딜 소싱 실패, 실사 누락, 협상력 저하로 전이되어 인수 이후 운영 리스크까지 증폭되는 경로 형성
  - 국내 창업교육이 아이디어 발굴·사업계획서·피칭 중심으로 편중되어 인수·운영에 필요한 경영실무·M&A 프로세스 교육이 전무한 상황
    - 신설창업형 교육 프레임이 유지되며 인수창업 특유의 탐색·인수·계약·PMI 역량이 교육 체계에서 배제되는 구조 지속
    - 실전형 거래지식 결핍이 인수 의사결정 지연과 거래비용 상승으로 연결되어 ETA 활성화 병목으로 작동하는 양상
- ▣ 해외 대학은 ETA 커리큘럼과 시뮬레이션 중심 실전형 교육체계를 구축한 반면, 국내 대학은 미진한 인수창업 전주기 역량을 다루는 정규 트랙과 실습 기반 교육 개발 필요

  - HBS·Wharton 등 해외 대학의 ETA 커리큘럼과 독일의 신뢰 기반 승계 프로세스 연구를 참조해 국내 실정에 맞는 실전형 트랙 설계 필요
    - 해외 사례는 탐색부터 인수·계약·PMI까지 전주기 역량을 체계화하여 초보 인수자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목적 지향
  - 교육 방식은 ‘Simulation & Trust-based Learning’으로 설계하여 성공·실패 매물을 가상 분석하고 가치평가부터 계약까지 전 과정 시뮬레이션 수행
    - 실제 중소기업 M&A 매물을 기반으로 후보군 선별, 가치평가, 실사, 협상, 계약 체결까지 순차 실행하는 사례 기반 학습 적용
    - 법률·회계 지식 전달을 넘어 매도자의 심리적 소유권을 이해하고 신뢰 기반 협상기술을 집중 훈련하는 소프트스킬 강화

- K-ETA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4단계 커리큘럼과 대학 연계·멘토링·인증제 결합의 오픈 플랫폼형 인력양성 모델 구축 방안 논의

  - 4단계 트랙으로 탐색-인수-계약-PMI·성장 전주기 역량을 구조화하여 인수창업 전문성을 단계적으로 축적
    - Track1(Search)은 산업분석 방법론과 우량 매물 선별, 1차 딜 소싱 전략을 중심으로 탐색 역량 강화
    - Track2(Acquisition)는 재무제표 이면 해석, 실전 실사 체크리스트, LBO·구조화 금융 설계를 중심으로 인수역량 강화
    - Track3(Legal & Negotiation)은 SPA 핵심조항, 세무 최적화, 신뢰 기반 협상론을 중심으로 계약역량 강화
    - Track4(PMI & Growth)는 인수 후 100일 경영계획, 조직문화 통합, NTB 기술 연계형 Value-up 전략을 중심으로 성장역량 강화
  - 대학 연계형 'K-ETA 스페셜리스트 트랙'과 은퇴 CEO 멘토링, 인증제 도입을 결합해 공급자 신뢰성과 시장 접근권을 동시 강화
    - 국내 MBA·공과대학 대학원에 학점 연계형 ETA 전문트랙을 개설하여 서치(Searcher) 양성을 제도화
    - 플랫폼 내 마스터 풀을 구축해 매각 경험 은퇴 CEO가 예비 인수창업가에게 경영 노하우·지역 네트워크를 전수하는 사회적 승계 아카데미 운영
    - 교육 이수·평가 통과자에게 `인증 서치` 배지를 부여하고 보증심사 우대 및 우량 매물 우선 접근권을 제공하는 인센티브 구조 설계

## 나. 해외 사회현황

### 미국

- 미국은 대학 정규과목·클럽·벤처랩이 결합해 ETA 학습·네트워크·초기자금 지원이 전국 단위로 작동하는 기반 형성

  - 하버드 HBS는 ETA 현장형 과목과 학생클럽을 병행해 탐색·인수·운영 역량을 과제형 실습과 네트워크로 동시 구축
    - 하버드 HBS가 ETA 현장형 필드코스를 운영해 탐색·실사·협상·PMI 역량을 실제 딜 가정 과제형 실습으로 훈련
    - 하버드 ETA 학생클럽이 예비 서처 대상 네트워킹·자료공유·멘토연계를 캠퍼스 내외로 상시 제공하는 거점 역할 수행
  - 펜·와튼은 Venture Lab ETA 프로그램과 정규교과 편성으로 교육·펀딩·멘토링을 패키지 화해 진입 장벽 완화
    - 펜·와튼 Venture Lab이 ETA 프로그램으로 훈련·펀딩·가이던스를 패키지 제공해 학생 인수창업 진입장벽 완화
    - 와튼은 ETA·서치펀드 과목을 MBA 전공트랙에 편성해 탐색·평가·구조화금융 역량을 학점 기반으로 제도화 운영
- 미국은 스탠퍼드 성과연구와 Searchfunder 커뮤니티 확산으로 ETA 지식·평판·멘토 네트워크가 누적되는 인프라 강화

  - 스탠퍼드 CES는 1984년 이후 서치펀드 연구를 정기 발간해 IRR·ROI 벤치마크와 운영 사례 데이터를 안정적 공급
    - 스탠퍼드 CES가 1984년 이후 미·캐나다 서치펀드 681개 데이터를 정기 발간해 성과 벤치마크와 학습자료 축적
    - 2024 스탠퍼드 연구에서 세전 IRR 35.1%·ROI 4.5x 제시로 서치펀드 성과 벤치마크와 신뢰도 동시 강화
  - 하버드 교수진 팟캐스트와 온라인 커뮤니티가 체크리스트·사례·실무가이드를 확산해 비MBA 인수자까지 학습 접근성 확대
    - Searchfunder 등 온라인 커뮤니티가 매물탐색·중개평판·자문지식을 공유해 초보 인수자의 정보비대칭 완화

※ 출처 : University of Pennsylvania 홈페이지(venturelab.upenn.edu)

**유럽**

- ▣ 유럽은 기업승계 대란과 SME 고용의존이 결합되며 제3자 인수를 통한 사업연속성이 사회적 의제로 부상 가속

  - EU는 연간 45만개 기업 이전과 200만 명 고용 연동으로 승계 실패가 지역사회 충격으로 확산되는 구조 고착화
    - 매년 약 45만개 기업 이전이 발생하며 200만 명 고용이 연동돼 승계 성공여부가 지역 고용을 좌우하는 구조 형성
  - 독일은 2027년까지 62.6만개 SME 승계가 예상되며 후계자 부족이 폐업 선택을 증가시키는 사회문제 부각 확대
- ▣ 유럽은 IESE·INSEAD 등 교육기관 중심 ETA 커리큘럼과 서치펀드 커뮤니티가 확산되며 사회적 경로로 정착

  - 스페인의 IESE 경영대학원은 전 세계 국제 서치펀드 리포트를 발행하는 허브 역할을 하며, 프랑스의 INSEAD, 영국의 LBS 등은 MBA 과정 내 ETA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
  - 단일시장 환경에서 국가 간 인수·승계가 확대되며 크로스보더 ETA가 ‘대륙형 커리어’로 수용 확산
    - EU는 기업이전 시장의 장벽 완화와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국경 간 승계 거래 활성화를 지원 추진 지속 강화 기조 유지
- ▣ 유럽은 가족승계 규범 약화와 전문경영 선호 확대로 ETA 인식이 ‘기업 구원’ 담론으로 전환되는 흐름 확대

  - 독일은 후계자 부족이 지속되며 우량 중소기업의 폐업 우려가 커져 제3자 인수의 사회적 수용성 확대
    - 지역경제·사회결속 유지 논리가 강화되며 승계의 미덕이 ‘가문’에서 ‘고용·연속성’으로 이동 확산 가속

〈표 3-14〉 유럽 주요국 ETA 사회적 트렌드 비교

구분	독일	영국	스페인
사회적 배경	미텔슈탄트의 세대교체 실패 위기	전문화된 사모펀드 시장의 확장	청년 실업 해소 및 경영 인재 양성
인식 변화	가문의 영광 → 전문 경영인의 생존	기업 사냥꾼 → 기업 구원자	신규 창업 → 안전한 인수창업
주요 동인	제조 기술의 연속성 확보	금융 자본의 효율적 배분	학계 기반의 서치펀드 커뮤니티

※ 출처 : SME 홈페이지(single-market-economy.ec.europa.eu)

## 중국

- 중국은 창업 1세대 대규모 은퇴와 MZ세대 가치관 변화가 결합되며 기업승계 규범이 약화되고 제3자 인수가 합리적 선택으로 수용 확산
  - 가족기업 비중이 높은 민영경제에서 약 300만개 기업이 승계 주기 진입하며 매각·전문 경영인 전환을 ‘생존전략’으로 보는 인식 확산
    - 접반을 미덕으로 보던 전통이 약화되고 자녀세대가 현장경영을 기피하며 매물이 ETA 시장으로 유입되는 사회적 배경 형성
    - 부얼다이의 승계 거부가 ‘가문의 수치’에서 ‘합리적 선택’으로 재해석되며 매도자·매수자 간 거래 수용성 확대
  - 창업 리스크 인식이 커지며 신규 창업 대신 검증된 기반을 인수해 고도화하는 경로가 ‘안전한 성장’ 프레임으로 확산되며 사회적 선호 전환
- 중국은 사회안정·고용유지 관점에서 소액 인수 대중화와 전략산업 인수 촉진이 병행되며 ‘이중 트랙’ 사회구조가 강화
  - 개별사업자·민영 중소기업 고용이 약 3억 명 규모로 연계되어 승계 실패가 사회 불안으로 전이된다는 인식이 강화
    - 지역 점포·공장의 승계 실패를 사회 안정 리스크로 인식하며 소액 인수(Micro-ETA)를 지역경제 유지 수단으로 수용 확대
    - 거래 단위가 작아지고 건수가 늘어나는 ‘소형 딜 대중화’ 흐름이 형성되며 개인·소규모 팀의 인수 기회 인식 확대

〈표 3-15〉 중국 인수창업 시장의 사회적 특징

구분	주요 현상	사회적 의미
공급 측면	창업 1세대 300만 명 은퇴 임박	거대한 기업 자산의 시장 유입
수요 측면	MZ세대의 전문 경영인 참여 확대	가업 경영에서 제도 경영으로의 전환
정책 배경	신질생산력 및 M&A 규제 완화	국가 전략 차원의 산업 고도화
시장 특징	소형 딜(Small Deal) 위주의 활성화	개인 및 소규모 팀의 인수 기회 확대

※ 출처 : PwC(2024), Overwhelming majority of business entities in China from private sector

**일본**

- 일본은 ‘2025년의 벽’ 담론 속 흑자폐업 우려가 확산되며 승계형 인수창업을 지역경제 안전망으로 수용 확대 가속

  - 사장 평균연령 63.59세·70대 이상 34.47%로 퇴장이 가시화되며 승계 실패의 사회비용 담론 확산 고도화
    - 우량기업도 후계자 부재로 폐업하는 ‘흑자 폐업’이 지역사회 리스크로 인식되며 제3자 승계 정당성 강화 확산
  - 후계자 부재율이 2017년 66%대에서 2025년 50.1%로 하락하며 M&A를 ‘기업 사냥’으로 보던 시각이 약화되고 ‘사업을 이어줄 사람 찾기’ 수단으로 인식 전환
- 일본은 개인 인수자 확대와 마이크로 M&A 대중화로 인수창업이 지역 재도전·전직 트렌드로 자리 잡는 사회 변화 진행 중

  - BATONZ·TRANBI 등 온라인 매칭이 1,000만 엔 이하 소형 사업 인수를 촉진하며 ‘개인형 ETA’ 대중화
    - 플랫폼 기반 소형 딜이 카페·세탁소·소형공장 등 생활업종으로 확산되며 은퇴·전직자의 인수창업 진입 촉진
    - ‘후계자 인재뱅크’에 예비 인수자 누적 1만 명 이상 등록이 축적되며 지역기업-개인 매칭의 사회적 기반 강화 확산

**〈표 3-16〉 일본 인수창업 시장의 변화**

구분	과거(전통적 방식)	현재(인수창업 모델)
승계 주체	친족 및 내부 임직원 중심	외부 개인 창업가 및 전문 경영인
매칭 경로	주변 지인 및 은행 소개	온라인 플랫폼 및 공적 지원센터
시장 성격	폐쇄적·수동적 대응	개방적·선제적 시장 형성
금융 지원	담보 위주의 대출	개인 대상 인수금융 및 정책 보증
인식	가문의 명예와 전통 유지	고용 보전 및 산업 생태계 유지

※ 출처 : 동경일보(2025.02), 사장 평균 연령 과거 최고의 63.59세 최고령은 아키타현 66.07세, 최연소는 히로시마현 62.45세

## 4. 기술현황(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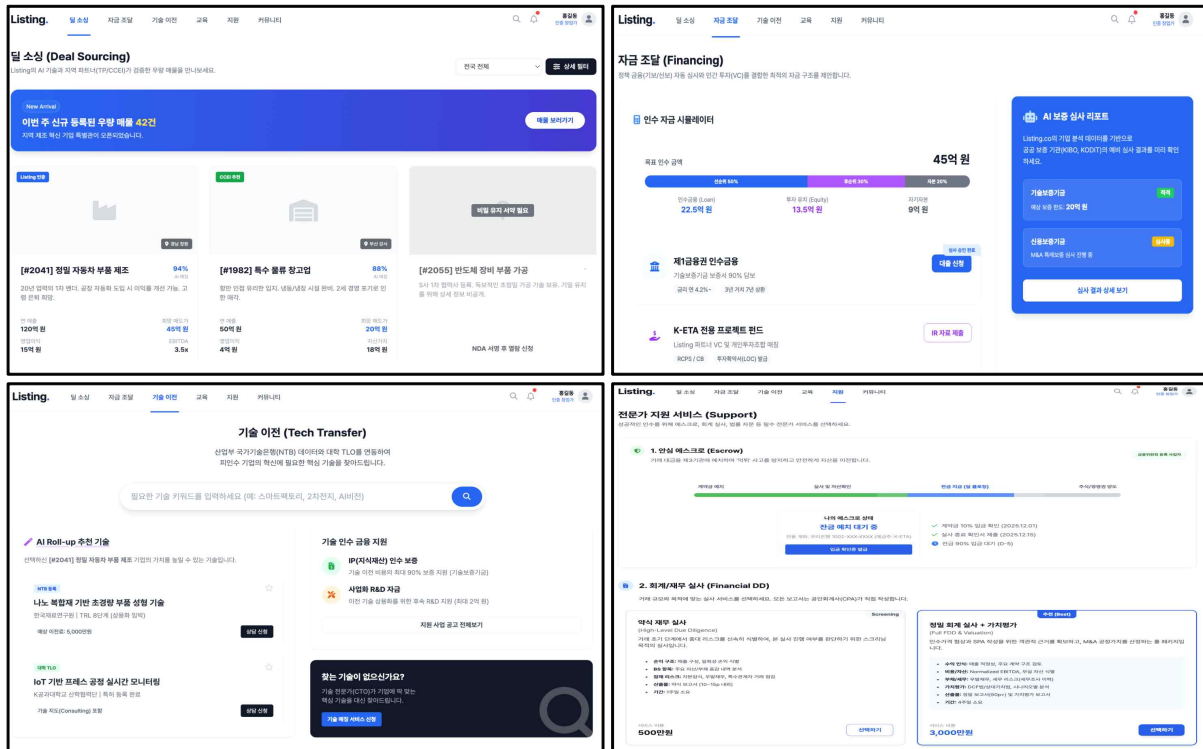
### 가. 국내 기술현황

- ▣ NTB 공공기술 DB와 민간 M&A 매물정보 단절로 인수 후 혁신기술 탐색이 어려워 정보 사일로 현상이 지속되는 기술 연계 기반 취약성 노출

  - 산업부·KIAT 운영 NTB의 공공 특허기술이 민간 매물정보와 연동되지 않아 인수창업가의 기술탐색·도입 경로가 단절되는 구조 형성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개정을 통해 NTB-민간플랫폼 정보공유·API 연동의 법적 근거 명문화 필요
    - KIAT가 NTB 기술 티저 데이터 제공과 기술 매칭 전문가 파견으로 딜 초기 기술진단을 지원하는 역할 체계 구축 필요
    - COMPA가 공공 R&D 성과물 후속 고도화 자금 연계를 수행하는 브릿지 기능을 통해 인수 후 가치제고 경로를 연결 필요
    - 피인수 기업 업종과 창업가 역량을 분석해 NTB 최적 특허를 자동 추천하는 실시간 매칭 알고리즘을 민간 플랫폼과 공동 개발 필요
- ▣ 리스팅(LISTING)은 AI 기반 중소형 M&A 전주기 디지털화로 인수창업 거래비용 절감과 신뢰확보를 지원하는 플랫폼 구축

  - 딥서치 기반 데이터·AI 매칭과 빅4 출신 가치평가팀·전담 매니저 결합으로 300억 이하 딜 전용 하이브리드 중개모델 운영
    - 착수금 미부과·성공보수 2% 체계로 거래 초기 현금부담을 줄이고 중소형 딜 비용구조 혁신과 참여확대·가격 합리화 유도
    - 매각기업당 30일 평균 4.7건 제안과 최단 7일 성사 기록으로 전자NDA 기반 매칭·실사 프로세스 속도개선 성과 검증
    - 2024년 5월 런칭 이후 누적 거래규모 8,000억원 돌파와 12단계 프로세스 제공으로 거래 표준화·전주기 관리 강화
  - 기보·한국벤처캐피탈협회 M&A 자문기관 선정으로 정부 공인 신뢰지표 확보와 가치평가 지원·프로그램 연계성 강화
    - 가치평가비 최대 2천만 원 지원과 나이스평가정보 평가데이터 연계로 공신력 확보와 매물 선별·실사 준비 품질 상향 촉진

- 누적 130억원 투자유치와 국민연금·한국거래소·신한은행 검증 사례로 금융권 신뢰 기반과 기술역량 지표 동시 확보
- 인수자 금융지원 서비스(Financing) 도입 준비로 제휴금융 기반 인수자금 조달 지원과 거래규모 확장·성사율 제고 추진



[그림 3-15] '리스팅(LISTING)' 플랫폼 예시(안)

- AI·데이터 기반 민간 M&A 플랫폼 확산은 중소형 딜 비효율을 기술로 해소하는 대안으로 부상
  - 리스팅은 AI로 기업데이터 분석·가치평가 자동화를 구현해 매물분석 리드타임을 수주~수개월에서 단축하는 효과 창출
  - 진행 중 거래규모 8천억 원·일평균 47.6건 매칭·최단 7일 성사로 속도 혁신을 입증하며 국내 최대 규모 유동성 확보
  - FIPS 140-2 준수 암호화 모듈과 강화된 NDA 절차로 정보유출 우려를 완화하며 신뢰·보안 기반을 제도 수준으로 상향
  - 기보 M&A 파트너스 선정과 KVCA 공식 자문기관 지정으로 공공 파트너십을 확보해 전문성·공공성 검증지표를 동시 확보

## 나. 해외 기술현황

### 미국

- 미국은 기술기반 온라인 M&A 마켓플레이스와 인수금융 솔루션이 결합돼 리스팅 유사 모델이 중소형 딜 전반에 확산 가속
  - Acquire.com은 검증 바이어 풀과 에스스로·법무 지원을 결합해 창업자 친화형 온라인 매각 프로세스를 표준화 운영
    - 500k 이상 구매자와 \$500M 이상 거래볼륨·2,000 이상 스타트업 판매지표 공개로 플랫폼 유동성 신뢰지표를 다층적으로 확보
    - 실시간 지표 공유와 LOI·APA 문서작성 지원을 제공해 탐색-협상-클로징 전주기 디지털 워크플로우를 구현·정착
  - BizBuySell·Axial은 SMB~LMM 매물 탐색과 딜소싱을 온라인화해 거래비용을 낮추고 거래 접근성을 광범위 확장
    - BizBuySell은 연 6.5만개 리스팅·월 1,500만 페이지뷰·10만 이상 성사실적을 제시해 대규모 마켓 유동성을 강조
    - Axial은 TEV 2.5~250M LMM 네트워크에서 3,500 자문사·3,000 바이어 참여를 제시하며 정밀 매칭을 지원
  - Boopos는 데이터 기반 인수대출로 은행·SBA 심사 공백을 보완해 인수자금 조달의 기술적 레이어를 추가 제공
    - EBITDA 2.5배 수준 인수대출과 7일 수준 펀딩 비교지표를 제시해 신속 집행 중심의 인수 금융 경험을 차별화 강조
    - 데이터 드리븐 신청·심사·계약 프로세스를 강조해 소형 인수자의 금융접근성과 거래 종결 속도를 동시 개선·확대 지원

〈표 3-17〉 미국 주요 플랫폼

구분	BizBuySell	Axial	Acquire.com
주요 타겟	SMB (전 산업 소상공인/중기)	LMM (중소기업/전문 투자자)	SaaS, 전자상거래 스타트업
핵심 가치	압도적 유동성 (Mass)	정밀 매칭 (Professional)	신속한 딜 클로징 (Tech)
딜 사이즈	\$50,000 ~ \$10M	\$2.5M ~ \$250M	\$100,000 ~ \$10M+

※ 출처 : BizBuySell 홈페이지(bizbuysell.com); Axial 홈페이지(axialadventure.com); Acquire.com 홈페이지(Acquire.com)

## 유럽

- 유럽은 SME 경제구조와 국경간 딜 확대로 AI 기반 중소형 M&A 중개플랫폼이 조기 확산·정착되는 환경 형성 가속

    - 네덜란드 Dealsuite는 스마트매칭으로 유럽 전역 프로젝트와 바이어를 연결하는 전문가용 폐쇄형 B2B 플랫폼 운영
      - 자문사·PE가 참여하는 폐쇄형 구조로 데이터 기반 필터링·정밀탐색을 제공하여 초기 탐색·거래준비 비용 절감 지원
      - 국가 간 거래에 특화된 워크플로우로 크로스보더 딜소싱·NDA·접촉관리를 통합해 프로세스 효율 제고와 실행속도 단축
    - 독일 DealCircle·CARL은 AI 룭리스트 자동생성과 전문가 검증을 결합해 하이브리드 매칭 품질을 향상
      - AI가 바이어 후보군을 자동 추천하고 전문가가 재검증해 정보노출 통제·커뮤니케이션 품질과 신뢰 확보를 동시 강화
      - 미텔슈탄트\* 승계 수요를 대상으로 디지털 워크플로우로 가치평가·실사·아웃리치를 표준화해 실행속도 향상과 비용 절감
  - \* 미텔슈탄트(Mittelstand) : 독일 경제의 중추인 중소·중견기업군
  - 독일 공공플랫폼 nexxt-change은 승계매물·인수자 수요를 집약하고 거래 탐색비용을 절감하는 승계 인프라 구축
    - 연방정부·상공회의소·경제단체·금융권이 공동 운영하며 상담·매칭·가이드 정보를 원스톱 제공하여 공공 신뢰와 품질 제고
    - 익명 티저·NDA 전환과 다중 필터링으로 정보유출을 낮추고 업종·지역별 후보군을 조기 접촉·검증 체계화 확대 지원
  - 영국 BusinessesForSale.com은 대규모 공개형 마켓플레이스로 소형 사업 인수탐색과 리스팅 유동성 제공
    - 광범위 업종·규모 매물 풀을 기반으로 초기 탐색비용을 낮추고 후보군 형성을 가속해 거래 접근성과 시장 유동성 전반 확대
    - 공개형 특성상 실사·중개 신뢰 보안을 위해 에스크로·법무·재무자문 결합 수요가 지속 상존하며 검증서비스 연계 필요
- ※ 출처 : Dealsuite 홈페이지; DealCircle·CARL 홈페이지; nexxt-change 홈페이지; usinessesForSale.com 홈페이지

## 중국

- 중국은 AI·데이터 기반 중소형 M&A 플랫폼이 확산되며 리스팅 유사 디지털 딜소싱·매칭·자문 결합 모델이 다층화
  - Morning Whistle은 클라우드 기반 매물 정보망으로 LMM 중심 딜소싱과 데이터 매칭을 수행하며 전문가 자문을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운영
    - 중소형·중견 딜에 집중해 오프라인 고비용 구조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매물 탐색·접촉 효율을 상향하는 플랫폼 구조 형성
    - 데이터 기반 매칭 이후 전문가팀 자문으로 실사·협상·클로징 품질을 보완하며 정보 비대칭·신뢰비용·거래지연 리스크 절감
  - DealGlobe은 알고리즘 기반 선호-기업데이터 매핑으로 미들마켓 매칭 정밀도를 높이고 온라인 워크플로우로 딜 리드타임 단축
    - 매수 선호와 매도기업 재무·기술 데이터를 정밀 분석해 후보군 스크리닝을 자동화하고 초기 탐색비용과 재협상 리스크 동시 완화
    - 크로스보더 기술 인수에 강점을 두어 글로벌 기술기업 딜을 중국 수요와 연결하며 기술 내재화형 전략딜 실행역량 강화
  - IT Juzi는 스타트업·기술기업 투자·재무·인력 데이터를 집적해 딜소싱과 리스크 진단을 지원하고 거래시장 기능을 결합
    - 방대한 이력데이터로 성장성과 리스크를 사전 파악해 매물 검증비용을 낮추고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는 데이터 신뢰 레이어 구축
    - ‘创业公司交易市场(창업기업 거래시장)’ 운영으로 데이터 기반 매물 탐색·비교를 지원해 인수창업 후보군 형성과 접근성 확대 기반 강화

〈표 3-18〉 중국 주요 플랫폼

구분	Morning Whistle	DealGlobe	IT Juzi
핵심 모델	M&A 정보/매칭 플랫폼	디지털 IB 플랫폼	데이터 기반 마켓플레이스
주요 타겟	중소형 및 중견기업	미들마켓 (기술 중심)	스타트업 및 기술 기업
기술적 특징	딜 클라우드 매칭 엔진	알고리즘 기반 타겟 매칭	방대한 DB 기반 딜 소싱
신뢰 인프라	중국 M&A 협회 파트너	글로벌 네트워크 연계	중국 내 최대 스타트업 DB

※ 출처 : Morning Whistle 홈페이지; DealGlobe 홈페이지; IT Juzi 홈페이지

**일본**

- 일본은 AI·온라인 기반 M&A 플랫폼이 확산되며 리스팅 유사 중소형 딜 디지털 중개모델이 상용화 국면 진입
  - M&A종합연구소는 AI 매칭 알고리즘을 도입해 매수자 탐색을 고속화하는 중개 서비스 운영
    - 공식 채널에서 AI 기반 후보 탐색의 효율화·망라성을 제시하며 중소형 딜 처리역량 강화
    - 중소기업청 M&A 지원기관 등록제 등록을 기반으로 거래 신뢰·컴플라이언스 확보 병행
  - BATONZ·TRANBI는 온라인 매칭 중심으로 소규모 사업승계 M&A를 대중화하는 플랫폼 확산
    - TRANBI는 등록 16.5만 이상·누적안건 1.63만 이상 공개로 소형 거래풀 확대 흐름
    - BATONZ는 국내 최대급 성약 플랫폼을 표방하며 매칭과 PMI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구조 운영



[그림 3-16] BATONZ 사업구조



[그림 3-17] TRANBI 플랫폼

〈표 3-19〉 일본 주요 플랫폼

구분	M&A 종합연구소	바톤즈 (Batonz)
구분	순수 AI 기반 데이터 매칭	전문가 네트워크 플랫폼
핵심 모델	완전 성공 보수 (업계 최저 수준)	성약 시 수수료 발생
수수료 구조	흑자 폐업 위기 중소기업	개인 및 소상공인 (Micro)
주요 타겟	독자적 AI 매칭 엔진	전국 자문사 매칭 알고리즘
기술적 특징	동증 프라임 상장사 지위	전국 지방은행과의 제휴

※ 출처 : M&A종합연구소 홈페이지; BATONZ 홈페이지; TRANBI 홈페이지

## 5. 주요 시사점

### □ 종합분석(PEST)

환경분석		시사점	
<b>정책 현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BA 보증·EU Business Transfer·일본 원스톱 창구 등 제3자 승계의 제도권 편입 강화</li> </ul> </li> <li>•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지원 통합공고 확대에도 인수창업 전용트랙 분산 운영 및 단계별 안내·연계 미흡 지속</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수창업을 별도 정책대상으로 정의하고 단계별 지원체계를 전용트랙으로 재설계 필요</li> <li>• 상법 특례(절차 단축)를 중소형 딜에 적용하는 신속클로징 제도 패키지화 필요</li> <li>• 기보 중심 공공플랫폼·민간 플랫폼을 단일 안내·신청·연계로 통합하는 원스톱 설계 필요</li> <li>• 민간의 플랫폼 운영역량과 정부의 자금·제도·데이터를 결합한 PPP 표준모델 제도화 필요</li> </ul>
<b>산업 / 시장 현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Silver Tsunami·유럽 대규모 기업이전·일본 승계형 M&amp;A 상시화로 거래 기반 확대</li> </ul> </li> <li>•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0세 이상 CEO 중소기업 236만개 중 후계자 부재 67.5만개로 승계 압력 상시화</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계자 부재 매물이 비수도권에 집중되는 만큼 지역 딜파이프라인을 TP·CCEI 중심으로 선제 구축 필요</li> <li>• 정보비대칭·중개불신 해소를 위해 블라인드 티저·사전검증-표준 NDA 기반의 디지털 전환 필요</li> <li>• TM·가치평가·실사 비용이 진입장벽으로 작동하므로 거래준비 바꾸처를 전주기로 확장 필요</li> </ul>
<b>사회 현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대학 정규과목·클럽·벤처랩이 ETA 학습·네트워크·초기자금 연계를 상시 제공</li> <li>- 유럽·일본은 사업연속성·고용보전 논리로 제3자 승계를 사회적 경로로 수용 확대</li> </ul> </li> <li>•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교육이 피칭 중심으로 편중되어 인수·계약·PMI 역량을 다루는 실전형 교육 공백 지속</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수창업을 ‘안전한 창업/사회적 승계’로 재프레이밍하는 대국민 인식전환 전략 필요</li> <li>• 인증·교육 이수자를 보증·매물접근·수수료 혜택과 연동하는 인센티브 설계 필요</li> </ul>
<b>기술 현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cquire·BizBuySell·Axial·Boopos 등 매칭+워크플로우+금융 레이어 결합 모델 확산</li> <li>- 유럽 Dealsuite·DealCircle·공공 nexxt-change, 중국 Morning Whistle·IT Juzi, 일본 Batonz·Tranbi 확산</li> </ul> </li> <li>•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TB 공공기술 DB와 민간 매물정보 단절로 인수 후 기술도입 경로가 사일로화 지속</li> <li>- 리스팅은 AI 기반 전주기 디지털화로 300억 이하 딜의 속도·보안·신뢰 지표를 추적</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TB-민간 플랫폼 API 연동을 법제화하고 기술 티저-매물-인수자 역량의 데이터 표준화 필요</li> <li>• KIAT 기술진단·COMPA 후속R&amp;D 연계를 플랫폼에 내장해 Value-up 기술경로 상시 연결 필요</li> </ul>

- ▣ 민간 리스팅은 딜소싱·매칭 병목을 해소했으나 자금조달·교육·정책지원은 한계가 있어 민간 기술력과 정부 자금·제도·데이터를 결합하는 PPP가 필연적 대안으로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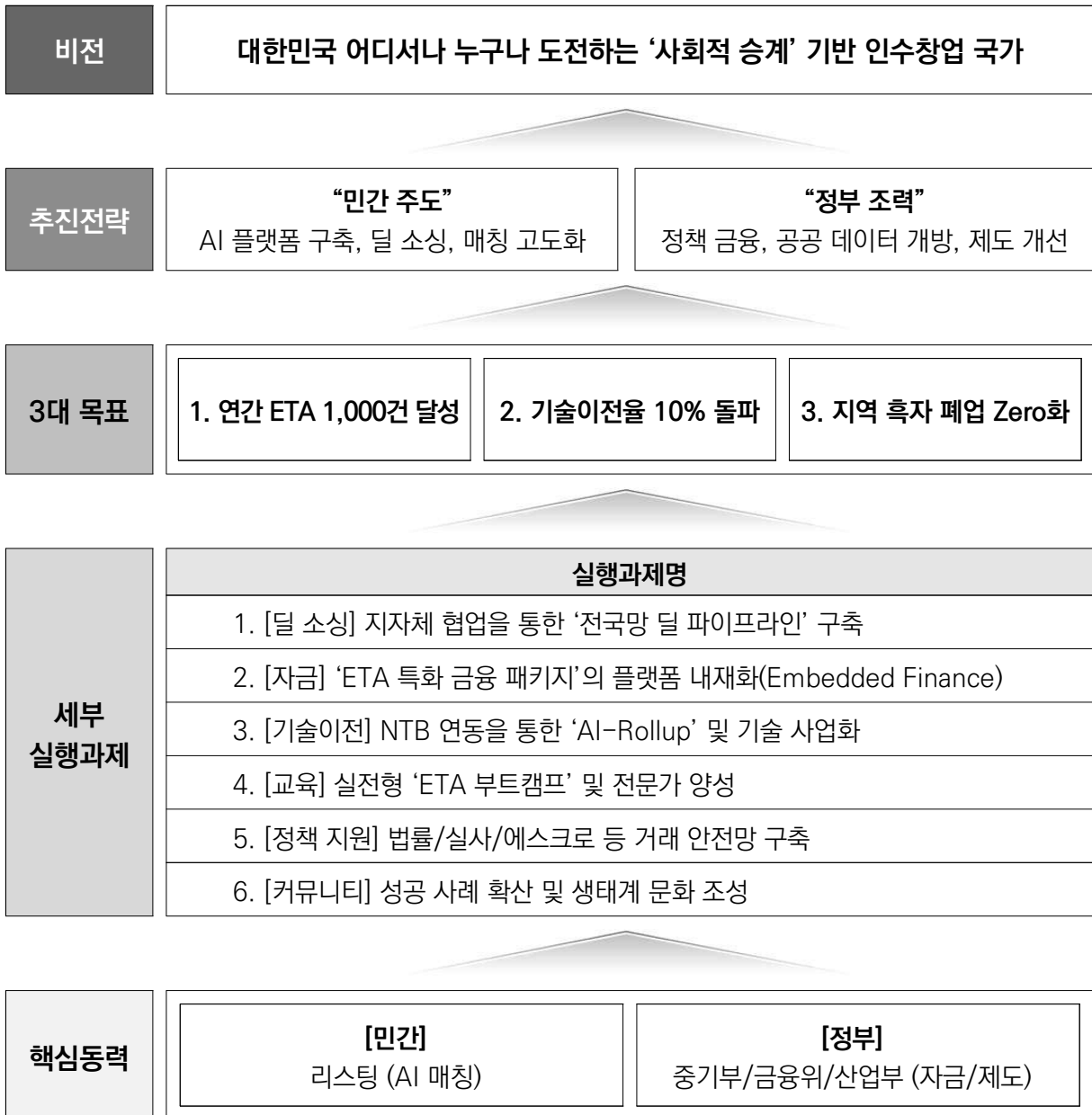
  - 정부는 자금·제도·공공데이터를 보유하나 시장친화 플랫폼 구축·운영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민간 SaaS 활용형 PPP로 역할분담 필요
    - 2025년 정책기조는 규제혁파와 민간 창의성 발휘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며 정부의 Enabler 역할 강화를 명시하는 방향 전환
    - 디지털플랫폼정부 2.0은 정부 직접 구축 대신 검증된 민간 SaaS 우선 도입을 추진해 민간 인프라 위 공공데이터·AI 인프라 공급 모델 정합성 확보
    - TOPS 프로그램은 민간이 유망기업 발굴·운영하고 정부가 자금 매칭하는 민간주도형 지원 모델로 ETA PPP의 벤치마킹 근거 제공
  - 범부처·정책금융·기술DB·지자체 현장조직을 결합해 인수금융·기술이전·세제·교육·후속R&D를 패키지화하는 전주기 PPP 설계 필요
    - 산업부는 NTB 공공기술 데이터 API 전면 개방과 기술이전 정책 연계로 인수 후 Value-up의 기술도입 경로를 상시 연결
    - 지자체·TP는 후계자 부재기업 실태조사와 매물등록 유도로 딜 파이프라인을 형성하고 지역경제 안전망 기능을 강화
    - CCEI는 지역 창업가 대상 ETA 교육과 서처(Searcher) 보육으로 인적자본 공급을 확대하고 거래 실행역량을 상향
    - COMPA는 인수기업 후속 R&D 자금과 사업화 컨설팅으로 기술고도화·매출확대 경로를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 수행
    - 대학 TLO는 대학기술과 피인수기업 매칭을 촉진해 교수·연구원 기반 ETA 유입과 기술사업화 파이프라인을 확장
  - 재정·수익 구조는 초기 공공기능 구축비를 정부가 지원하고 운영 지속가능성은 민간의 다층 수익 모델로 확보하는 구조 설계 필요
    - 구축비는 API 연동·보안서버 등 공공기능 개발을 R&D 또는 정보화 예산으로 민간 운영사에 지원하는 방식 채택
    - Freemium으로 기본 검색·매칭을 무료 제공해 진입장벽을 낮추고 이용자 풀 확대를 선행 확보

## 제4절 추진계획(안)

### 1. 통합플랫폼 비전 및 핵심 기능

#### 가. 비전 체계도

- 기존의 파편화된 공공 M&A 지원 기능을 민간 플랫폼(Listing)에 통합·연동하여, “탐색부터 인수, 성장까지(End-to-End)” 지원하는 범부처 통합 플랫폼을 구축



## 나. 플랫폼 6대 핵심 기능(7-Module System)

□ 통합 플랫폼은 ETA의 전 주기를 커버하는 7가지 핵심 모듈로 구성

〈표 3-20〉 7가지 핵심 기능 내용

번호	핵심모듈	주요 기능 및 역할	민관 협력 방안(PPP)
1	딜 소싱 (Deal Sourcing)	지역/업종별 매물 검색, AI 추천, 가치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 AI 매칭 알고리즘, UI/UX 제공</li> <li>• (정부) 지자체(TP/CCEI)발굴 지역 매물 DB 연동</li> </ul>
2	자금 (Financing)	인수금융 자동 산출, 보증/대출 원스톱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 딜 구조 설계, 민간 투자자(VC/ PE) 매칭</li> <li>• (정부) 기보/신보 보증 자동심사, IBK/산은 대출 연계</li> </ul>
3	기술이전 (Tech Transfer)	기업 맞춤형 특허 추천, R&D 지원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 피인수 기업 분석, 기술 수요 발굴</li> <li>• (정부) NTB(국가기술은행) API 개방, 대학 TLO 연계</li> </ul>
4	교육 (Education)	ETA 부트캠프, 온라인 실무 강좌, 자격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 실전 커리큘럼 개발, 멘토링 매칭</li> <li>• (정부) 교육비 바우처 지원, 창업중심대학 연계</li> </ul>
5	정책 지원 (Policy Support)	법률/실사/에스크로 등 거래 안전망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중소형 M&amp;A 거래 리스크 완화 정책 연계 지원</li> <li>• (정부) 표준화된 디지털 거래 인프라 제공</li> <li>• (정부) M&amp;A 실사·법률·회계 비용 바우처연계 등</li> </ul>
6	커뮤니티 (Community)	성공 사례 확산 및 생태계 문화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글로벌 딜 파이프라인 구축 및 현지화(PMI) 전략 자문 풀 운영</li> <li>• (정부) 성공 사례 데이터베이스 및 스토리 공유 등</li> </ul>
7	글로벌 확장 (Global Expansion)	크로스보더 M&A 파이프라인 및 통합(PMI)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 인수창업 문화 확산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커뮤니티 조성</li> <li>• (정부) 성공 사례 데이터베이스 및 스토리 공유 등</li> </ul>

## □ 통합 플랫폼 예시 화면

### [참고] 플랫폼 예시 화면

**Listing.** 딜 소싱 자금 조달 기술 이전 교육 지원 커뮤니티

**딜 소싱 (Deal Sourcing)**  
Listing의 AI 기술과 지역 파트너(TP/CCEI)가 검증한 우량 매물을 만나보세요.

전국 전체 상세 필터

**New Arrival**  
**이번 주 신규 등록된 우량 매물 42건**  
지역 제조 혁신 기업 특별권이 오픈되었습니다. [매물 보러가기](#)

**Listing 인증**

**경남 창원**

**[#2041] 정밀 자동차 부품 제조** 94% AI 매칭

20년 업력의 1차 벤더. 공장 자동화 도입 시 이익률 개선 가능. 고품질 신뢰 확보.

연 매출	120억 원	회망 매도가	45억 원
영업이익	15억 원	EBITDA	3.5x

**CCEI 추천**

**부산 강서**

**[#1982] 특수 물류 창고업** 88% AI 매칭

항만 인접 유리한 입지. 냉동/냉장 시설 완비. 2세 경영 포기로 인한 매각.

연 매출	50억 원	회망 매도가	20억 원
영업이익	4억 원	자산가치	18억 원

**비밀 유지 서약 필요**

**[#2055] 반도체 장비 부품 가공**

S사 1차 협력사 등록. 독보적인 초정밀 가공 기술 보유. 기밀 유지를 위해 상세 정보 비공개.

NDA 서명 후 열람 신청

**Listing.** 딜 소싱 **자금 조달** 기술 이전 교육 지원 커뮤니티

**자금 조달 (Financing)**  
정책 금융(기보/신보) 자동 심사와 민간 투자(VC)를 결합한 최적의 자금 구조를 제안합니다.

**인수 자금 시뮬레이터**

목표 인수 금액 **45억 원**

신순위 50%	후순위 30%	자본 20%
인수금융 (Loan)	투자 유치 (Equity)	자기자본
22.5억 원	13.5억 원	9억 원

**제1금융권 인수금융** 심사 승인 완료

기술보증기금 보증서 90% 담보 [대출 신청](#)

금리 연 4.2%~ 3년 거지 7년 상환

**K-ETA 전용 프로젝트 펀드** IR 자료 제출

Listing 파트너 VC 및 개인투자조합 매칭

RCPS / CB 투자확약서(LOC) 발급

**AI 보증 심사 리포트**

Listing.co의 기업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공 보증 기관(KIBO, KODIT)의 예비 심사 결과를 미리 확인하세요.

**기술보증기금** 적격

예상 보증 한도: 20억 원

**신용보증기금** 심사중

M&A 특례보증 심사 진행 중

[심사 결과 상세 보기](#)

Listing.

[딜 소싱](#)
[자금 조달](#)
[기술 이전](#)
[교육](#)
[지원](#)
[커뮤니티](#)


🔍

🔔
👤

## 기술 이전 (Tech Transfer)

산업부 국가기술은행(NTB) 데이터와 대학 TLO를 연동하여  
피인수 기업의 혁신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찾아드립니다.

필요한 기술 키워드를 입력하세요 (예: 스마트팩토리, 2차전지, AI비전)
 🔍

🔖
**AI Roll-up 추천 기술**

선택하신 [#2041] 정밀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술입니다.

NTB 등록
☆

**나노 복합재 기반 초경량 부품 성형 기술**

한국재료연구원 | TRL 8단계 (상용화 임박)

예산 이전료: 5,000만원

상담 신청

대학 TLO
☆

**IoT 기반 프레스 공정 실시간 모니터링**

K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 특허 등록 완료

기술 지도(Consulting) 포함

상담 신청

💰
**기술 인수 금융 지원**

📄 **IP(지식재산) 인수 보증**

기술 이전 비용의 최대 90% 보증 지원 (기술보증기금)

✂️ **사업화 R&D 자금**

이전 기술 상용화를 위한 후속 R&D 지원 (최대 2억 원)

지원 사업 공고 전체보기

찾는 기술이 없으신가요?
🔍

기술 전문가(CTO)가 기업에 딱 맞는  
핵심 기술을 대신 찾아드립니다.

기술 매칭 서비스 신청

Listing.

[딜 소싱](#)
[자금 조달](#)
[기술 이전](#)
[교육](#)
[지원](#)
[커뮤니티](#)


🔍

🔔
👤

## 3. 법률 지원 (Legal Support)

**전문 변호사 매칭 및 계약서 검토**

M&A 전문 변호사가 주식양수도계약서(SPA), 주주간계약서(SHA) 등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 서류를 검토하고 독소 조항을 수정 제안합니다.

#SPA작성 #법률실사 #노무리스크

📄 표준 계약서 자동 작성

👤 변호사 상담 예약

📌 **M&A 실사/법률 지원 바우처**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으로 실사 비용의 최대 80%를 지원받으세요.

나의 잔여 한도

1,500만원

Listing.

[딜 소싱](#)
[자금 조달](#)
[기술 이전](#)
[교육](#)
[지원](#)
[커뮤니티](#)


🔍

🔔
👤

## 커뮤니티 (Community)

창업 선배들의 노하우를 듣고, 동료들과 자유롭게 토론해보세요.

새 글 쓰기

전체글
🔥 인기글

자유게시판
Q&A 질문방
성공 사례 공유

🔍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공지	[필독] 커뮤니티 이용 수칙 및 매너 가이드 (2025.12 개정)	👑 운영자	12.01	5.2k
1042	Q&A 제조업 인수 시 재고 실사 팀 좀 부탁드립니다. 📩 12	초보사장 🌐	13:42	128
1041	상공사례 30년 된 식품 공장 인수 6개월 차 후기 (feat. PMI) 🔥 45	김인수 🟢	12.16	1.4k

⏪
1
2
...
⏩

74 ●●

Listing.

[딜 소식](#)
[자금 조달](#)
[기술 이전](#)
[교육](#)
[지원](#)
[커뮤니티](#)


🔍
🔔
홍길동
인수 창업가

### 교육 (ETA Academy)

입문부터 심화까지, M&A 전문가가 검증한 실전 커리큘럼을 만나보세요.

전체 카테고리

입문




**인수창업(ETA) 개론: 사장님이 되는 가장 빠른 길**

맨땅 창업보다 안전한 인수창업의 개념과 프로세스 전반을 이해합니다.

✔ 수강 완료
다시보기

재무




**기업가치평가(Valuation) 실무: 얼마가 적정가인가?**

EBITDA 멀티플, DCF 등 실무에서 쓰이는 가치평가 기법을 역설 실습과 함께 배웁니다.

📈 45% 진행 중
이러보기

회계



**재무제표의 숨은 리스크 찾기 (실사 기초)**

분석회계 징후 발견법, 우발채무 확인 등 실사(Due Diligence) 핵심 체크리스트.

이회계사
수강신청

---

Listing.

[딜 소식](#)
[자금 조달](#)
[기술 이전](#)
[교육](#)
[지원](#)
[커뮤니티](#)

🔍
🔔
홍길동
인수 창업가

### 전문가 지원 서비스 (Support)

성공적인 인수를 위해 에스ক্র로, 회계 실사, 법률 자문 등 필수 전문가 서비스를 선택하세요.

**1. 안심 에스ক্র로 (Escrow)**

거래 대금을 제3기관에 예치하여 '역튀'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자산을 이전합니다.

금융위원회 등록 사업자

계약금 예치
실사 및 자산확인
잔금 지급 (딜 클로징)
주식/경명권 양도

나의 에스ক্র로 상태

**잔금 예치 대기 중**

전용 계좌: 우리은행 1002-XXX-XXXX (예금주: K-ETA)

입금 확인중 발급

- ✔ 계약금 10% 입금 확인 (2025.12.01)
- ✔ 실사 종료 확인서 제출 (2025.12.15)
- 📌 잔금 90% 입금 대기 (D-5)

**2. 회계/재무 실사 (Financial DD)**

거래 규모와 목적에 맞는 실사 서비스를 선택하세요. 모든 보고서는 공인회계사(CPA)가 직접 작성합니다.

Screening

**약식 재무 실사**  
(High-Level Due Diligence)

거래 초기 단계에서 중대 리스크를 신속히 식별하여, 본 실사 진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스크리닝 목적의 실사입니다.

- 손익 구조: 매출 구성, 일회성 손익 식별
- BS 항목: 주요 자산/부채 중점 내역 분석
- 잠재 리스크: 자본잠식, 우발채무, 특수관계자 거래 점검
- 산출물: 약식 보고서 (10~15p 내외)
- 기간: 1주일 소요

서비스 비용  
**500만원**

선택하기

추천 (Best)

**정밀 회계 실사 + 가치평가**  
(Full FDD & Valuation)

인수가격 협상과 SPA 작성을 위한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고, M&A 공정가치를 산정하는 풀 패키지입니다.

- 수익 인식: 매출 적정성, 주요 계약 구조 검토
- 비용/자산: Normalized EBITDA, 무실 자산 식별
- 부채/세무: 우발채무, 세무 리스크(세무조사 이력)
- 가치평가: DCF법/상대가치법, 시나리오별 분석
- 산출물: 정밀 보고서(50p+) 및 가치평가 보고서
- 기간: 4주일 소요

서비스 비용  
**3,0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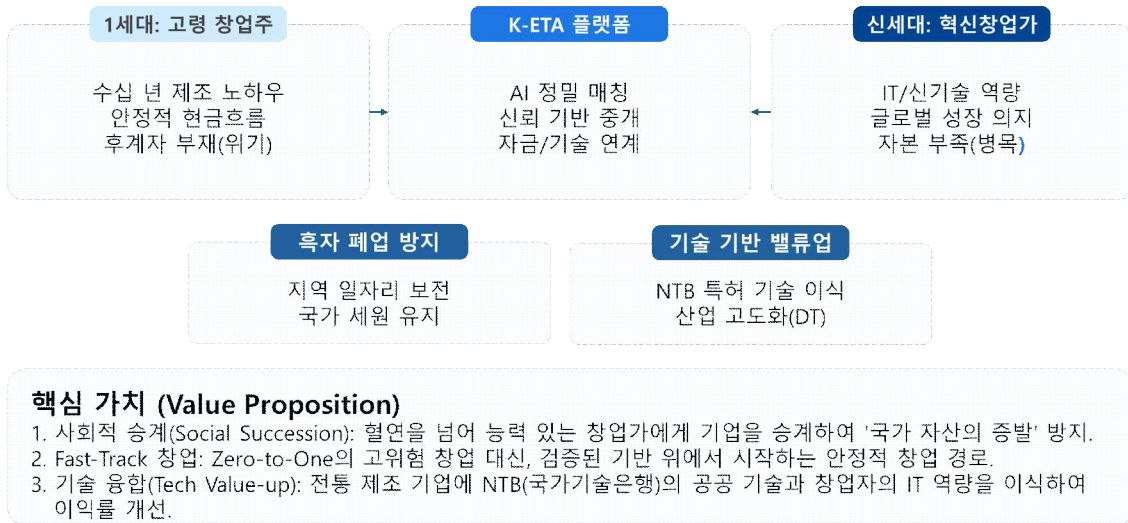
선택하기

## 2. 통합플랫폼 구축 핵심 전략

### □ 민관협력(PPP) 기반 'K-ETA 통합 지원 플랫폼' 구축 방안

#### K-ETA 사회적 승계 선순환 모델

전통의 자산(1세대)과 혁신의 역량(창업가)을 연결하여 국가 경제의 연속성을 만듭니다.



[그림 3-18] K-ETA 사회적 승계 선순환 모델

#### K-ETA 통합 지원 플랫폼 아키텍처

데이터 레이크를 중심으로 민간 플랫폼과 범부처 인프라가 실시간으로 연동됩니다.



[그림 3-19] K-ETA 통합 지원 플랫폼 아키텍처

### 3. 실행과제별 추진 내용

#### 가. [딜 소싱] 지자체 협업을 통한 ‘전국망 딜 파이프라인’ 구축

##### □ 문제점

- 민간 플랫폼은 수도권 및 IT 기업 위주의 매물이 많고, 지방 소재 제조 기반의 알짜 기업 정보는 오프라인에 머물러 있는 현상

##### □ 해결방안

- ① (지역 거점 딜 소싱 파트너십) 전국 19개 창조경제혁신센터(CCEI)와 테크노파크(TP)를 플랫폼의 ‘공식 딜 소싱 파트너’로 지정하여 이들 기관은 지역 내 후계자 부재 기업을 전수 조사하고, 매각 의사를 타진하여 1차 정보를 수집
  - CCEI (창조경제혁신센터) : 지역별 창업가 발굴 및 보육, 로컬 크리에이터와 전통 제조 기업의 매칭
  - TP (테크노파크) : 지역 산업 단지 내 후계자 부재 기업 상시 전수 조사 및 ‘매물화’ 지원
  - COMPA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특구 내 딥테크 기술과 기업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
- ② (공공-민간 데이터 API 연동) 지자체가 수집한 매물 정보(익명화된 Teaser)를 민간 플랫폼(Listing)에 실시간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API를 연동하여 서울의 창업가가 부산의 정밀 가공 기업을 플랫폼에서 검색하고 매칭될 수 있는 전국망을 구축
- ③ (AI 매칭 고도화) 민간의 축적된 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하여, 단순 업종 매칭을 넘어 창업가의 전공, 경력, 보유 기술과 피인수 기업의 기술적 필요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매칭 성공률을 제고
  - 역량 기반 AI 정밀 매칭 : 단순 업종 매칭을 넘어, 창업가의 전공, 세부 경력, 보유 기술과 피인수 기업의 기술적 니즈를 다차원으로 정밀 분석하여, 창업가의 역량이 기업 혁신으로 이어질 확률이 가장 높은 조합을 산출하여 매칭 성공률을 극대화
  - AI 기반 전문가 풀 구축 : 은퇴 CEO, 기술 전문가, M&A 전문 인력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야별 전문가 풀을 자동 구축
    - ※ AI는 딜의 성격에 맞춰 최적의 자문 팀을 구성하고 평판을 실시간 관리하는 시스템을 작동
  - NTB 연계 AI 기술 가치 평가 : 국가기술은행(NTB)의 방대한 기술 데이터와 피인수 기업의 제조 공정을 AI로 교차 분석
    - 기업 인수에 따라 도입 가능한 ‘최적 혁신 기술’을 자동 매칭하고, 기술 도입 시 예상되는 생산성 향상 및 가치 증대 효과를 수치화하는 새로운 AI 기술 사업화 평가 모델을 마련

## 나. [자금] 'ETA 특화 금융 패키지'의 플랫폼 내재화(Embedded Finance)

### □ 문제점

- 창업가는 신용과 담보 부족으로 인수 자금 조달에 실패하며 기존 정책 자금은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심사에 장시간이 소요

### □ 해결방안

- ① (윈스톱 보증/대출 심사 시스템) 플랫폼 내에서 딜이 매칭되고 가치평가 보고서가 생성 되면, 해당 데이터가 기술보증기금(KIBO) 및 신용보증기금(KODIT)의 심사 시스템으로 자동 전송
  - 리스팅은 이미 나이스평가정보와 협력하여 신뢰도 높은 기업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공공 보증 심사의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
  - 플랫폼에서 생성되는 기업 분석 자료를 표준화된 데이터 체계로 정제하여 기관 심사 시스템과 직접 연동함으로써 중복 서류 제출과 별도 기초 실사를 최소화
- ② ('후순위 채권 정부 보증' 전용 상품 신설) 제1차 제안서에서 언급된 정부가 후순위 채권(20%)을 보증하여 민간 은행의 선순위 대출(50%) 참여를 유도하는 구조화 금융 상품을 플랫폼 전용 상품으로 출시
  - 정부가 직접 대출을 확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위험의 일부를 후순위로 분담함으로써 민간 금융기관의 위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
- ③ (프로젝트 펀드 및 클라우드 펀딩 연계) 플랫폼에서 검증된 우량 딜에 대해, 민간 투자자(VC, 개인투자조합)들이 소액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 펀드 조성 기능을 탑재하여 지분 투자(Equity) 조달 창구를 다변화
  - 부채 중심의 자금 조달 구조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인수 거래에 대해 지분 투자 방식의 자금 유입을 허용함으로써 자본 구조의 안정성을 제고
- ④ (경영 및 투자 자문 오픈 플랫폼 구축) 자금 조달에 그치지 않고 인수 전후 과정에서 필요한 경영 및 투자 자문을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 매칭 오픈 플랫폼을 연계하여 금융 실행의 안정성을 확보
  - 플랫폼은 회계, 세무, 법률, 산업 전략, 재무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풀을 구축하고, 인수 단계별로 적합한 전문가를 연계
  - 인수 전 단계에서는 실사와 계약 구조 자문을 지원하여 인수 직후에는 재무 구조 개선과 조직 안정화 방안을 제시하고 일정 기간 이후에는 성장 전략 및 추가 투자 유치 자문까지 이어지도록 설계

- ⑤ (TCB정보와 R&D성과 연계플랫폼 구축) 민간 기업에서 활성화 되어있는 TCB정보와 정부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정보를 상호 활용할 수 있는 연계플랫폼을 구축하여 기업 지원의 신뢰성과 효과성 강화
- T등급 신뢰성 : 국가연구개발 수행 이력 기업은 미수행 기업 대비 상위 T등급(T1~T3)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특히, 연구조직 및 기술인력 전문성에서 뚜렷한 편차 제시
  - 정책적 활용 : TCB 등급은 단순 금융 지표를 넘어, 기업의 기초 기술 역량을 진단하는 기술 검증 신호 등으로 활용 가치가 입증
- ⑥ (플리패스(Fast-Track) R&D 바우처 제공) TCB의 T3등급 이상 우수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과제 선정 심사 면제/최소화 및 연구비 선지급으로 사후 결과 중심(KPI) 책임 평가 제도 도입
- ⑦ (기술담보 금융 확대 및 금리 우대) T등급을 실질적 담보로 인정하여 보증 한도를 파격적으로 상향하는 무형 담보 인정, 정책 자금 대출 시 최대 2% 금리 인하 및 지자체 연계 이자 보전 지원하는 금리 우대 제공

#### □ 인수금융펀드 설계(안)

##### ○ 펀드 개요

- 명칭 : ETA 기술가치제고(Tech Value-up) 혁신 펀드
- 규모 : 총 2,000억 원
- 목적 : 후계자 부재 우량 중소기업 인수 및 딥사이언스 기술 이식을 위한 인수 자금 (Acquisition Capital) 공급
- 조성 방식: 정부 20% + 민간(금융기관 및 운영사) 80% 공공-민간 협력형(PPP) 구조

##### ○ 트랜치(Tranche) 기반 자본 구조

- 위험 선호도가 다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펀드를 세 개의 층으로 설계

〈표 3-21〉 K-ETA 운영지원 펀드 구조(안)

구분	비중	금액	참여 대상	수익/위험 배분 방식(Waterfall)
선순위	50%	1,000억원	시중은행, 보험사	• [저위험/확정수익] 원금 및 우선 이자 (시중금리+ $\alpha$ ) 최우선 배분. 정부 지분이 방어막 역할을 하여 신용 보강.
중순위	30%	600억원	캐피탈, VC, 전략적 투자자	• [중위험/중수익] 선순위 배분 후 원금 및 목표 수익 배분. 초과 수익 발생 시 성과 인센티브 수취.
후순위	20%	400억원	정부	• [고위험/축매자본] 손실 발생 시 가장 먼저 충당(First Loss). 민간 자금의 리스크를 제거하여 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

○ 글로벌 사례 벤치마킹

① 일본 : Search Fund Japan(민관 합동 모델)

- 구조 : 일본정책투자은행(DBJ)과 민간 M&A 센터가 합작하여 조성.
- 시사점 : 정부 산하 금융기관이 지분 참여 및 신용을 보장함으로써, 보수적인 일본 금융권 자금을 중소기업 승계 시장으로 끌어들이. 우리 모델에서도 과기부의 후순위 참여가 민간 은행의 선순위 대출 참여를 결정짓는 핵심 기제가 됨.

② 영국 : Enterprise Capital Funds(ECF)

- 구조 : 정부가 최대 2/3까지 출자하되, 비등기 수익 배분(Non-pari passu) 방식을 채택.
- 시사점 : 수익 발생 시 정부는 국채 금리 수준의 낮은 수익만 가져가고, 초과 수익의 대부분을 민간 LP와 운영사에게 몰아줌. 이를 통해 고위험 분야인 SME 인수 시장에 민간 자본이 자발적으로 유입하도록 설계함

○ 운영 메커니즘 및 수수료 체계

① 대출 프로세스

- 대출 한도 : 인수 금액의 최대 70%(팀당 최대 50억 원) 내외를 저리 대출. 나머지 30%는 창업팀 자본금 및 외부 투자로 충당.
- 관리 : '인수금융펀드' 운용사가 대출 실행, 회수까지 전 과정을 관리.

② 운영사 수수료 구조

- 관리 보수 : 연간 펀드 결성액의 일정 비율 수취

○ 기대 효과 및 투자 유인

- 정부 입장 : 직접 보증 방식보다 적은 예산(400억 후순위)으로 2,000억 원 규모의 레버리지 효과 창출. 우량 기업의 폐업 방지 및 기술 고도화 달성.
- 민간 금융기관 입장 : 정부의 20% 후순위 보호막 덕분에 실질적인 부실 위험(Default Risk)이 거의 없는 'AAA급 안전 자산'에 투자하면서 안정적 이자 수익 확보 가능.

## 다. [기술이전] NTB 연동을 통한 ‘AI-Rollup’ 및 기술 사업화

### □ 문제점

- 기업 인수 후 성장을 위해서는 신기술 도입이 필수적이거나, 창업가는 적합한 기술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릅니다. 공공 기술(NTB)은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

### □ 해결방안

- ① (NTB 데이터 전면 개방 및 추천) 산업부의 국가기술은행(NTB) 데이터를 민간 플랫폼에 API로 전면 개방
  - 플랫폼은 창업가가 특정 기업(예: 자동차 부품사)을 조회할 때 해당 기업의 혁신에 필요한 공공 기술(예: 전기차 모터 기술)을 자동 추천하는 기능을 제공
  - AI 기반 분석 기능은 인수 대상 기업의 기존 사업 영역, 산업 트렌드, 기술 공백 영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한 공공 특허를 자동으로 제안하는 방식으로 구현
- ② (‘기술 인수 보증’ 연계) 창업가가 기업 인수와 동시에 NTB 등록 기술을 이전받을 경우 기술보증기금의 ‘지식재산(IP) 인수 보증’ 상품을 자동으로 연계하여 기술 이전료 및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체계 마련
  - 플랫폼 내 자동 연계 구조를 통해 인수 계약 체결과 동시에 기술이전 계약이 진행될 경우 관련 보증 상품이 즉시 연결되도록 설계
  - 기술 이전료, 초기 연구개발비, 시제품 제작비 등 사업화 초기 단계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으며, 인수 직후 기술 고도화를 추진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마련
- ③ (대학 TLO 파트너십) 전국 대학 산학협력단(TLO)을 플랫폼 파트너로 참여시켜, 기술 보유 연구자와 인수 창업가 간의 매칭 및 기술 지도 계약을 플랫폼상에서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
  - 플랫폼 기반으로 통합하여, 인수 창업가가 특정 기술을 이전받을 경우 해당 기술을 개발한 연구자 또는 연구팀과 직접 협력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
  - 단순한 기술이전을 넘어 일정 기간 기술 자문, 공동 연구, 후속 개발을 포함하는 협력 모델로 설계함으로써 기술의 현장 적용성과 사업화 성공 가능성을 제고

## 라. [교육] 실전형 'ETA 부트캠프' 및 전문가 양성

### □ 문제점

- M&A와 PMI(인수 후 통합)에 대한 실무 중심 교육 체계가 부재하여 인수 창업자가 충분한 준비 없이 거래에 참여하는 구조적 문제 발생

### □ 해결방안

- ① (ETA 부트캠프 운영(O2O)) 플랫폼 내에 'ETA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딜 소싱, 가치평가, 법률 계약(SPA), PMI 등 M&A 전 과정에 대한 온라인 심화 강의를 제공
  - 단순 이론 교육이 아니라 실제 사례 기반 커리큘럼으로 구성하여 인수 구조 설계부터 계약 협상, 리스크 점검, 인수 이후 조직 통합 전략까지 전 주기를 다루는 실무 중심 교육 체계를 마련
  - 오프라인에서는 창업중심대학과 연계하여 3~6개월 과정의 실전형 부트캠프를 운영하여 모의 딜 분석, 실사 보고서 작성 실습, SPA 협상 롤플레잉, PMI 시뮬레이션 등을 포함한 실제 인수 과정을 체험하도록 설계
- ② (인증제 도입) 교육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창업가에게는 플랫폼 내에서 '인증 창업가(Certified Searcher)' 배지를 부여하고, 우량 매물 정보에 대한 우선 접근권과 수수료 할인 혜택을 제공
  - 단순 수료 확인이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의 역량과 준비도를 갖춘 창업자를 구분하는 제도로 설계
  - 인증 기준에는 교육 이수 성과, 모의 딜 평가 결과, 실사 분석 능력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일정 기간마다 재인증 절차를 통해 지속적인 학습을 유도
  - 플랫폼 내에서 거래의 신뢰도를 높이는 장치로 기능하여 장 내 신뢰 형성과 거래 효율성 제고라는 부가적 효과를 창출
- ③ (멘토링 매칭) 은퇴한 CEO, M&A 전문가, 회계사/변호사 등 전문가 풀(Pool)을 구성하여 초보 창업가가 언제든지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유료/무료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
  - 멘토링은 인수 단계별로 구분하여 딜 검토 단계에서는 가치평가 및 산업 분석 자문을 제공하고 계약 단계에서는 법률·세무 리스크 점검을 지원하며, 인수 이후에는 조직 통합 및 재무 구조 안정화 전략에 대한 자문을 제공
  - 교육 과정에서 학습한 이론이 실제 거래 상황에 적용될 수 있도록 보완하며 경험 부족으로 인한 의사결정 오류를 최소화

## 마. [정책 지원] 법률/실사/에스크로 등 거래 안전망 구축

### □ 문제점

- 중소형 M&A는 정보 불투명성으로 인한 사기 거래 위험이 있고, 실사 비용(Due Diligence Cost)이 창업가에게 큰 부담
  - 기존에는 표준화된 데이터가 없어 회계사가 수작업으로 자료를 검토해야 했으며,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숨겨진 부채’ 리스크를 확인하기 위해 과도한 시간이 소요

### □ 해결방안

- ① (M&A 바우처 확대 개편) 중기부가 시행 중인 ‘M&A 기업가치평가비용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플랫폼을 통해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 회계/법률 실사 비용의 최대 80%(한도 2천만원)를 지원하는 바우처를 지급
  - 규모 인수 창업자의 경우 가치평가 및 실사 비용이 상당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며 플랫폼 연계형 바우처를 도입함으로써 투명한 거래 절차를 전제로 한 비용 지원 구조를 마련
- ② (안심거래(Escrow) 시스템 도입) 답서치(리스팅)가 범무법인 디엘지와 협력하여 구축한 에스크로 서비스를 플랫폼의 기본 기능으로 탑재
  - 계약금과 잔금을 제3기관에 예치하고 거래 종결(Closing) 확인 후 지급함으로써 ‘떡튀’ 등 금융 사고를 원천 차단
  - M&A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금 미지급, 조건 불이행 등 금융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거래 당사자 간 신뢰 부족으로 인한 분쟁 가능성의 구조적 완화 기능 수행
- ③ (법률 자동화(Legal Tech)) NDA, MOU, SPA 등 표준화된 M&A 계약 서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전자서명 기능을 통해 복잡한 계약 절차를 온라인에서 간편하고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지원
  - 복잡한 계약 절차로 인한 시간 지연과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표준화된 계약 구조를 활용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실무 부담을 경감
- ④ (거래 표준화) 플랫폼 내 ‘표준화된 가치평가 보고서’와 ‘디지털 실사 룸(VDR)’을 제공하여 실사 비용을 기존 대비 50% 이상 절감
  - 표준화된 평가 보고서는 재무·비재무 요소를 통합 분석하여 동일 기준의 가치 검토를 지원하고 디지털 실사 룸은 자료의 안전한 공유·관리 환경 제공

## 바. [커뮤니티] 성공 사례 확산 및 생태계 문화 조성

### □ 문제점

- M&A의 부정적 인식('기업 사냥꾼')이 존재하고 거래 참여자 간 정보 공유 채널이 부족하여 신뢰 형성과 사례 확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생태계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 □ 해결방안

- ① (성공 스토리 발굴) 플랫폼 내 'ETA 성공 사례관' 상시 운영을 통한 인수 기반 2세대 경영 혁신 사례의 체계적 발굴·축적·공유 체계 구축
  - 단순 사례 소개를 넘어 인수 전후 재무 성과 변화, 매출 성장률, 고용 유지 및 확대 효과, 기술 고도화 성과 등 객관적 정량 지표 제시를 통한 M&A의 경제·사회적 기여도 가시화
  - 안국약품의 디메디코리아 인수 사례 등 민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모델의 집중 조명과 모범 사례의 유형화
  - 산업별·지역별 성공 사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학습 자산 축적 및 재현 가능 모델 제시
- ② (포럼 및 네트워킹) 정기적 온·오프라인 포럼 개최를 통한 매수자·매도자·투자자·금융 기관·전문가 간 교류 플랫폼 상설화
  - 산업별 트렌드 세션, 성공 사례 발표, 가치평가·법률·세무 실무 세션 운영을 통한 실질적 정보 교환 촉진
  - 초기 인수 창업자와 경험 보유 경영자 간의 연결 지원을 통한 학습 네트워크 형성 및 신뢰 기반 관계 구축하고 폐쇄적 네트워크 중심 거래 구조의 보완과 공개적·구조화된 교류 채널 확대
  - 정보 비대칭 완화와 거래 투명성 제고, 잠재적 거래 기회 발굴 활성화 및 장기적 파트너십 형성 기반을 조성하여 지속적 커뮤니티 운영으로 M&A 참여자 간 공동체 의식 형성과 건강한 거래 문화 정착

## 사. [글로벌 확장] 크로스보더 M&A 파이프라인 및 통합(PMI) 인프라 구축

### □ 문제점

- 기존의 현지 법인 설립(Greenfield) 방식의 해외 진출은 막대한 시간적 기회비용과 현지 규제, 문화적 장벽이라는 치명적인 리스크를 수반하며 유기적 성장(Organic Growth) 속도가 현저히 지연

### □ 해결방안

- ① (크로스보더 M&A 유동성 공급 채널 진화) K-ETA 플랫폼 내에 국내 인수창업가들이 건설한 중소기업을 발판 삼아 해외 유사 기업을 연속 인수(Bolt-on)하거나, 반대로 글로벌 기업에 전략적으로 매각(Out-bound/In-bound)할 수 있는 크로스보더 딜 파이프라인을 구축
  - 스웨덴 스타트업들은 글로벌 확장성(Scalable)을 염두에 둔 3S 비즈니스 모델로, 엑시트 성공 사례 중 해외 M&A 비율이 40.9%에 달해 단기간에 글로벌 유통망을 흡수함.
  - 딜리버리히어로의 ‘배달의민족’ 인수(4.7조 원)나 로레알의 ‘스타일난다’ 인수(6천억 원)와 같이, 크로스보더 M&A는 현지 노하우를 단기간에 이식받기 위한 가장 강력한 전략적 지렛대(Strategic Lever)
- ② (크로스보더 특화 법률/규제 실사 바우처 신설) 현지의 조세 제도, 노동법, 데이터 보안 규제(GDPR 등) 비대칭성을 극복하기 위해 플랫폼 내에 크로스보더 특화 법률, 회계 전문가 풀(Pool)을 구축하고 실사 비용을 지원하는 전용 바우처를 신설
- ③ (다문화 인수 후 통합(PMI) 지원 프로그램 가동) 크로스보더 딜 실패의 주된 요인인 조직 문화의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해 ‘포용적 현지화’ 전략 교육을 지원

## 제5절 추진체계 및 기대효과

- 성공적인 플랫폼 구축을 위해 민간의 창의적 기술력과 정부의 제도적 권한을 결합하는 민관협력(PPP)의 실행력을 강화하여 역할 분담

  - 【 민간 운영사(Listing 등) 】
    - 플랫폼 엔지니어링 : AI 기반 가치평가 모델 및 매칭 엔진 개발, 모바일·웹 통합 UI/UX 고도화
    - 보안 및 신뢰 인프라 : FIPS 140-2 표준의 데이터 암호화, 블록체인 기반 NDA 체결 및 이력 관리
    - VDR (가상 데이터룸) 운영 : 매수·매도자 간 실사를 위한 보안 문서 공유 및 권한 제어 시스템 구축
    - 전문가 생태계 관리 : 회계·법률 전문가 풀 검증, 평판 시스템 관리 및 자문 품질 보증
    - 에스크로(Escrow) 서비스 : 거래 안전 보장을 위한 잔금 예치 및 Closing 확인 후 지급 시스템 운영
  - 【 정부(범부처 추진단) 】
    - 중소벤처기업부 : K-ETA 프로젝트 총괄, 규제 샌드박스 지정, M&A 실사 및 자문 바우처 예산 편성
    - 금융위원회 및 정책금융기관 : FSC:ETA 전용 금융 상품 가이드라인 수립
    - 기술보증기금(KIBO) : AI 매칭 리포트 기반 ‘비대면 자동 보증’ 시스템 연동 및 TCB 평가 지원
    - 산업은행/IBK : 선순위 인수 금융 대출(Acquisition Loan) 전용 한도 배정
    - 산업통상자원부 : NTB(국가기술은행) 공공 기술 데이터 API 전면 개방 및 기술이전 정책 연계
    - 국무조정실 : 범부처 협력체계 조율 및 ‘사회적 승계’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구주 인수 세액 공제 등) 검토
  - 【 유관기관 및 지자체 】
    - 지자체 및 테크노파크(TP) : 지역 내 ‘후계자 부재 기업’ 현장 실태 조사 및 플랫폼 매물 등록 유도(딜 파이프라인 형성)

- 창조경제혁신센터(CCEI) : 지역 창업가 대상 ETA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서처(Searcher)’ 보육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COMPA) : 인수 기업의 가치 제고(Value-up)를 위한 후속 R&D 자금 지원 및 사업화 컨설팅
- 대학 산학협력단(TLO) : 대학 보유 기술과 피인수 기업 매칭, 교수·연구원 창업가로의 ETA 유도

#### ○ 【 재정 구조 및 수익 모델 】

- 구축비 : 정부는 플랫폼의 공공 기능(API 연동, 보안 서버 구축 등) 개발에 필요한 초기 자금을 R&D 과제 또는 정보화 사업 예산으로 민간 운영사에 지원
- 운영비 및 수익 : 플랫폼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민간 운영사는 수익 모델 보유
  - Freemium : 기본 검색 및 매칭은 무료로 제공하여 진입 장벽 낮춤
  - Success Fee : 거래 성사 시 매수/매도자로부터 합리적인 수준(예 : 2~3%)의 성공 보수를 수취
  - Value-added Service : 심층 기업 분석 보고서, 우선 매칭 서비스, 프리미엄 교육 콘텐츠 등을 유료화하여 수익을 창출

#### ■ 정량적 기대효과

- (M&A 거래 활성화) 현재 연간 수백 건 수준인 중소기업 M&A 거래를 5년 내 연간 10,000건 이상으로 확대하여 자본 회수 및 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
- (기술이전 효율성 제고) NTB 기술과 피인수 기업의 매칭을 통해 현재 3% 수준인 공공 기술이전율을 10% 이상으로 제고
- (경제적 가치 창출) 흑자 폐업 위기 기업의 구제를 통해 연간 수조 원의 매출 손실을 방지하고, 기업 가치 제고(Value-up)를 통해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창출

#### ■ 정성적 기대효과

- (지역 일자리 보전) 지역 경제의 근간인 제조 중소기업의 소멸을 막아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지역 소멸을 방지
- (청년 창업의 새로운 길) 실패 확률이 높은 ‘맨땅 창업’ 대신 ‘인수 창업’이라는 안전하고 빠른 성장 경로를 제시하여 청년 인재들의 도전적인 창업을 유도
- (성숙한 자본주의 문화) 혈연 중심의 승계 문화를 능력과 혁신 중심의 ‘사회적 승계’ 문화로 전환하여 기업의 영속성을 보장하는 성숙한 자본주의 토대를 마련

□ 경제적 파급 효과 및 성과 분석

- (국가 자산 소실 방지) 후계자 부재로 인한 흑자 중소기업의 폐업을 방지함으로써, 연간 수조 원에 달하는 매출 손실을 막고 기존 기업이 보유한 제조 노하우 및 숙련 기술의 연속성을 보장
- (세수 유지 및 증대) 기업의 존속을 통해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가 세원을 유지하며, 인수 후 기술 혁신을 통한 매출 증대로 추가적인 조세 수입을 창출
- (기술 가치 극대화) 공공 R&D 결과물(NTB)과 민간 기업의 결합을 통해 현재 3% 수준인 기술이전율을 10% 이상으로 끌어올려 국가 R&D 투자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실현
- (M&A 시장 선순환) 자산의 사장을 막고 자본이 혁신 기업으로 재유입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여 시장 전체의 활력을 제고
- (Buy-and-Build 전략을 통한 실질적 유니콘 성장 매커니즘 작동) 단일 기업 인수에 머물지 않고, 파편화된 산업 내에서 건설한 플랫폼 기업을 구심점 삼아 소규모 기업들을 연쇄적으로 추가 인수(Add-on)하는 롤업(Roll-up) 전략을 통해 기업가치를 기하급수적으로 팽창시킴.
- (멀티플 아비트리지 효과) 소규모일 때는 EBITDA의 4~5배 배수를 적용받지만, 이를 병합하여 대형 기업이 되면 8~10배의 프리미엄 배수를 적용받는 ‘멀티플 아비트리지(Multiple Arbitrage)’ 효과가 발생함.
- 이를 통해 실질적인 시너지 창출 이전에도 물리적 결합만으로 기업가치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며, 여기에 공공 딥테크 기술이 더해져 단기간에 글로벌 유니콘(기업가치 1조 원 이상) 기업으로 도약하는 확실한 스케일업 경로를 제공함.

## 제6절 소결

- ‘인수창업(ETA)’은 검증된 과거(기존 기업)와 혁신적인 미래(창업가 기술)를 연결하여 현재의 위기를 돌파하는 가장 강력하고 현실적인 대안
  - 본 고에서 제시한 ‘민관협력 기반 한국형 인수창업(K-ETA) 통합 지원 플랫폼’은 민간의 혁신 기술을 공공의 목적에 활용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DPG)의 모범 사례
    - 정부는 플랫폼을 직접 소유하거나 통제하려 하기보다, 민간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Platform)’을 조성하고 필요한 ‘양분(자금, 데이터)’을 공급하는 역할에 집중 필요
  - 리스팅(Listing)과 같은 검증된 민간 플랫폼과의 과감한 협력과 지원을 통해, 기술과 자본, 그리고 사람이 막힘없이 순환하는 역동적인 M&A 생태계를 구축

〈표 3-22〉 K-ETA 생태계 구축 단계별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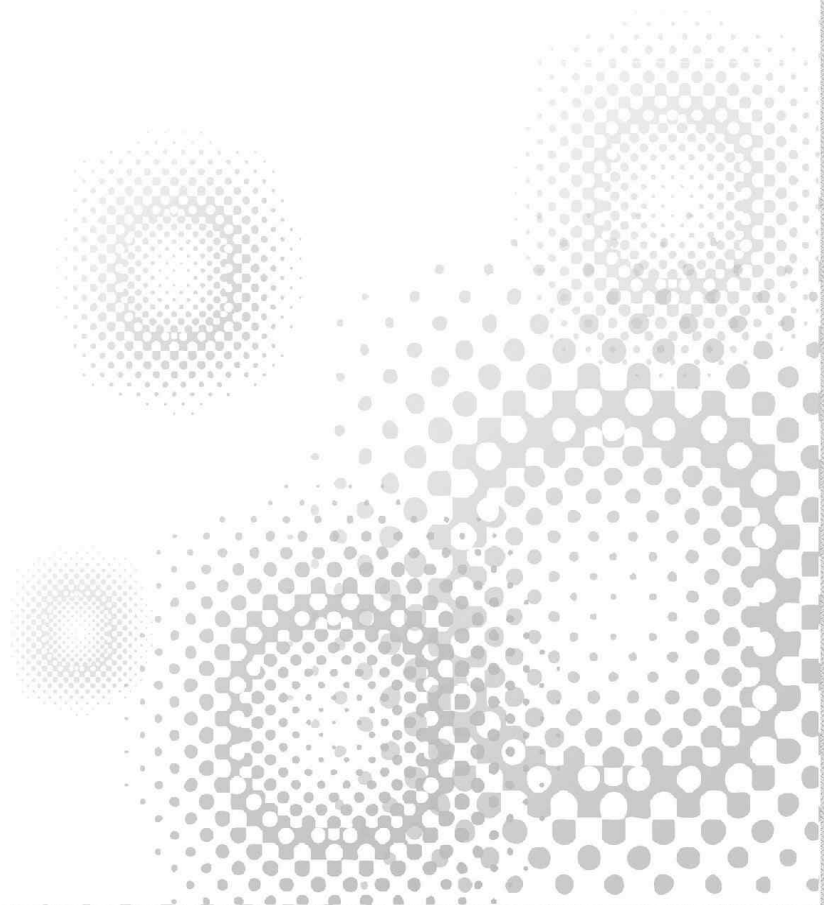
구분	기간	주요 내용	비고
1단계	Y1 상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 운영사 선정(Listing 등) 및 PPP 협약 체결</li> <li>• 범부처 ETA TF 구성(중기부, 금융위, 산업부)</li> <li>• 지역 TP/CCEI 대상 딜 소싱 매뉴얼 배포 및 교육</li> </ul>	거버넌스 확립
2단계	Y1 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 데이터(NTB, 기업DB) 및 금융 심사 시스템, API 연동</li> <li>• 에스크로 및 법률 자동화 시스템 탑재</li> <li>• ETA 부트캠프 커리큘럼 개발</li> </ul>	플랫폼 개발
3단계	Y2 상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 지역(예 : 부울경 제조 밀집 지역) 대상 시범 사업</li> <li>• 1호 성공 사례 발굴 및 집중 지원</li> <li>• 시스템 안전성 테스트 및 UI/UX 개선</li> </ul>	베타 서비스
4단계	Y2 상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확대 운영 및 대국민 홍보 캠페인</li> <li>• 해외 크로스보더 M/A 기능 추가(In/Out Bound)</li> <li>• ETA 전용 펀드 조성 확대 및 투자 생태계 완성</li> </ul>	생태계 정착



## 제4장



# 결론 및 시사점





## 제1절 결론

### □ 혁신기업 선정을 위한 효과적 심사제도 개선 방안

- TCB 기반 기업의 정부연구과제 심사체계 개편은 단기적으로 평가절차의 합리화, 중장기적으로는 국가연구개발 거버넌스의 혁신을 실현하는 핵심 전략
- 이에 따라 개선된 심사제도가 정착될 경우, 첫 번째로 정부는 정확하고 공정한 심사체계를 확보 가능, 두 번째로 기업은 불편한 연구행정 부담을 줄이고 기술기반 공정한 경쟁환경을 확보 가능, 세 번째로 사회는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이 가능한 R&D 혁신생태계 확립 가능
- 따라서, 본 연구는 과기정통부가 주도하는 “데이터 중심의 공정한 R&D 생태계”로 나아가는 구체적 실행 모델로 제시 가능하고, 국가 기술혁신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판단

### □ 범부처 통합 인수창업(ETA) 지원 플랫폼 구축 방안

- ‘인수창업(ETA)’은 검증된 과거(기존 기업)와 혁신적인 미래(창업가 기술)를 연결하여 현재의 위기를 돌파하는 기업 육성측면에서 가장 강력하고 현실적인 대안
- 본 고에서 제시된 ‘민관협력 기반 한국형 인수창업(K-ETA) 통합 지원 플랫폼’은 민간의 혁신기술을 공공의 목적에 활용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DPG)의 모범 사례로 제시 가능
- 따라서 정부는 플랫폼을 직접 소유하거나 통제하려 하기보다는 민간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Platform)’을 조성하고 필요한 ‘양분(자금, 데이터)’을 공급하는 역할에 최선의 집중 필요
- 특히, 리스팅(Listing)과 같은 검증된 민간 플랫폼과의 과감한 협력과 지원을 통해 기술과 자본 그리고 사람이 막힘없는 순환하는 역동적인 M&A 생태계를 구축 필요

## 제2절 시사점

### □ 혁신기업 선정을 위한 효과적 심사제도 개선 방안

- 이재명 정부는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실패용인’ 문화를 정착시키려면 연구자의 행위 구속하는 평가-관리-재도전 시스템 전반의 체계적인 개혁 필요 강조
  - 연구결과 자체보다 도전의 나이도, 연구 과정의 충실성, 실패를 통한 학습 기여도를 평가해야 ‘고위험-고수익’ 연구 분위기 조성 가능
- 특히, 기업의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계획의 충실성, 연구자 또는 소속기관의 연구 개발 역량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민관에서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기술신용평가(TCB) 정보의 연계 활용을 통한 생산적인 지원관리체계 구축 필요
- 정부 연구개발(R&D) 결과와 민관 TCB정보의 상호 활용 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성·생산성 증대와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고도화체계 구축 기반 마련으로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도모하고 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도입 필요

### □ 범부처 통합 인수창업(ETA) 지원 플랫폼 구축 방안

- 맨땅에 시작하는 신규 창업과 달리 기존 사업을 매수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창업 성공률을 높이고 초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
- 신규 창업에 비해 초기 비용이 높을 수 있으나, 가치 창출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라도 초기 비용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지분형 인수금융 등의 정책금융 지원 필요
- 2030세대의 현실적인 고민(대출)과 창업의 꿈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선택지로, 젊은 인재들에게 딥테크, 딥사이언스 기술을 연계한 새로운 창업 솔루션으로 부상
- 우리나라 벤처투자 생태계에서 기업공개(IPO)외에 인수합병(M&A)이 기술집약적 산업의 주요 회수 수단으로 활용되며 국내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기여 가능
- 한국의 경쟁력 있는 AI를 활용한 IT 기반 한국형 인수창업(K-ETA) 통합 지원 플랫폼 구축을 통해 성공 가능한 새로운 글로벌 창업생태계 구축을 주도하여 국가 위상 및 경쟁력 강화에 절실히 필요

##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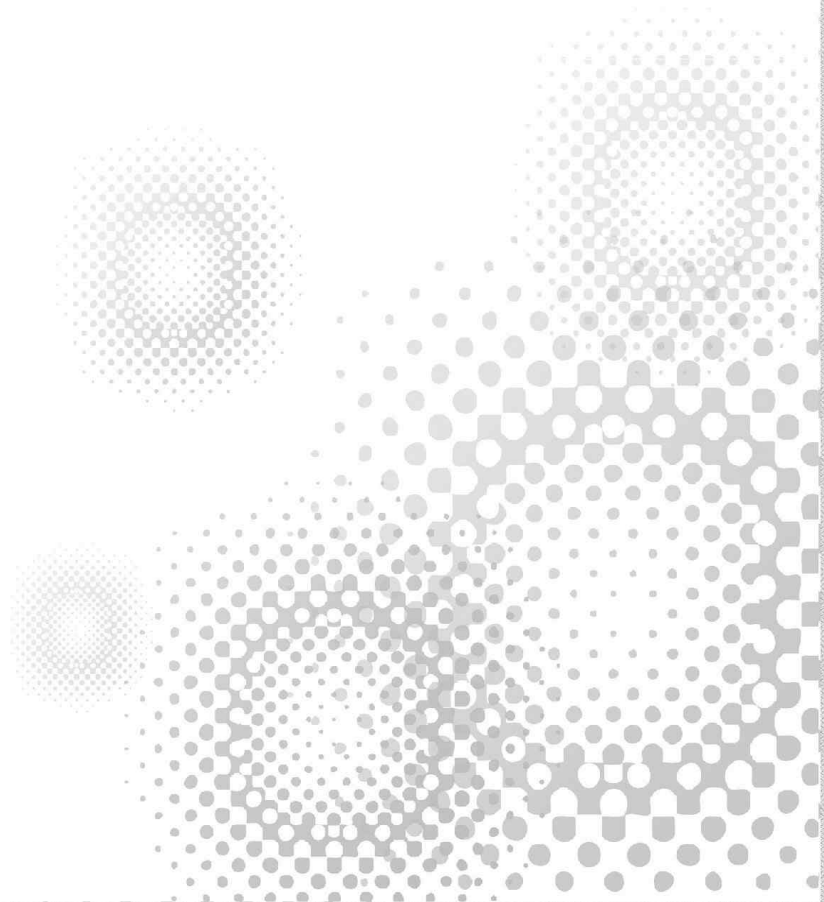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3),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5),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5), 연구개발(R&D) 생태계 혁신 방안
- 금융위원회(2024), 기술금융 개선방안
- 중소벤처기업부(2026),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 중소벤처기업부(2025),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 조성 방안
- 산업통상자원부(2025), 2025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보고서
- 중소벤처기업부(2025), 중소기업 M&A 활성화 방안
- 국회(2025), 인수·합병 등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의원입법)
- 중소기업연구원(2024), 중소기업M&A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 중소기업연구원(2024),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 기술보증기금(2024), M&A 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
- 한국벤처캐피탈협회(2024), 국내 벤처투자 동향
- 창업진흥원(2024), 창업중심대학 및 CCEI 운영 현황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2024), 국가기술은행(NTB) 운영 현황
- Harvard Business School(2023), Search Fund Primer
-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2024), SBA 7(a) Loan Program Overview
- Stanford Graduate School of Business(2023), 2022 Search Fund Study
-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Klimaschutz(2023), nexxt-change Jahresbericht; KfW (2024), ERP-Gründerkredit Startgeld Programm
- 中小企業庁(2024), 中小M&Aガイドライン改訂版
- 中小企業基盤整備機構(2024), 事業承継・引継ぎ支援センター成約件数報告
- <https://www.iris.go.kr/>
- <https://www.fsc.go.kr/>
- <https://www.niceinfo.co.kr/>
- <https://www.kcredit.or/>
- <https://www.modoo.or.kr/>
- <https://listing.co/>



민간 기술혁신 활성화 방안 기획 연구



**[ 별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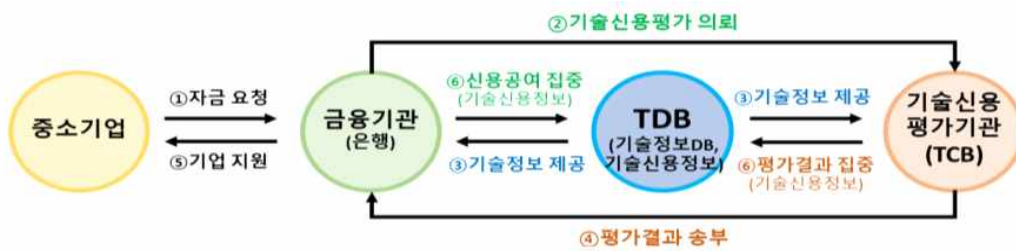
## 별첨 1 한국신용정보원 TCB정보 활용 및 연계(안)

- (개요) 정부의 R&D 혁신기업 선정 심사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한국신용정보원의 기술평가 정보(TCB정보)의 활용성 및 연계 가능성 검토
  - TCB정보는 기술등급(T등급)과 함께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 등 세부 평가 요소에 관한 판단 내용을 포함
  - 정부 연구과제 평가에서 요구하는 기업의 기초역량을 파악하는 정보로서 유의미하며, 구체적인 활용 범위 및 연계 방안 관련하여 신중한 접근 필요

### ※ 기술금융(Tech Financing)

□ 담보력이 부족하지만 미래수익 창출이 기대되는 기술 및 아이디어를 기술평가에 근거하여 자금을 공급하는 행위

\* 기술금융 핵심요소는 ①모형(Model), ②DB(기업·기술·시장) 및 참여기관 ③네트워크(은행·TCB·신청원)이며, 상호 정보제공·보완을 통해 시장 안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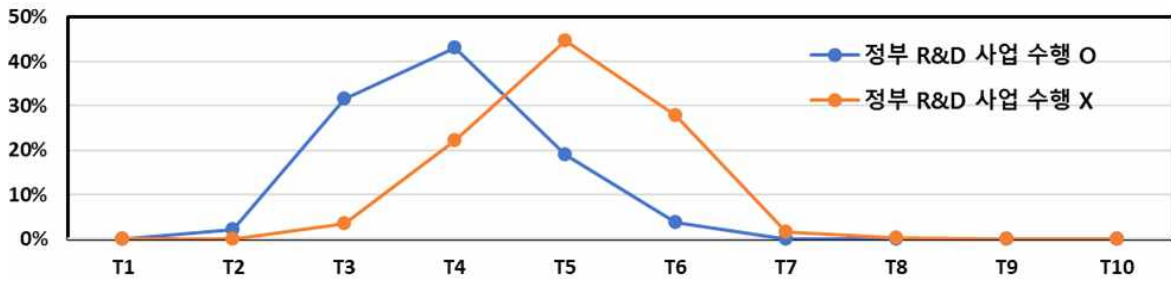
- (현황) '25년말 기준 기술신용대출 잔액 약 318.7조 원\*, 누적 기술신용평가건수 약 277만 건, 평가기업수 기준 약 57만 개
  - 연간 약 30만 건 내외의 평가가 수행되고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이력이 있는 기업에 대한 평가는 연간 약 1.5만 건 발생

〈별첨 표 1-1〉 기술금융 규모 추이

구분		'18	'19	'20	'21	'22	'23	'24	'25
기술신용 대출	잔액(조원)	163.8	205.5	266.9	316.4	326.0	304.5	302.8	318.7
	증감률(%)	28.2	25.5	29.9	18.6	3.0	△6.6	△0.01	5.6
누적 평가건수(만건)		53.6	78.2	111.7	151.5	190.2	221.2	249.0	277.3
누적 평가기업(만개)		17.9	23.9	33.6	42.1	48.7	51.7	54.2	56.6

※ 자료 :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원 기술신용정보 집중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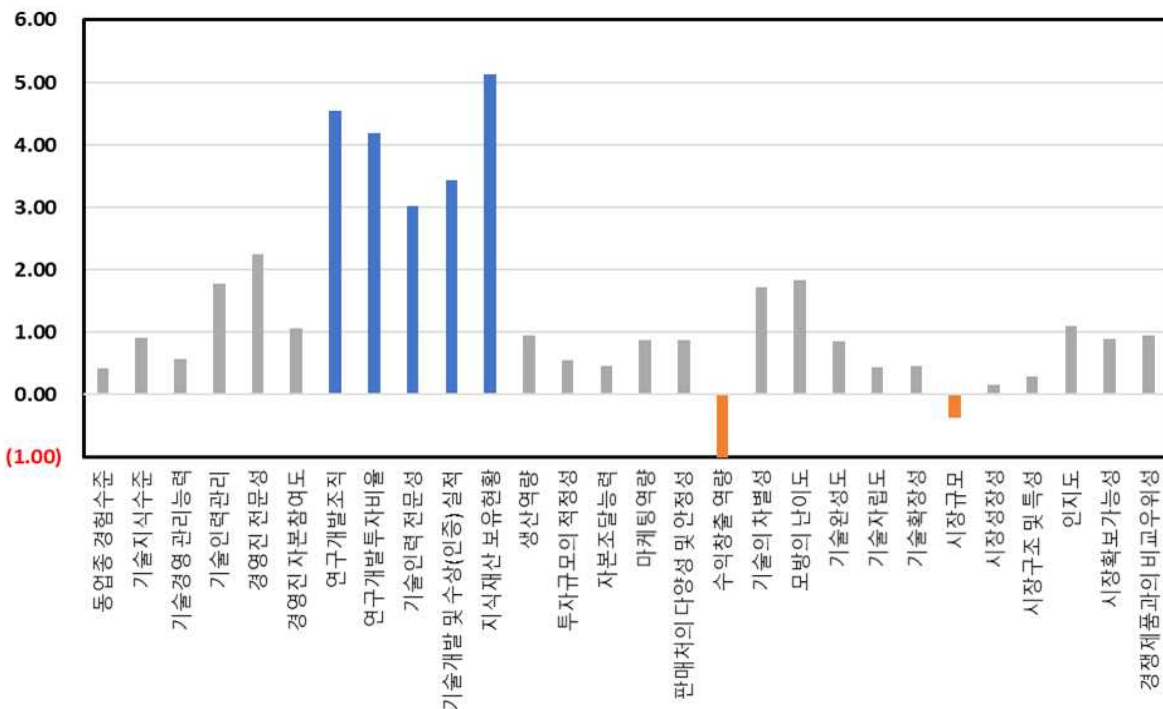
- (활용성 검토) 신청원에 집중된 TCB정보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T등급이나 소항목 결과에서 정량적 활용 가능성 존재
- (T등급) 5년 이내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이력이 있는 기업군은 미수행 기업군 대비 상위 T등급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



주) T등급은 18등급(T3~T6구간은 T3+, T3, T3-와 같이 노치 등급 존재) 체계이나 편의상 10등급으로 도표 구성하였으며, T10 최상위등급

**[별첨 그림 1-1]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여부에 따른 T등급 분포**

- (소항목) 기술신용평가 소항목 평가점수 전반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기업군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기술개발능력\* 관련 소항목의 경우 3점 이상의 편차 발생
- \* 연구개발조직, 연구개발투자비율, 기술인력전문성, 기술개발 및 수상(인증)실적, 지식재산보유현황



주1) 소항목별 평가점수는 최저 1점부터 최고 10점까지 1점 단위로 부여 가능

주2) '22~'25년 발급된 평가건을 두 기업군으로 나누어 각 소항목 평점 산출평균에 대한 편차 산출

**[별첨 그림 1-2]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여부에 따른 소항목 평가점수 편차**

- TCB정보의 시의성, 실제 반영 수준이 혁신기업 선정평가와 상이할 수 있어 명확한 활용 범위와 인정 기준 설정 필요

  - (활용목적) TCB평가는 여신판단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반면 기업의 연구과제 평가는 보다 넓은 요소\*를 평가함
    - \* 정책부합성, 연구개발 필요성, 수행역량 등
    - TCB정보는 기업의 기술·사업화 역량을 보완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참고 데이터 수준으로 활용 목적을 설정하는 것이 적절
  - (정합성) TCB정보는 기업의 연구과제 평가 시점의 기업 현황과 실질적으로 부합해야 함
    - 기업의 연구과제 평가 시 인정가능한 평가서의 유효기간, 재평가 필요 여부 등 사전 정의 필요
- (타당성 검토) IRIS와 TCB정보 연계는 기술적으로 검토 가능한 범위에 있으나 활용 방안 및 범위에 따라 법적·정책적 고려 사항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전검토 필요

  - (기술적) TCB정보는 전용망 기반으로 집중·관리되고 있어 현행 보안정책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API 설계
  - (법적) 신용정보법상 정보의 이용·제공 가능 범위와 목적 적합성, 정보주체 동의 필요 여부, 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과의 부합 여부 등에 관한 사전 법률 검토 선행
  - (정책적) 기존 기술금융 과정에서 생산된 TCB정보는 은행이 의뢰하고 비용을 부담한 결과물이라는 성격을 가지므로 결과물의 제공 범위 및 활용 권한 측면에서 쟁점 발생 가능
    - 기업의 연구과제 평가를 위해 별도의 TCB평가를 시행할 경우, 기업에 추가적인 평가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것도 고려해야 함



기술신용평가(TCB) 보고서	연구개발계획서(국가연구개발혁신법 양식)																																																																																																															
<p><b>④ 국가 R&amp;D 수행내역</b></p> <p>평가근기   국가 R&amp;D 수행내역 <small>제1차 소분과, 기술개발 및 우수(2년) 실적</small></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과제명</th> <th style="width: 30%;">수행종료년도</th> <th style="width: 40%;">발주기관</th> </tr> </thead> <tbody> <tr> <td style="height: 20px;"> </td> <td> </td> <td> </td> </tr> </tbody> </table>	과제명	수행종료년도	발주기관				<p><b>④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수행 실적</b></p> <p>(2)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수행 실적(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합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연구개발과제명</th> <th style="width: 20%;">주관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기관명 및 역할(주담/공동)</th> <th style="width: 20%;">연구개발기간 (참여기간)</th> <th style="width: 15%;">수행내용</th> <th style="width: 15%;">중앙행정기관 (연문기관)</th> <th style="width: 15%;">비고 (수행 중/완료)</th> </tr> </thead> <tbody> <tr> <td> </td> <td> </td> <td>yy.mm.dd-yy.mm.dd (yy.mm.dd ~ yy.mm.dd)</td> <td> </td> <td> </td> <td> </td> </tr> <tr> <td> </td> <td> </td> <td>yy.mm.dd-yy.mm.dd (yy.mm.dd ~ yy.mm.dd)</td> <td> </td> <td> </td> <td> </td> </tr> </tbody> </table> <p><small>*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5년을 초과하더라도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 또는 (4)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기재해야 합니다.</small></p>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기관명 및 역할(주담/공동)	연구개발기간 (참여기간)	수행내용	중앙행정기관 (연문기관)	비고 (수행 중/완료)			yy.mm.dd-yy.mm.dd (yy.mm.dd ~ yy.mm.dd)						yy.mm.dd-yy.mm.dd (yy.mm.dd ~ yy.mm.dd)																																																																																										
과제명	수행종료년도	발주기관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기관명 및 역할(주담/공동)	연구개발기간 (참여기간)	수행내용	중앙행정기관 (연문기관)	비고 (수행 중/완료)																																																																																																											
		yy.mm.dd-yy.mm.dd (yy.mm.dd ~ yy.mm.dd)																																																																																																														
		yy.mm.dd-yy.mm.dd (yy.mm.dd ~ yy.mm.dd)																																																																																																														
<p><b>⑤ 기업현황/재무정보/주주현황</b></p> <p>기업현황</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업체명</th> <th style="width: 20%;">종업기업(주)</th> <th style="width: 20%;">대표자명</th> <th style="width: 40%;">윤수근/윤한성</th> </tr> </thead> <tbody> <tr> <td>사업자등록번호</td> <td>622-81-05973</td> <td>법인등록번호</td> <td>184611-0002034</td> </tr> <tr> <td>기업형태</td> <td>외국</td> <td>기업규모</td> <td>중소기업</td> </tr> <tr> <td>설립일</td> <td>1988.01.04</td> <td>종업인수</td> <td>227명</td> </tr> </tbody> </table> <p><b>재무정보</b></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주요 재무정보</th> <th style="width: 50%;">전전기(2022.12)</th> </tr> </thead> <tbody> <tr><td>자산총계</td><td style="text-align: right;">92,379</td></tr> <tr><td>자본총계</td><td style="text-align: right;">24,206</td></tr> <tr><td>총차입금</td><td style="text-align: right;">53,112</td></tr> <tr><td>부채총계</td><td style="text-align: right;">68,173</td></tr> <tr><td>매출액</td><td style="text-align: right;">45,596</td></tr> <tr><td>영업이익</td><td style="text-align: right;">2,253</td></tr> <tr><td>당기순이익</td><td style="text-align: right;">1,389</td></tr> <tr><td>부채비율</td><td style="text-align: right;">281.64</td></tr> <tr><td>차입금의존도</td><td style="text-align: right;">57.49</td></tr> <tr><td>매출액증가율</td><td style="text-align: right;">37.27</td></tr> <tr><td>영업이익율</td><td style="text-align: right;">4.94</td></tr> <tr><td>영업CF/자기자본</td><td style="text-align: right;">-35.85</td></tr> </tbody> </table> <p><b>주주현황</b></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주주명</th> <th style="width: 70%;">지분율(%)</th> </tr> </thead> <tbody> <tr> <td>윤한성</td> <td style="text-align: center;">64.70</td> </tr> <tr> <td>윤수근</td> <td style="text-align: center;">21.30</td> </tr> <tr> <td>송수연</td> <td style="text-align: center;">13.00</td> </tr> <tr> <td>윤재근</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td> </tr> </tbody> </table>	업체명	종업기업(주)	대표자명	윤수근/윤한성	사업자등록번호	622-81-05973	법인등록번호	184611-0002034	기업형태	외국	기업규모	중소기업	설립일	1988.01.04	종업인수	227명	주요 재무정보	전전기(2022.12)	자산총계	92,379	자본총계	24,206	총차입금	53,112	부채총계	68,173	매출액	45,596	영업이익	2,253	당기순이익	1,389	부채비율	281.64	차입금의존도	57.49	매출액증가율	37.27	영업이익율	4.94	영업CF/자기자본	-35.85	주주명	지분율(%)	윤한성	64.70	윤수근	21.30	송수연	13.00	윤재근	1.00	<p><b>⑤ 연구개발 일반 현황</b></p> <p>4) 연구개발기관 일반 현황(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계 ※ 비영리기관의 경우 순번 5부터 순번 15까지의 사항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순번</th> <th style="width: 70%;">구분</th> <th style="width: 25%;">기관명</th> </tr> </thead> <tbody> <tr><td>1</td><td>사업자등록번호</td><td> </td></tr> <tr><td>2</td><td>법인등록번호</td><td> </td></tr> <tr><td>3</td><td>대표자 성명/국적</td><td> </td></tr> <tr><td>4</td><td>기관 유형 (대학, 정부출연연, 중소기업 등)</td><td> </td></tr> <tr><td>5</td><td>최대 주주 성명/국적</td><td> </td></tr> <tr><td>6</td><td>설립 연월일</td><td> </td></tr> <tr><td>7</td><td>주생산 품목</td><td> </td></tr> <tr><td>8</td><td>상시 종업원 수</td><td> </td></tr> <tr><td>9</td><td>전년도 매출액</td><td> </td></tr> <tr><td>10</td><td>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td><td> </td></tr> <tr> <td rowspan="3">11</td> <td rowspan="3">부채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td> <td>yyyy년</td> </tr> <tr> <td>yyyy년</td> </tr> <tr> <td>yyyy년</td> </tr> <tr> <td rowspan="3">12</td> <td rowspan="3">유동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td> <td>yyyy년</td> </tr> <tr> <td>yyyy년</td> </tr> <tr> <td>yyyy년</td> </tr> <tr> <td rowspan="6">13</td> <td rowspan="6">자본잠식 현황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td> <td>자본총계</td> </tr> <tr> <td>yyyy년</td> </tr> <tr> <td>yyyy년</td> </tr> <tr> <td>yyyy년</td> </tr> <tr> <td>자본금</td> </tr> <tr> <td>yyyy년</td> </tr> <tr> <td>14</td> <td>이자 보상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td> <td>yyyy년</td> </tr> <tr> <td rowspan="3">15</td> <td rowspan="3">영업 이익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td> <td>yyyy년</td> </tr> <tr> <td>yyyy년</td> </tr> <tr> <td>yyyy년</td> </tr> </tbody> </table>	순번	구분	기관명	1	사업자등록번호		2	법인등록번호		3	대표자 성명/국적		4	기관 유형 (대학, 정부출연연, 중소기업 등)		5	최대 주주 성명/국적		6	설립 연월일		7	주생산 품목		8	상시 종업원 수		9	전년도 매출액		10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11	부채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12	유동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13	자본잠식 현황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자본총계	yyyy년	yyyy년	yyyy년	자본금	yyyy년	14	이자 보상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15	영업 이익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업체명	종업기업(주)	대표자명	윤수근/윤한성																																																																																																													
사업자등록번호	622-81-05973	법인등록번호	184611-0002034																																																																																																													
기업형태	외국	기업규모	중소기업																																																																																																													
설립일	1988.01.04	종업인수	227명																																																																																																													
주요 재무정보	전전기(2022.12)																																																																																																															
자산총계	92,379																																																																																																															
자본총계	24,206																																																																																																															
총차입금	53,112																																																																																																															
부채총계	68,173																																																																																																															
매출액	45,596																																																																																																															
영업이익	2,253																																																																																																															
당기순이익	1,389																																																																																																															
부채비율	281.64																																																																																																															
차입금의존도	57.49																																																																																																															
매출액증가율	37.27																																																																																																															
영업이익율	4.94																																																																																																															
영업CF/자기자본	-35.85																																																																																																															
주주명	지분율(%)																																																																																																															
윤한성	64.70																																																																																																															
윤수근	21.30																																																																																																															
송수연	13.00																																																																																																															
윤재근	1.00																																																																																																															
순번	구분	기관명																																																																																																														
1	사업자등록번호																																																																																																															
2	법인등록번호																																																																																																															
3	대표자 성명/국적																																																																																																															
4	기관 유형 (대학, 정부출연연, 중소기업 등)																																																																																																															
5	최대 주주 성명/국적																																																																																																															
6	설립 연월일																																																																																																															
7	주생산 품목																																																																																																															
8	상시 종업원 수																																																																																																															
9	전년도 매출액																																																																																																															
10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11	부채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12	유동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13	자본잠식 현황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자본총계																																																																																																														
		yyyy년																																																																																																														
		yyyy년																																																																																																														
		yyyy년																																																																																																														
		자본금																																																																																																														
		yyyy년																																																																																																														
14	이자 보상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15	영업 이익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 별첨 3 TCB 보고서 항목 및 혁신기업 선정 평가항목 비교

〈별첨 표 3-1〉 기술신용평가(TCB) 기반 평가항목 매칭표(예시 : 과기정통부)

구분	평가항목 (과기부)	평가내용 (과기부)	평가영역 (TCB)	세부지표 (TCB)	주요 확인자료
연구책임자 역량	연구책임자의 전공 적합성 및 전문성	연구목표 달성에 필요한 학문적 배경, 실무경험, 연구실적	경영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자 전문성</li> <li>• 핵심인력 역량</li> <li>• 기술분야 이해도</li> </ul>	이력서, KRI 실적, 논문·특허목록
수행경험 및 실적	유사분야 과제 수행 경험, 성과창출력	과거 정부과제 수행이력, 성과관리 및 완료율	경영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젝트 수행경험</li> <li>• 사업관리 능력</li> <li>• 성과관리체계</li> </ul>	NTIS 과제이력, 평가 등급, 기술이전 실적
참여연구진 구성	참여인력 전문성, 역할 분담 타당성	연구범위 대비 인력 배분의 효율성, 학제적 협력 구성	기술사업화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적자원 구성 적정성</li> <li>• 팀 역량 및 협업체계</li> </ul>	연구참여계획서, 역할분담표, 조직도
수행기관 인프라	장비, 시설, 실험실 등 연구환경의 적정성	연구장비 보유, 기업 부설연구소 인증, 인프라 활용도	기술역량/ 경영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amp;D 인프라 수준</li> <li>• 시설투자 및 기술지원 체계</li> </ul>	기관현황서, 장비목록, 인증서
연구관리 및 행정역량	연구비 집행 관리, 내부관리제도	연구비 관리시스템, 연구윤리·보안관리 체계	경영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통제 및 관리체계</li> <li>• 연구비 집행관리능력</li> </ul>	내부규정, 회계시스템, 연구윤리규정
협력 및 네트워크 역량	산학연 협력구조, 공동연구 실효성	네트워크 기반의 시너지, 역할 명확성	기술사업화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학연 협력역량</li> <li>• 외부연계 및 네트워크 활용성</li> </ul>	MOU, 협약서, 공동연구 실적
기관의 재정 및 행정지원	연구지원인력 및 예산집행 역량	기관 차원의 재정 건전성 및 지원의지	경영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무건전성</li> <li>• 연구지원조직 체계</li> </ul>	재무제표, 내부감사결과, 인력현황
연구윤리 및 신뢰성	연구윤리 이행, 제재이력 여부	연구부정 방지체계 및 제재이력 유무	경영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통제·윤리경영 수준</li> </ul>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제재이력 확인서

## 별첨 4 부처별 혁신 프리미어 1000 선정 평가항목 비교

〈별첨 표 4-1〉 부처별 혁신 프리미어 1000 평가항목 및 배점 비교표

구분	평가항목	평가 고려사항	배점	
산업부 (128개)	혁신성 (50)	연구개발 인프라	① 연구개발 인력, 장비 보유현황 ② 최근 3년간 연구개발 투자·인력 현황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전체 종업원 대비 연구 인력 비중)	20
		연구개발 역량	① 독보적 선진기술 확보 정도 (보유 혹은 미래 확보기술의 독보성(모방 난이도) 등) ②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③ 제품(기술)의 혁신성 및 경쟁우위 ④ 향후 핵심기술 획득 방안의 구체성과 타당성	30
	성장 가능성 (50)	사업성	① 매출 성장성 및 영업 수익성 (최근 3년 연평균 매출액·영업이익 증가율) ② 비즈니스모델 및 사업화 전략의 타당성 ③ 기술확보 현황 및 향후 주요 시설 전략의 적합성 ④ 투자 로드맵 및 주요 사업 전략의 적합성	25
		시장성	① 목표시장 규모 및 성장성 ② 진입장벽, 시장 규제 및 경쟁 상황 ③ 해외시장 진출 및 확대 가능성	25
	<b>합계</b>			<b>100</b>
	과기 정통부 (110개)	보유사업 모델의 우수성 및 기술의 혁신성 (70)	연구개발 인프라	① 기술개발조직 및 개발인력의 우수성 ② 최근 3년간 연구개발 투자 현황
연구개발 역량			①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② 독보적 선진기술 확보(보유 혹은 미래 확보 기술의 독보성 (모방 난이도), 제품화 시 시장 지배력) ③ 향후 핵심기술 획득 방안의 구체성과 타당성	20
상용화, 해외진출			① BM, 제품, 서비스의 독창성, 시장성 ②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수출/투자 유치 등)	20
파급효과			① 관련 분야 신시장, 일자리 창출 등의 파급효과	10
성장 가능성 (30)		기업 성장 추이	① 최근 3년간 매출액, 수출액, 영업이익률 등의 증가 여부	10
		최근 투자 실적과 필요 자원 및 역량 확보 방안의 적극성	① 최근 3년간 투자실적과 향후 투자 전략 ② 성장을 위한 투자요인과 투자확보 계획의 치밀성 및 타당성 ③ 인력, 시설, 장비, 네트워크 등 필요 역량 확보방안의 적극성 ④ 자금 수요(대출, 보증, 투자) 및 시급성	10
		핵심인재 확보 및 인재육성 적극성	① 최근 3년간 고용 현황 ② 미래 핵심인재 확보 및 고용창출방안의 구체성과 적극성 ③ 핵심인재의 유지방안의 구체성과 적극성	10
<b>합계</b>			<b>100</b>	
환경부 (32개)	혁신성	① 최근 투자유치 실적 및 성과(2년 이내) ②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성 ③ 향후 투자 유치 전략 ④ 지식재산권(특허, 상표권, 디자인권 등) 보유 현황	40	

구분	평가항목	평가 고려사항	배점		
	성장성	① 최근 3년간('22~'24년) 고용 현황 및 고용 증가율 ② 최근 3년간('22~'24년) 매출액 지속 증가율 ③ 고용 또는 매출의 지속적인 향상 가능성	30		
	콘텐츠 우수성	① 참여인력(대표 및 주요 인력) 전문성 및 역량의 우수성 ② 콘텐츠의 경쟁력 ③ 비즈니스 모델의 지속 가능성 ④ 신기술 등을 활용한 사업 확장 가능성	30		
<b>합계</b>			<b>100</b>		
농림축산 식품부 (25개)	기술 혁신성 (50)	연구개발 역량 및 기술 수준	① 보유 기술의 독창성과 차별성 ② 기술의 완성도와 적용 가능성 ③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 보유 현황	25	
		기술 상용화 및 시장 경쟁력	① 기술 상용화 가능성(제품화·서비스화 수준 및 구체성) ② 기술의 시장 경쟁력(유사 기술 대비 우위) ③ 글로벌 진출 가능성 및 잠재력	25	
	성장 가능성 (50)	해당 시장의 성장 가능성 및 잠재력	① 해당 기술이 진입하려는 시장의 성장률(최근 5년 기준) ② 시장 내 경제 강도와 진입 장벽, 기술과 시장 성장성의 적합성 등	10	
		재무 건정성과 성장 추이	① 최근 3년간 재무성과(매출액, 영업이익률 등) 성장 여부 (단, 7년 이내 창업기업의 경우 영업이익률 반영하지 않음) ② 재무 안정성(부채비율 250% 이하, 자본 활용 효율성 등) (단, 7년 이내 창업기업의 경우 부채비율 500% 이하)	15	
		사업 확장 및 투자 유치 역량	① 투자 유치 실적(최근 3년간 투자금액 및 출처) ② 신규 사업 확장 계획(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③ 자금 수요와 확보 전략의 필요성 및 당위성	15	
		조직 역량 및 전문 인력 확보	① 최근 3년간 고용 현황 및 인재 확보 노력 ② 팀 구성원의 전문성(학력, 경력, 자격증 등) 및 협업 역량 ③ 조직 유지 및 발전 전략(인재 육성, 복지제도 등)	10	
	<b>합계</b>			<b>100</b>	
	국토 교통부 (24개)	혁신성 (60)	혁신활동의 우수성	① 신제품, 서비스 개발 등 기업주력 활동이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 부합 여부 ② 최근 3년간 신규사업 발굴, 신제품 개발 등 연구개발 투자 실적 ③ 기술개발 조직 및 개발인력 확보 현황 및 실적의 우수성	30
			기술의 우수성	① 핵심기술의 지식재산권 보유 정도 ② 핵심기술의 우위성(혁신성, 차별성, 모방난이도) ③ 진입장벽, 시장경쟁력, 산업적 중요성, 수출가능성 등	30
		성장 가능성 (40)	기업 자원 확보 노력	① 최근 3년간 매출액, 수출액, 영업이익률 등의 증가 현황 ② 인력, 시설, 장비, 네트워크 등 필요역량 확보방안의 적극성 ③ 인재 확보를 위한 고용창출 방안의 구체성 및 적정성	15
성장 잠재력			① 최근 3년간 투자실적과 향후 투자 전략 ② 매출증대 및 시장 창출 방안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20	
지속 성장 가능성			① 환경보호(Environment), 사회공헌(Social), 윤리경영 (Governance)를 확보하기 위한 경영활동 및 관련 노력	5	
<b>합계</b>			<b>100</b>		

구분	평가항목	평가 고려사항	배점	
문체부 (23개)	혁신성 (60)	혁신활동의 우수성	① 신제품, 서비스 개발 등 기업주력 활동이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 부합 여부 ② 최근 3년간 신규사업 발굴, 신제품 개발 등 연구개발 투자 실적 ③ 기술개발 조직 및 개발인력 확보 현황 및 실적의 우수성	30
		기술의 우수성	① 핵심기술의 지식재산권 보유 정도 ② 핵심기술의 우위성(혁신성, 차별성, 모방난이도) ③ 진입장벽, 시장경쟁력, 산업적 중요성, 수출가능성 등	30
	성장 가능성 (40)	기업 자원 확보 노력	① 최근 3년간 매출액, 수출액, 영업이익률 등의 증가 현황 ② 인력, 시설, 장비, 네트워크 등 필요역량 확보방안의 적극성 ③ 인재 확보를 위한 고용창출 방안의 구체성 및 적정성	15
		성장 잠재력	① 최근 3년간 투자실적과 향후 투자 전략 ② 매출증대 및 시장 창출 방안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20
		지속 성장 가능성	① 환경보호(Environment), 사회공헌(Social), 윤리경영(Governance)를 확보하기 위한 경영활동 및 관련 노력	5
	<b>합계</b>			<b>100</b>
특허청	보유 기술 혁신성 (50)	지식재산권 역량	①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국내·외 출원등록 현황) ② 최근 3년간 연구개발 투자 현황 ③ 독보적 특허·선진기술 확보(보유 혹은 미래 확보 기술의 독창성(모방 난이도), 제품화 시 시장지배력) ④ 향후 핵심 특허·기술 획득 방안의 구체성과 타당성	30
		연구개발 역량	① 기술개발조직 및 개발인력의 우수성 ② 최근 3년간 연구개발 투자 현황	20
	향후 성장 가능성 (50)	기업 성장 추이	① 최근 3년간 매출액·수출액·영업이익률 등의 증가 여부	20
		최근 투자 실적과 필요 자원 및 역량 확보 방안의 적극성	① 최근 3년간 투자 실적과 향후 투자 전략 ② 성장을 위한 투자 요인과 투자확보 계획의 치밀성 및 타당성 ③ 인력, 시설, 장비, 네트워크 등 필요 역량 확보 방안의 적극성 ④ 자금 수요(대출, 보증, 투자) 및 시급성	15
		핵심 인재 확보 및 인재 육성 적극성	① 최근 3년간 고용 현황 ② 미래 핵심 인재 확보 및 고용 창출 방안의 구체성과 적극성 ③ 핵심 인재 유지방안의 구체성과 적극성	15
	<b>합계</b>			<b>100</b>
방사청	기술 개발 역량 (50)	연구개발 인프라	① 기술개발인력 확보 현황 ② 최근 3년간 연구개발 투자 현황	20
		연구개발 역량	① 보유기술의 우수성(보유 또는 미래 확보기술의 독보성(모방 난이도), 제품화 시 시장 지배력, 지식재산권 보유 등) ② 기술사업화 능력 ③ 향후 기술 발전전략의 구체성과 타당성	30
	향후 성장 가능성 (50)	기업 성장 추이	① 최근 3년간 매출액·수출액 등의 증가 여부 ② 최근 3년간 영업이익률 증가 여부	20
		성장 잠재력 및 자원 확보 노력성 (인적자원 확보 별도 평가)	① 최근 3년간 투자유치 등 자 확보 실적과 향후 자금 확보 전략의 치밀성 및 타당성 ② 인력, 시설, 장비, 네트워크 등 필요 역량 확보 방안·시장 점유 확대 방안의 타당성 및 적극성	20

구분		평가항목	평가 고려사항	배점
		핵심인재 확보 및 인재육성	① 핵심인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의 구체성과 적극성 ③ 핵심 인재 유지방안의 구체성과 적극성	20
<b>합계</b>				<b>100</b>
관세청	보유 기술 등 혁신성 (50)	연구개발 인프라	① 기술 개발 조직 및 개발 인력의 우수성 ② 최근 3년간 연구개발 투자 현황	20
		연구개발 역량	① 산업재산권 보유 현황(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②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성 ③ 향후 핵심기술 획득 방안의 구체성과 타당성	30
	미래 성장 가능성 (50)	기업 성장 추이	① 최근 3년간 매출액·수출액·영업이익률 등의 증가 여부	15
		최근 투자 실적과 필요 자원 및 역량 확보 방안의 적극성	① 최근 3년간 투자 실적과 향후 투자 전략 ② 성장을 위한 투자 요인과 투자확보 계획의 치밀성 및 타당성 ③ 인력, 시설, 장비, 네트워크 등 필요 역량 확보 방안의 적극성 ④ 자금 수요(대출, 보증, 투자) 및 시급성	20
		핵심인재 확보 및 인재육성 적극성	① 최근 3년간 고용 현황 ② 미래 핵심 인재 확보 및 고용 창출 방안의 구체성과 적극성 ③ 핵심 인재 유지방안의 구체성과 적극성	15
<b>합계</b>				<b>100</b>

## 별첨 5 글로벌 벤치마킹 및 한국형 모델 설계(안)

- 미국은 민간 중심 Search Fund가 자생 발전했으나, 한국은 정부 의존 구조임이며, 이에 정부의 마중물 역할을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ETA 모델 필요

  - 미국 실리콘밸리는 민간 자본과 시장의 자율성이 극대화된 생태계이며, Search Fund 모델 역시 스탠포드 대학을 중심으로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발전
  - 반면, 한국은 자본 시장의 성숙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이 정부 정책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
  - 따라서 한국형 모델은 미국과 달리 정부의 마중물 역할(보증, 데이터 개방)이 초기 생태계 조성에 필수
  - 본 플랫폼은 이러한 한국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미국의 ‘시장 중심 효율성’과 한국의 ‘정책적 지원 체계’를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모델로서, 글로벌 ETA 시장의 새로운 벤치마킹 사례가 될 잠재력 보유
- 미국 서치펀드 생태계의 성공 요인 분석

  - 1984년 스탠퍼드 경영대학원에서 시작된 서치펀드 모델의 투자자 수익률(IRR) 30% 이상 기록과 안정적·고수익 자산 클래스로의 자리매김, 그리고 세 가지 축에 의해 지탱되는 성공 생태계 구조
  - (전문 교육 및 인재 양성) 하버드, 스탠퍼드 등 주요 경영대학원은 ETA 전문 과정을 개설하여 예비 창업가들에게 딜 소싱, 기업 가치평가, 실사, 협상 등 실무 교육을 제공
    - 이는 준비된 경영자(Prepared Searcher)를 양성하여 인수 후 실패 확률을 낮추는 핵심 기제
  - (구조화된 자금 조달 (Equity) 서치펀드는 탐색 단계(Search Capital)와 인수 단계(Acquisition Capital)로 나뉘어 자금을 조달
    - 투자자들은 소액의 탐색 자금을 먼저 투자하여 창업가의 역량을 검증한 뒤, 적절한 매물이 발견되면 본격적인 인수 자금을 집행하는 단계적 투자 방식
  - (인수 금융 지원(Debt) - SBA 7(a) Loan)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미국 중소기업청(SBA)의 7(a) 대출 프로그램
    - 이 프로그램은 ‘사업 인수(Business Acquisition)’를 대출의 합법적 용도로 명시하고, 최대 500만 달러까지 정부가 75~85%를 보증

- 특히 10년에서 최대 25년에 이르는 장기 상환 기간을 제공하여, 인수자가 회사의 현금 흐름(Cash Flow)으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구조
- 이는 자산 담보가 부족한 개인 창업가가 기업을 인수할 수 있게 하는 결정적인 금융 인프라

□ 한국형 ETA 모델의 차별화 및 보완 전략

- 미국의 모델을 한국에 그대로 이식하기에는 금융 관행과 시장 환경의 차이가 존재하여 한국형 모델은 다음과 같은 수정 및 보완이 필요

〈별첨 표 5-1〉 단계별 주요내용

구분	미국모델 (Search Fund)	한국형 제안 모델 (K-ETA Platform)	차별화 전략 및 근거
딜 소싱	브로커 중심, BizBuySell 등	AI 기반 자동 매칭 + 지역 거점(TP/CCEI) 활용	정보 비대칭이 심하고 폐쇄적인 한국 시장 특성상 시를 통한 데이터 분석과 지역 네트워크의 결합이 필수적
자금 조달	민간 서치펀드 + SBA 7(a)	프로젝트 펀드 + K-보증 패키지	프로젝트 펀드 조성 과 기보/신보의 특례 보증을 결합하여 한국적 인수 금융 구조 설계.
기술 접목	경영 효율화 중심 (Roll-up)	기술 융합형 가치 제고 (Tech Value-up)	단순 경영 개선을 넘어, NTB의 공공 기술을 이전받아 제조 기업을 첨단화하는 '기술 기반 PMI' 전략 추구
교육	MBA 중심 엘리트 교육	실전형 부트캠프 및 자격 인증제	창업중심대학 및 민간 플랫폼과 연계하여 실무 중심의 단기 집중 교육(Bootcamp)을 제공하고 '인증 창업가' 제도를 도입하여 신뢰도 제고.

## 별첨 6 K-ETA(인수창업) 실증 사례집 : 유형별 성과 및 시사점

### □ 사회적 승계 및 고령 창업주 후자 폐업 방지 사례

- (핵심 가치) 후계자가 없는 고령 창업주의 노하우를 젊은 혁신가에게 전수하여 지역 경제 및 일자리 보존

#### [사례 1] 전통 제조업의 IT 기반 공정 혁신

- 매도자 : 경기도 화성 소재 페페인트 재가공 수출 기업(60대 대표, 후계자 부재)
- 인수자 : 서울 거주 대기업 IT 부서 직장인(15년 차)
- 인수 동기 : 고령으로 인한 체력적 한계 및 가업 승계 불가로 폐업 위기였으나, 대표 커리어를 꿈꾸던 IT 전문가가 인수
- 시너지 : 전통 제조업의 외국인 근로자 중심 운영 구조에 인수자의 IT 역량을 접목, 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통한 수익성 제고

#### [사례 2] 2세대 승계 위기 기업의 경영 전문화

- 매도자 : 아버지로부터 승계 받은 중식 소스 제조사 대표(30대, 가족 건강 문제로 긴급 매각)
- 인수자 : 해외 기업 한국 진출 지원 컨설팅 경험이 있는 청년 창업가(20대)
- 시너지 : 기존의 안정적인 제조 레시피와 거래처에 인수자의 글로벌 마케팅 및 사업 확장 역량을 결합하여 매출 구조 고도화

### □ 기술 결합 및 산업 고도화(Value-up) 사례

- (핵심 가치) 이중 산업 간 결합 및 신기술 이식을 통한 기업 가치(Multiplier)의 비약적 상승

#### [사례 3] 헬스케어 기술과 뷰티 브랜드의 융합

- 매도자 : 자체 설비와 8만 건의 리뷰를 보유한 천연 입욕제 제조 전문 기업
- 인수자 : 국내 최대 피부과 네트워크 기반 코스메틱 법인
- 시너지 : 인수자의 피부 임상 데이터 및 바이오 기술을 매도자의 제조 레시피에 접목하여 제품을 프리미엄화하고, 전 세계 피부과 네트워크를 통해 유통망을 즉시 확장

#### [사례 4] 첨단 보안 기술의 농업 시장 이식

- 매도자 : 20대 대표가 창업한 농업 문제 해결 솔루션 스타트업
- 인수자 : 상장을 앞둔 차량 통합 보안 솔루션 전문 기업
- 시너지 : 매도인의 스마트팩토리 기술에 매수인의 사이버보안 역량을 더해 농기계 및 특수 모빌리티 영역으로 사업을 다각화, 고부가가치 모델로의 전환 성공

□ 플랫폼 기반 정밀 매칭 및 운영 효율화 사례

- (핵심 가치) 파편화된 정보를 디지털 플랫폼으로 통합하여 탐색 비용 절감 및 최적의 파트너 발견

[사례 5] 금융권 전문가의 커머스 에그리케이팅

- 매도자 : 대구 지역 다수 온라인 커머스 운영자(운영 과부하로 폐업 고려)
- 인수자 : 여의도 금융권 종사자(가족 사업 및 신규 법인 운영 목적)
- 시너지 : 폐업 직전의 다수 사업체를 플랫폼을 통해 발견 및 인수. 구조적으로 동일한 운영 영역을 통합 관리하여 운영 효율 극대화 및 규모의 경제실현

[사례 6] 브랜드 성장의 한계를 넘는 조직적 인수

- 매도자 : 웰니스 식품 브랜드를 운영하는 이커머스 창업자(운전자금 및 관리 역량 한계)
- 인수자 : 국내 브랜드를 글로벌 시장에 진출시키는 마케팅 전문 기업
- 시너지 : 창업가 개인의 매니지먼트 한계를 인수사의 체계적인 HR·마케팅 조직력으로 보완하여 브랜드 글로벌 확장 가속화

□ 인수 금융 및 자금 조달 혁신 사례

- (핵심 가치) 담보 부족 문제를 금융권 연계 및 구조화 금융을 통해 해결한 ETA 모델

[사례 7] 서치펀드 모델의 은행권 100% 조달

- 매도자 : 오랜 사업 운영으로 피로도를 느낀 심리상담센터 운영자
- 인수자 : AI 기술 도입을 목표로 하는 서치펀드 성격의 개인 인수자
- 자금조달 : 인수를 위한 자금을 은행권 대출을 통해 100% 조달하여 성사. 창업자의 역량과 비즈니스 지속 가능성을 금융권에서 인정받은 선도 사례

[사례 8] 정책 금융 및 시중 은행 패키지 연계

- 매도자 : 여러 사업 병행으로 집중도가 분산된 의류 스마트스토어 운영자
- 인수자 : 제조업 종사 중이던 청년 창업가
- 자금조달 : 플랫폼과 협업 중인 시중 은행의 인수 금융 시스템을 즉시 연계하여 자기자본이 부족한 청년의 인수 성공 지원

### 주 의

1. 이 보고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수탁을 받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수행한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민간 기술혁신 활성화 방안 기획 연구”과제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수행한 연구성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됩니다.